수시과제 2017-02

해양문화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Marine Cultural Policy

2017. 09.

홍장원 · 윤인주 · 최일선 · 이정아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홍 장 원 : 제1, 4, 5장

〈연구진〉
윤 인 주 : 제2, 5장
최 일 선 : 제3장 1 · 3절, 5장
이 정 아 : 제3장 2절, 5장
김 효 정 : 제3장 1절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양 위 주 (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김 혜 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황 희 정 (인천발전연구원)

* 연구자문위원은 산·학·연·정 순임

연구감리자

목 진 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발간사

해양문화는 한 국가의 해양정책 수립과 해양경제 전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토대로 작용한다. 해양정책에는 해양에 관한 인식이 묻어나며 해양인식은 오랜 해양문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국의 해양인식 또는 해양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다.

물론, 해양정책은 해양산업 또는 해양경제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자원, 영토, 환경, 과학기술, 안전, 교육 등 국민생활 전반을 포괄한다. 해양자원 개발, 해양영토 확보, 해양환경 보호, 해양과학기술 활용, 해양안전사고 예방 등 해양정책에서 다루는 이슈 대부분은 국민의 해양인식에 따라 그 양상이 달리 전개될 수 있다. 대체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의 해양문화와 국민생활 속의 친수문화가 발달한 국가가 해양 분야에서도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는 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 적극적인 해상교류에 참여했으나 조선시대 및 일제 강점기, 6·25전쟁과 분단 상황을 거치면서 국민 정서 속에 바다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유교 문화와 정치적 사건, 물리적 단절의 영향으로 해양에 대한 정서적 이격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양문화는 주로 역사적 인물의 활동이나 연안·도서지역의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적인 혹은 국민생활 속의 해양문화는 그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해양 교육의 내실화와 해양문화 확산'을 중점 목표로 하고 해양문화 장기 정책방향을 모색 중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러한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주요 정책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국내 해양문화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문화정책 전반의 동향을 분석했다. 문화정책과 비교할 때 해양문화정책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도 점검했다. 또한 해양문화가 활성화된 영국과 일본의 사례도 조사해보았다. 무엇보다 문화정책 관련 전문가들과 해양문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방향은 물론 주요 정책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해양문화의 정책 추진 필요성과 방향성에 일조하기를 기원하며, 이 연구에 힘써 준 연구책임자와 원내외 연구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양 창 호**

목 차

❖

요 약 · i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 범위 ····· 3
2. 연구 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5

1. 선행연구 현황 ····· 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6

제2장

해양문화에 대한 개념과 인식 · 7

제1절 기존연구에 나타난 해양문화 ····· 7

1. 해양문화 연구 동향 개요 ····· 7
2. 역사·유산 관련 연구 ····· 8
3. 인문학 관련 연구 ····· 11
4. 생태 관련 연구 ····· 12

5. 관광 관련 연구 ····· 13
6. 인식·정책 관련 연구 ····· 14
7. 종합 정리 및 키워드 도출 ····· 18

제2절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 ····· 20
1. 조사개요 ····· 21
2. 조사결과 ····· 22
3. 시사점 ····· 41

제3절 해양문화 개념 구축 ····· 42

제3장

문화정책 및 해양문화 정책 동향과 사례 • 45

제1절 우리나라 문화정책 추진 동향 ····· 45
1. 문화정책 추진경과 ····· 45
2. 주요 문화정책 동향 ····· 47
3. 소결 ····· 69

제2절 우리나라 해양문화 정책 추진 동향 ····· 70
1. 해양문화 정책 추진 경과 ····· 70
2.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 ····· 83
3. 소결 ····· 87

제3절 국외 해양문화 정책 사례 ····· 90
1. 영국의 해양문화 정책 ····· 90
2. 일본의 해양문화 정책 ····· 95
3. 소결 ····· 100

제4장

해양문화 정책 추진 방향 · 102

제1절 기본방향 ····· 102

제2절 주요 추진 과제 ····· 104

1. 정책목표와 정책과제 ····· 104

2. 정책과제별 추진방향 ····· 105

제3절 법제도적 기반 구축 ····· 110

1. 해양문화 정책 추진 로드맵 구축 방향 ····· 110

2. 제도적 지원방안의 마련 ····· 112

제5장

결론 · 114

❖

참고문헌 · 118

❖

부록 · 122

표목차

〈표 1-1〉 선행연구와 차이점 비교 ····· 5

〈표 2-1〉 역사·유산 관련 해양문화 개념에 대한 접근 ····· 10
〈표 2-2〉 인문학 관련 해양문화 개념에 대한 접근 ····· 12
〈표 2-3〉 생태 관련 해양문화 개념에 대한 접근 ····· 13
〈표 2-4〉 관광 관련 해양문화 개념에 대한 접근 ····· 14
〈표 2-5〉 인식·정책 관련 해양문화 개념에 대한 접근 ····· 17
〈표 2-6〉 해양문화 인식에 대한 조사개요 ····· 21
〈표 2-7〉 '해양문화' 에 대한 이미지 종류 ····· 22
〈표 2-8〉 '해양문화'에 대한 이미지 (단어) 세부 ····· 23
〈표 2-9〉 '해양문화'에 대한 이미지(개념) 세부 ····· 24
〈표 2-10〉 '해양문화'에 대한 이미지(단어) 종합 ····· 24
〈표 2-11〉 해양문화 정책 영역의 당위성 평가를 위한 구분과 설명 ····· 29
〈표 2-12〉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04~2010) 중 해양문화 관련 추진과제 ····· 32
〈표 2-13〉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 중 해양문화 관련 추진과제 ····· 34
〈표 2-14〉 국내 해양문화 정책 평가를 위한 구분과 설명 ····· 35
〈표 2-15〉 해양수산부가 추진할 해양문화 정책의 세부과제 평가를 위한 구분 ····· 36
〈표 2-16〉 해양문화 정책 세부과제 전문가 제안 의견 ····· 38

〈표 3-1〉 문화복지개념 ····· 48
〈표 3-2〉 문화소외계층의 정의 ····· 49
〈표 3-3〉 문화복지정책의 흐름 ····· 50
〈표 3-4〉 계층별 문화복지정책 방향 ····· 50
〈표 3-5〉 생애주기별 문화복지정책 및 사업 ····· 51
〈표 3-6〉 생활문화관련 법적기반(「지역문화진흥법」) ····· 52
〈표 3-7〉 문화융성-생활 속 문화확산 ····· 53
〈표 3-8〉 박근혜정부의 생활문화관련 정책 ····· 53
〈표 3-9〉 문화시설의 정의 ····· 55
〈표 3-10〉 문화시설 법적 분류 ····· 56
〈표 3-11〉 문화시설 공급기준(문화체육관광부) ····· 58
〈표 3-12〉 문화시설 공급(배치)안 ····· 58
〈표 3-13〉 지역거점문화도시 사업추진현황 ····· 59

〈표 3-14〉 문화도시 법적기반(「지역문화진흥법」) 60
〈표 3-15〉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현황(2016) 61
〈표 3-16〉 도시재생 길라잡이(Ver1.0)에 나타난 문화연계 기법 62
〈표 3-18〉 문화융성-인문가치 정립 및 확산 66
〈표 3-19〉 2017년 문화체육부 한스타일 육성지원 사업 67
〈표 3-20〉 대한민국, K-ART 발전전략 69
〈표 3-21〉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연동계획의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72
〈표 3-22〉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연동계획) 중 해양문화 관련 추진과제 74
〈표 3-23〉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연동계획) 추진과제의 세부내용 74
〈표 3-24〉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76
〈표 3-25〉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실천과제 77
〈표 3-26〉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실천과제의 세부내용 78
〈표 3-27〉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해양문화 관련 세부내용의 연계성 79
〈표 3-28〉 제1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80
〈표 3-29〉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의 전략과제 및 추진과제 81
〈표 3-30〉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의 내용 82
〈표 3-31〉 한국해양재단 사업 영역 84
〈표 3-32〉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업 영역 86
〈표 3-33〉 제1·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구성 및 연혁 88

〈표 4-1〉 해양문화 친숙화 주요 내용 106
〈표 4-2〉 해양문화 대중화 주요 내용 108
〈표 4-3〉 해양문화 산업화 주요 내용 109
〈표 4-4〉 해양문화정책 추진 제도적 개선안 113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 4

〈그림 2-1〉 해양문화 관련 선행연구 분석 절차 ····· 8
〈그림 2-2〉 해양문화 기존연구의 키워드 및 범주 ····· 20
〈그림 2-3〉 '해양문화' 에 대한 이미지 여부 ····· 22
〈그림 2-4〉 '해양문화' 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되는 것이 없는 이유 ····· 25
〈그림 2-5〉 역사학·인류학 외 학문분야에서 해양문화에 대한 관심 부족 ····· 25
〈그림 2-6〉 국내 문화산업에서 해양 관련 비중 ····· 26
〈그림 2-7〉 국내 문화산업에서 해양 소재 비중이 낮은 이유 ····· 27
〈그림 2-8〉 '전통문화계승'에 비해 '문화이용·활성화'에 대한 관심 부족 ····· 27
〈그림 2-9〉 해양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 ····· 28
〈그림 2-10〉 해양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하는 이유 ····· 29
〈그림 2-11〉 해양문화 정책 영역의 당위성 ····· 30
〈그림 2-12〉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04~2010)의 해양문화 육성 기여도 ····· 33
〈그림 2-13〉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의 해양문화 육성 기여도 ····· 34
〈그림 2-14〉 국내 해양문화 정책의 발전 수준 ····· 36
〈그림 2-15〉 해양수산부가 추진할 해양문화 정책 세부과제의 필요성 ····· 37
〈그림 2-16〉 해양문화의 개념 구축방향 ····· 44

〈그림 3-1〉 문화정책 흐름 총괄 ····· 46
〈그림 3-2〉 문화복지정책 흐름도 ····· 48
〈그림 3-3〉 지역문화진흥정책 흐름도 ····· 54
〈그림 3-4〉 문화시설설치현황 ····· 57
〈그림 3-5〉 사업추진 절차(문화도시형) ····· 61
〈그림 3-6〉 국격제고를 위한 정책 흐름 ····· 63
〈그림 3-7〉 한국해양재단 사업 프로그램 ····· 85
〈그림 3-8〉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업 프로그램 ····· 87
〈그림 3-9〉 스코틀랜드 드럼베그 역사적 해양 보호 지역 관련 정보 제공 ····· 92
〈그림 3-10〉 영국 해양문화시설 ····· 93
〈그림 3-11〉 일본 해양문화 관련 시설 ····· 98
〈그림 3-12〉 일본 초등학교 해양교육 개념도 ····· 99

〈그림 4-1〉 해양문화 정책의 기본방향 ····· 103
〈그림 4-2〉 해양문화 정책의 정책목표와 정책과제(안) ····· 105
〈그림 4-3〉 해양문화 정책과제의 추진 방향 ····· 111

요 약

1.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해양문화를 기존 역사적 유산 중심으로 접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양문화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을 구축하고 해양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도출하는데 있음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표〉 본 연구 방법의 특징

특징	주요 내용	자료수집	방법론 선택 이유
문헌 및 정책 사례 분석	- 해양문화의 개념 파악 - 국내 문화정책 추진 동향 분석 - 국내 해양문화 추진 경과	- 관련 문헌조사 - 국내 정책 사례조사	- 해양문화와 관련된 학술 연구 자료를 검토하여 해양문화에 대한 개념을 분석 - 국내 문화정책과 해양문화 정책에 대한 추진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해양문화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해외사례 분석	- 국외 해양문화 사례 분석	- 영국 - 일본 사례분석	- 해양문화의 보급 및 해양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외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전문가 의견조사	- 해양문화에 대한 전문가 인식 파악 - 해양문화정책에 대한 평가	- 분야별 전문가 설문조사	- 국내 해양문화 전문가와 문화정책 전문가의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 및 기존 정책 사업에 대해 평가 - 해양문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 구축 및 해양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해양문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해양문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해양문화 및 문화정책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를 통하여 해양문화의 개념과 기존 해양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해양문화 정책과 비교·평가하면서 해양문화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밝혔음
- 해양문화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정책목표와 정책과제, 정책과제별 추진 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해양문화 정책의 수정·보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양문화 관련 정책은 해양문화와 해양의식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여건이 미흡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해양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 및 이벤트 개최 중심의 정책 사업에 집중해왔음
- 하지만 해양문화 정책 수립의 궁극적인 목적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방향이 수립되지 못하였고, 해양문화에 대한 육성배경과 해양문화 소비 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비판적 사고는 부족했음

○ 현재는 해양문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영역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 전문가 조사 등을 토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해양문화에 대한 현대적 개념을 정의하였음
- 해양문화란 해양을 이용하고 보호하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과 유산을 활용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 규범, 삶의 양태 등으로 정의하였음
- 이러한 정의는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로부터 전해온 전통과 유산의 보존·계승이 해양문화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한 것임

○ 국내 문화정책과 해양문화정책에 대한 추진 동향을 비교·분석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존 정책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국내 해양문화 정책이 일반적인 문화정책의 변천과정과 비교할 때, 기반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이나 문화유산의 보존·계승에 초점을 맞춘 1980~1990년대와 유사하다고 평가하였음
- 또한 전문가들은 시설 구축보다는 친해양문화를 위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세부과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해양문화정책의 청사진과 로드맵 구축, 해양문화자원 조사·분류 및 DB 구축, 해양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해양문화 정책은 해양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해양문화 접근성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함
- 이에 정책목표는 “국민에게 친숙한 바다만들기와 해양인식·가치제고”로 설정하고 해양문화의 보급을 통한 대중화와 산업화 유도를 제안함
- 해양문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해양문화의 친숙화, 대중화, 산업화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략과 추진과제를 각각 제안하고 정책 추진 로드맵 및 방향을 제시함
- 해양문화 정책의 추진 로드맵은 우선 해양친수문화 확보를 위한 홍보 및 기반사업을 초기에 추진하고 이러한 홍보를 토대로 해양문화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확보된 후에 해양문화공간 조성 및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산업화를 이루도록 설정함

○ 해양문화정책의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할 정책 제언을 제시함
- 첫째, 기존 문화정책의 틀에서 해양문화 정책을 포괄하도록 부처 간 협력 체계를 이루는 방안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문화 정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둘째,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우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양문화의 창달(제34조)’이라는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셋째, 해양문화의 육성과 해양관광의 발전이 친수문화 확산이라는 정책의 연계선상에 있다는 측면에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상에 해양관광정책과 연계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넷째, 해양문화정책의 추진을 위한 조직 정비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지원도 법안정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적 기여

○ 해양수산부는 “해양 르네상스 실현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수산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그 일환으로 해양문화 확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계획 수립 및 대안 마련에 활용 가능

○ 본 연구는 해양문화를 역사적 유산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해양문화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를 통해 기존 해양문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3) 기대효과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해양문화에 대한 현대적 정의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해양문화와 관련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 국내 해양문화의 대중적 수요 창출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 여건 마련 정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해양의 산업적, 환경적, 휴양적 가치 등을 국민이 인식하게 하여 해양의 정책적 중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향후 정부의 해양문화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기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문화정책은 국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문화유산의 보전에서 전통문화의 발굴, 생활문화의 보급 등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 발전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정책 영역에서 해양이라는 공간 혹은 자원을 대상으로 이를 육성하거나 소비하도록 하는 정책은 과거부터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해양문화나 해양문화정책이 다양하지 못한 것은 해양 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고 해양을 소재로 한 문화에 대한 수요가 풍부하지 못했던 데 원인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6년 '해양 르네상스 실현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비전과 함께 해양 르네상스 원년을 선포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정책 기조에 따라 해양 르네상스를 구현하기 위해 해양력(海洋力)을 강화하고 해양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내에 해양문화, 해양교육, 해양역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해양르네상스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양문화와 해양의식이 사회 곳곳에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한편, 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함께 해양문화를 보급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정부조직 개편 및 해양수산부의 정책 목표와 맞물려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해양수산부는 1996년 신설된 이래 2008년 폐지되었다가, 2013년 재출범하는 등 조직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특히, 2008년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이후 재출범할 때까지 해양문화와 관련된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주무부처

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해양역사의 발굴이나 문화탐방을 위한 사업들이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 민간단체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추진되면서 해양문화를 대중에게 체계적으로 전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시기 해양문화정책은 장보고 재조명 사업과 해양역사 유적지에 대한 탐방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장보고 사업은 해양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국민의 해양의식을 고취하고 해양개척정신을 확산시킨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국가 문화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적 향유나 지역문화 발굴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해양문화의 소비확산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도 마련되지 못했다.

이후 2013년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해양문화 육성 정책도 전기를 맞이했다.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에 포함되었던 해양문화 관련 정책이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으로 연계되면서 해양문화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정책 사업도 다양해졌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해양 르네상스 원년 선포, 해양르네상스 위원회 기능 보완, 해양문화 기관 역량 강화, 해양문화 체험지도 제작과 해양영토대장정 등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과 청주 해양과학관 건립, 해양수산전시관 네트워크 활성화,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등 해양문화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해양문화 관련 정책은 해양문화와 해양의식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여건이 미흡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해양문화의 진흥을 위한 수단인 인프라 구축과 각종 축제 및 이벤트 개최 중심의 정책 사업에 집중해 왔다. 이는 '무엇을', '어떻게', '왜' 진흥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노정한다.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해양문화정책의 추진 목적과 추진체계에 대한 정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문화에 대한 육성 배경과 해양문화 소비 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비판적 사고가 부족했던 경향이 있다.

해양문화는 해양과 관련한 물질·정신적 과정의 산물로서 역사, 민속, 문학 및 예술뿐만 아니라 해양레저관광, 생태환경 등 다양한 하위 범주가 존재하고 공간개발 및 산업 육성, 관련 법·제도 수립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해양문화에 대

한 개념의 정립과 중요성,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해양문화정책 추진과 해양문화 수요 확산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조직적 지원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해양문화를 역사적 유산 중심으로 접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양문화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 동안 해양문화에 대한 정책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채 관련 정책이 추진된 결과, 체계성과 연속성이 부족하고 문화의 시대적 수요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적 효과성이 높지 않고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 또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술 연구자료 검토 및 전문가 인식 조사를 통해 해양문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해양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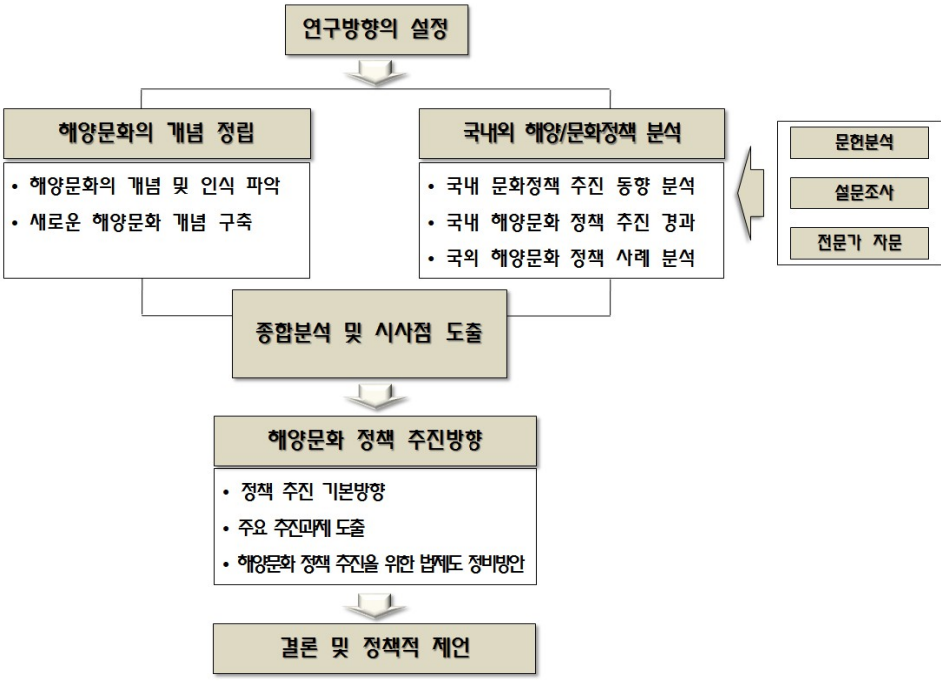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조사·통계자료 수집의 경우 2016년을, 인식조사는 2017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한다. 공간적 범위로는 국내외 해양문화 정책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해양문화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해양문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추진방향을 설정하여 해양문화 육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법제도 기반 구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위하여 국내 해양문화 전문가 및 문화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국내 문화정책과의 비교 및 국내외 해양문화 정책을 조사한다.

2. 연구 방법

해양문화 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양문화의 개념 설정과 국내외 해양문화 및 문화에 관한 정책 사례 분석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에서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학술 연구자료를 검토하여 해양문화에 대한 기존 개념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해양문화 전문가와 문화정책 전문가의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 및 기존 정책사업에 대해 평가한다. 전문가의견조사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문화의 개념을 도출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문화정책 및 국내외 해양문화의 정책화 과정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토대로 해양문화 정책 추진 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 법·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현황

우리나라에서 해양문화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해양역사 또는 유산과 관련하여 해양문화 보존 및 활용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사라져가는 전통해양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그 보존 가치와 계승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해양문화의 활용과 관련한 연구는 관광에 초점을 맞추어 해양문화자원을 콘텐츠화 하고 이를 해양관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연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서문화나 역사적 인물을 다루어 우리나라 전반의 해양문화에 대한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기존 해양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나 해양문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즉, 해양문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해양문화의 일부만을 다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역사, 전통, 관광, 환경 등 특정 분야에 제한되지 않는 폭넓은 해양문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 고찰과 우리나라 해양문화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1〉 선행연구와 차이점 비교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연구명: 역사와 해양의식-해양의식의 체계적 함양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이동근 외 (2003) - 연구목적: 21세기가 요구하는 해양의식을 도출하고 함양방안을 제시	-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 전문가 자문 및 집필 - 국외 사례조사	- 바다의 속성과 해양의식 - 동서양의 해양활동 - 우리나라의 해양활동과 문화 - 해양의식 관련 정책과 교육 - 외국의 해양의식 고취 사례 - 해양의식 함양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2	- 연구명: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이원갑 외 (2010) - 연구목적: 우리나라 해양문화자원의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콘텐츠화 방안 제시	-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 국내 사례조사 - 해양문화자원 실태조사 - 공무원,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 문화관광과 문화콘텐츠 - 우리나라의 해양문화와 관광개발 - 해양문화콘텐츠의 활용방안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3	- 연구명: 해양문화자원의 발굴·계승 및 활용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주강현 외 (2015) - 연구목적: 해양문화자원의 현황과 활용 방안을 조사하고 관리 및 개발 방안 제시	-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 국내 외 사례조사 - 해양문화자원 실태조사	- 오션헤리테지의 개념과 범주 - 오션헤리테지의 현황과 개발방향 - 오션헤리테지의 실체와 활용방안 - 오션헤리테지를 통한 해양르네상스 구현
본 연구		- 해양문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 구축 시도 - 해양문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 제시	- 선행연구 분석 - 전문가 설문 - 정책 및 통계 자료 분석	- 해양문화에 대한 기존 인식 조사 -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조사 - 해양문화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성과, 문제점, 시사점)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해양문화에 대한 기존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해양문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양문화 및 문화정책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를 통하여 해양문화의 개념과 기존 해양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문화정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해양문화 정책과 비교·평가하면서 해양문화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 해양문화 정책이 나아가야할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장 해양문화에 대한 개념과 인식

제1절 기존연구에 나타난 해양문화

1. 해양문화 연구 동향 개요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에 비추어볼 때 해양문화는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해양문화는 '해양'이라는 공간 또는 대상과 관련한 각종 다양한 분과의 산물을 아우른다. 역사, 민속, 지리, 생태·환경, 인문(언어, 철학, 종교, 문학, 예술), 정치·군사·안보, 경제(어로·수산, 조선, 항해, 무역, 관광), 건축, 음식 등 각 분야에 관련한 의식, 인식, 양식, 물질에 관한 내용이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해양문화라는 것이 단일한 학제, 학과, 전공으로 연구되지 않았고 연구되기도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급적 포괄적 범위의 해양문화 전반에 관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로 했다. '해양문화'라는 검색어를 이용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에 등록된 논문, 검색엔진 학술정보에 등록된 논문·보고서·발표자료, 정부 부처에서 발주하고 전문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물 등을 수집했다. 특정 분과 혹은 특정 지역에 관한 연구라도 단순 의미 해석이 아니라 해양문화에 대한 개념을 검토한 경우에는 포함시켰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간추린 22개 연구가 강조하고 있는 연구내용을 주제별로 그룹핑하고 각 연구가 해양문화 개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정리했다. 주제 구분은 역사·유산, 인문, 생태, 관광, 인식·정책이다. 주로 역사·유산 측면의 접근이 많았지만 해양문화의 보급이나 역할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도 있었다.

〈그림 2-1〉 해양문화 관련 선행연구 분석 절차

2. 역사·유산 관련 연구[1)]

역사·유산과 관련하여 해양문화 개념에 접근한 대표적인 연구는 이동근 외(2003)이다. 이동근 외는 역사적인 해양활동을 바탕으로 해양의식과 해양문화에 접근했다. 해양의식과 해양문화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고 상호관계를 규정한다고 보았다. 경우에 따라 양자를 동의어로 볼 수도 있을 정도이므로 해양문화를 통해 해양의식을 규명하고자 했다. 해양문화는 "바다를 통해 나타나는 관습이나 제도 또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지식의 체계"로서 "바다를 주된 활동무대로 해서 살아가는 바다사람들이 남겨 온 모든 삶의 흔적"이라고 보았다. 해양문화는 어로생활, 해상교통, 해상무역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므로 선박문화, 항해문화, 전래문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민말순(2007)은 해양문화를 말할 때 문화란 일상생활의 양식으로서 관습·규범·물질적 재화·기술 등으로 확대되는 생존의 장치라고 보았다. 남해안 일대에서의 이순신 및 임진왜란 관련 전쟁·인물·생활상을 알리고 관련 유적의 정비·복원 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1) 역사·유산 관련 연구는 해양문명사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연구 편수도 많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역사적 의미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해양문화의 개념을 정리하지 않은 연구는 제외했다.
시간적으로는 예컨대 "동북아 연해의 문화 교류와 해양문화의 거시적 변천과정에 관한 소고",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2002); "동해교류를 통해 본 고구려와 발해의 해양문화", 『고구려발해연구』, 제312권(2008); "선진시기의 해양문화인식",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2013) 등이다.
공간적으로는 예컨대 "'목포권' 도서해양문화의 창조적 재인식", 『도서문화』, 제37집(2011); "새만금해역의 해양문화와 문물교류", 『도서문화』, 제39집(2012); "'탐라'와 '제주'의 해양문명사 성찰", 『탐라문화』, 제42호(2013); "제주도 해양문화 전통의 단절과 계승", 『탐라문화』, 제42호(2013) 등이다.

강봉룡 외(2007)는 해양문화를 도서문화 관점에서 접근했다. 신라 삼국통일 이래 해양사에 나타난 도서문화를 비롯해 도서 지역의 공간변화를 분석했다. 해양문화의 관광자원화 방안으로 임자도, 생일도, 흑산도의 문화유산 활용을 제안했다.

곽유석(2007)은 섬과 연안에 남아 있는 선조들의 해양활동 흔적을 찾고 복원하여 교육문화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해양력(海洋力)과 해양역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뿐 아니라 관광자원이 되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특히 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재에 주는 의미를 찾는 것이 문화유산 활용에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시훈(2010a, 2010b, 2010c, 2013)은 프랑스의 선행연구, 박물관, 축제 등을 토대로 해양문화유산에 접근했다. 프랑스가 최초로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진 국가인 만큼 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도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페이르 슈미트(Pierre Schimit)와 나탈리 르마르샹(Nathalie Memarchand)에 따르면 해양유산이란 "멀거나 가까운 과거에 해양자원·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된 인간 활동과 결부된 유무형의 요소들의 총체를 포함"한다.[2] 해양문화유산의 개념은 해양산업 및 활동에 큰 변화가 일어난 20세기 중반, 특히 1980년 이후로 출현했다.[3] 전통적으로 해양문화유산은 수중문화유산에 한정되어 있다가 최근 연안과 하천의 범위를 포괄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해양문화유산의 정의는 유산의 위치가 아니라 해양성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기 때문이다.[4]

그가 해양문화유산의 정의와 분류에 있어서 지적한 문제점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해양문화 개념 구축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5] 첫째, 해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개념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경계가 모호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류의 생활무대가 대부분 물보다는 뭍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해양의 것은 육지의 것과 겹치거나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처럼 모호하고 중첩적인 해양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분류를 다루기가 쉽지는 않다.

---

2) Pierre Schmit et Nathalie Lemarchand(2005), p.1.
3) Philippe Jarnoux(2002), pp. 203-204
4) 노시훈(2013), pp. 195~198.
5) 위의 글, p. 194.

주강현 외(2015)는 해양문화가 “해양을 둘러싼 자연과 인간 간의 문화현상을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해양문화의 하위 범주로는 해양역사, 해양민속, 수중고고, 해양문학 및 예술, 해양레저스포츠, 해양관광, 해양환경 등을 구분했다. 해양과학을 비롯해 해양식물, 해양동물, 해양생태 등의 개념은 있지만 해양문화는 국내에서 아직 초보적인 발아단계라는 점을 지적했다. 해양문화라는 큰 범주의 하위 개념으로서 유무형유산을 지칭하는 오션헤리티지(Ocean Heritage)를 구분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표 2-1〉 역사·유산 관련 해양문화 개념에 대한 접근

연구명	연구자 (연구연도)	해양문화에 대한 설명
역사와 해양의식 : 해양의식의 체계적 함양방안 연구	이동근 외 (2003)	- 바다를 통해 나타나는 관습·제도·지식 체계 - 바다사람들이 남겨온 모든 삶의 흔적
남해안시대의 해양문화 정책과 협력방안 : 이순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민말순 (2007)	- 일상생활의 양식으로 관습·규범·물질적 재화·기술 등으로 확대 - 생존 장치
해양사와 해양문화	강봉룡 외 (2007)	- 해양사를 바탕으로 한 도서 문화를 포괄
다도해 해양문화유산의 복원과 활용 : 흑산도 사례 연구	곽유석 (2008)	- 섬과 연안에 남아 있는 선조들의 해양활동 흔적
여수지역 해양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노시훈 (2010a)	- (해양문화유산) 멀거나 가까운 과거에 해양자원·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된 인간 활동과 결부된 유무형의 요소들의 총체
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 프랑스 대서양 연안 지방의 해양박물관을 중심으로	노시훈 (2010b)	
해양문화유산의 정의와 분류의 문제	노시훈 (2010c)	
해양축제와 해양문화유산 : 프랑스 해양축제를 중심으로	노시훈 (2013)	
해양문화자원의 발굴·계승 및 활용방안 연구	주강현 외 (2015)	- 해양을 둘러싼 자연과 인간 간의 문화현상을 총체적으로 망라

3. 인문학 관련 연구

인문학 관련 연구는 주로 인류학을 비롯해 철학, 문학 측면에서 해양문화에 접근한 것을 말한다.

홍석준(2005)은 해양문화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음을 지적했다. 해양문화는 해양 고유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독자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해양세계의 문화'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육지문화와 대비되는 문화" 개념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생태학적으로는 "해양을 무대로 생산·유통·소비되는 문화"를 통틀어 설명될 수도 있다. 그는 문화관광부(2004)의 이론적 틀을 원용하여 해양문화에는 해양예술, 해양자원, 해양경제·산업, 해양교육·정보 등의 차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양생활에서 축적된 '해양에 관한 지식체계'를 찾아내어 문화적으로 복원하는 인류학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홍석준(2009)은 도서와 해양을 엮은 '도서·해양 문화'의 개념이 인류학의 주요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도서·해양 문화는 "섬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방식,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에의 적응이라는 가치와 규범"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양문화의 인류학은 섬과 바다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그는 해양인류학의 관점에서 해양문화 연구의 한계를 지적했다.[6] 첫째, 해양인류학의 연구대상은 어민사회인데 실제로는 어로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상공간보다 사회활동이 영위되는 육상공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았다. 둘째, 어로활동은 해양과 해양생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생태와 생물 등 자연환경과의 총체적 관계를 고려하는 관점이 배제되어 있었다.

남송우(2013)는 육지 중심의 사유에서 바다 중심의 사유로 눈을 돌릴 필요성을 제기했다. 곡금량(2008)이 제시한 열린 공간으로서 바다의 개방성과 다양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해양성의 이미지를 구체화할 해양문화콘텐츠 개발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바다를 새롭게 사유할 수 있는 도서관, 연안의 폐가를 활용한 레지던스 공간 및 문화공간 구축, 수중 영화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마련 등을 제안했다.

---

6) 홍석준(2009), pp. 146-147.

〈표 2-2〉 인문학 관련 해양문화 개념에 대한 접근

연구명	연구자 (연구연도)	설명
인류학적 관점에서 본 해양문화의 특징과 의미 : '해양문화의 지역체계 만들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홍석준 (2005)	- 해양세계의 문화 - 육지문화와 대비되는 문화 - 해양을 무대로 생산·유통·소비되는 문화
'도서·해양 문화' 연구와 인류학	홍석준 (2009)	- "섬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방식,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에의 적응이라는 가치와 규범"
해양 인문학의 모색과 해양문화콘텐츠의 방향	남송우 (2013)	- 해양문화의 특성은 생명의 본연성과 아름다움, 공존성, 교류성, 개방성 - 곡금량(2008)의 특성 수용

4. 생태 관련 연구

나승만 외(2003)는 해양문화를 해양생태와 연계했다. 서남해 도서·연안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구조와 갯벌생태 등의 변화에 따른 어촌어민공동체의 적응원리, 도서민의 해양민속 창조원리, 해양문화를 이용한 지역활성화 등을 다루었다. 해양문화를 "주민들이 바다를 매개로 합의·전승해온 생활양식"이자 "도서적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적 환경 속에서 배태된 생활과 문화"로 보았다. 역사·유산이나 문화인류학적 접근과 유사하지만 해양생태환경 및 그 변화와 대응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승만(2003)은 바다와 섬의 문화와 역사를 문화자원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남해역 도서·연안 지역의 해양사와 해양생활사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활성화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연구 주제는 생태환경에 대한 인지체계, 도서 주민의 생애사, 방언학, 어로 관련 생업기술, 의식주, 의례, 축제, 문학 등이다.

〈표 2-3〉 생태 관련 해양문화 개념에 대한 접근

연구명	연구연도	설명
해양생태와 해양문화	나승만 외 (2003)	- 주민들이 바다를 매개로 합의·전승해온 생활양식 - 도서적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적 환경 속에서 배태된 생활과 문화
서남해역의 해양문화자원 활용방안	나승만 (2003)	- 바다와 섬에서 이루어진 해양 역사와 주민의 삶 - 바다와 섬의 역사와 문

5. 관광 관련 연구

김성귀(2003)는 일반적인 의미의 문화와 해양문화를 비교하고 관광자원으로서 해양문화에 접근했다. 문화 자체가 광범위하고 그 의미가 포괄적이므로 세 가지 측면을 나누어 구별하고 이에 대응하는 해양문화를 설명했다. 해양문화의 첫 번째 정의는 "해양에서의 편리성을 위해 개발된 모든 생활 및 산업 관련 도구나 요소"이다. 예를 들면 어구어법이나 주택 등으로 해양생활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두 번째 정의는 "해양과 관련하여 개발된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적 체계, 세련되고 우아한 해양 문화재, 전통요소"이다. 전통문화나 문화재 등이 이에 속하며 해양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정의는 "인류가 해양과 관련하여 발전시킨 가치적 소산으로서의 철학·종교·예술·과학 등"이다. 이는 해양인문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겠다. 해양문화는 관광자원이 되므로 해양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고양시키는 정책 수립, 전시관·수족관·박물관 등 인프라 구축, 해양문화 기초조사 등을 통한 해양문화 발굴과 상품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석준(2006)은 해양문화의 일부인 섬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정부의 집권체제에서 벗어나서 바다와 섬만이 가진 고유성과 진정성을 보전할 수 있는 도서성(insularity)에 주목했다.

이창언(2013)은 해양문화에 대한 이원갑 외(2010)의 개념을 수용하여 경남 거제시 구조라리의 해양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에 대해 연구했다. 이원갑 외(2010)에 따르면

해양문화란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과 인간의 관계적 산물로서 유무형의 총화를 말한다. 어촌지역에서의 무절제한 관광개발의 대안으로 해안지역에 문화관광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거제도 구조라리의 해양사와 해양생활사 관련 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안했다.

〈표 2-4〉 관광 관련 해양문화 개념에 대한 접근

연구명	연구자 (연구연도)	설명
해양관광 측면에서 본 해양문화	김성귀 (2003)	- "해양에서의 편리성을 위해 개발된 모든 생활 및 산업 관련 도구나 요소" - "해양과 관련하여 개발된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적 체계, 세련되고 우아한 해양 문화재, 전통요소" - "인류가 해양과 관련하여 발전시킨 가치적 소산으로서의 철학·종교·예술·과학 등"
진도의 바다 세계와 진도 문화의 해양문화관광 자원화 방안	홍석준 (2006)	- (도서성) 중앙정부의 집권체제에서 벗어난 바다와 섬만의 고유성과 진정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이원갑 외 (2010)	-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과 인간의 관계적 산물로서 유무형의 총화
남해안 어촌지역 해양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경남 거제시 구조라리를 중심으로	이창언 (2013)	- 이원갑 외(2010)의 개념 수용

6. 인식·정책 관련 연구

구모룡(2002)은 일반적인 문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양문화 개념을 도출했다. 그에 따르면 해양문화는 수산이나 해운 등 바다를 통한 삶, 해양과 관련된 정신·예술·문명, 해양과 관련한 사회의 발전 과정, 해양과 관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의미·가치·생활방식, 해양과 관련하여 의미를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것 등 다섯 가지 개념으로 적용된다. 그는 우리가 다섯 가지 개념 중 앞의 네 가지 개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다섯 번째 개념에 등한시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금까지 해양문화론이 네 번째 개념, 즉 문화인류학적 개념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미래지향적인 해양문화를 추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7)]

따라서 다섯 번째 개념, 즉 해양과 관련하여 의미를 만들고 실천하는 의미의 해양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해양문화의 주체는 생산자였지만 오늘날에는 수용자 대중의 역할도 중요하고 생산자와 수용자를 매개하는 문화산업도 무시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탈근대적인 해양문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해양친화적 해양문화, 육지적 시각을 탈피한 해양문화, 지역학에 기초한 개성적인 해양문화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바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프로그램 개발과 친수공간 확대, 육지의 관점에서 바다를 보는 시선의 전환, 지역 정체성과 연계한 해양문화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8)]

김홍섭(2010)은 해양문화가 "바다와 해안, 섬, 항만이라는 공간적 현장에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오래 동안 사는 동안에 축적되고 삶 속에 배어 있는 가치관과 삶과 일과 놀이의 양태"라고 보았다. 따라서 "바다, 연안 및 섬 지역을 토대로 형성되고 유지된 인간의 여러 삶의 형태와 양식, 관습, 오래된 풍습 등은 물론 경제, 사회적으로 유지되어 온 틀과 그것들과 연관되어 생성된 예술과 관광 등을 포괄"한다고 보았다. 즉 해양문화는 과거로부터의 시간 속에서 지향하는 가치로서 궁극적으로는 인간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그는 해양문화 관련 기존 연구가 도서 및 어로 행위적 접근, 해양인류학적 접근, 문명론적 접근, 교역 및 경제지리적 접근 등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또한 해양문화의 영역을 공간적 영역, 기능적 또는 활동적 영역, 시간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체계화를 시도하고 해양문화의 도입 실태를 자연생태적 관점, 경제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검토했다.

그는 환경친화성, 국제화 및 정보화, 해양자원개발 등의 경쟁과 기회, 기술발전, 삶의 다양성 추구 등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새로운 해양문화 개념을 도입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친화적 해양·항만 문화의 정립", "해양레저문화도시 지향", "항만 개발 시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 "쾌적한 공간 개발", "수요자 중심의 해양·항만 문화 정립", "관광과 체험공간으로서의 해양·항만 문화 확장", "해양항만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비전 구축, 제도적 차원 및 기능별·주체별·공간별·시간별 확장 전략을 제안했다.[9)]

---

7) 구모룡(2002), p.5.

8) 위의 글, pp.6~8.

김상구(2011)는 기존 연구의 해양문화 개념을 종합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새롭게 정리했다. 즉, 해양 및 연안 공간을 경제활동이나 과학연구의 대상으로 보는 데서 나아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해양문화라고 보았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부산광역시의 도시비전과 해양문화 정책, 중앙정부의 해양문화·관광 발전계획을 고찰했다. 또한 해양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한편 다양한 체험코스를 개발하여 시민들이 해양문화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양문화를 자연스러운 산물로 대할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류태건(2014) 역시 '해양문화 정책'을 주제로 하는 보기 드문 연구이다. 그동안 해양문화 또는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는 있었지만 양자를 종합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는 해양문화에 대한 개념을 학술적·정책적으로 분석했는데, 해양문화를 문화의 일종으로 보고 육지문화 혹은 내륙문화와 구별했다.

해양생활은 인간생활의 일부라는 점에서 내륙생활과 비교할 때 현상적으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보고 '문화' 개념을 대입하여 해양문화를 정의했다. 광의적으로는 "바다와 관련된 독특한 생활양식으로서, 그 외연은 바다와 관련된 가치관, 태도, 관습, 전통, 신앙 등을 포함"한다. 협의적으로는 " 바다와 관련된 지적·예술적 활동 및 그 산물로서, 그 외연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 거, 바다와 관련된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포함"한다.

류태건(2014)의 연구는 현대적인 해양문화 연구의 인식 전환에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첫째, 그는 해양을 과학과 산업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시각이 문화의 영역으로 넓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과학과 기술 발전은 해양도시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생활공간으로서의 문화가 있어야 충분조건을 만족한다고 보았다.[10]

둘째, 그는 기존연구를 토대로 문화란 광의적으로는 한 집단의 생활양식이고 협의적으로는 지적이고 예술적인 활동과 그 산물이라고 보았다. 광의의 문화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협의의 문화가 갖는 역할이 중요하며 이 점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11]

---

9) 김홍섭(2010), pp.280-284.

10) 위의 글, pp.537-538.

셋째, 그는 부산시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해양문화 정책이 전통해양문화 분야에서는 기능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전통이 아닌 당대의 해양문화 관련 정책이 미비하다고 평가했다.[12] 기존 사업조차도 연안 공간, 즉 해변에서 이루어질 뿐 주제가 해양이 아닌 경우가 많아 해양성을 주제로 한 문화활동을 장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통해양문화 분야 외의 해양문화 창조나 학습과 전달, 축적을 위한 시설과 정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요컨대, 해양문화는 해양관광에 가리거나 묻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표 2-5〉 인식·정책 관련 해양문화 개념에 대한 접근

연구명	연구연도	설명
해양 인식의 전환과 해양문화	구모룡 (2002)	- 수산이나 해운 등 바다를 통한 삶 - 해양과 관련된 정신·예술·문명 - 해양과 관련한 사회의 발전 과정 - 해양과 관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의미·가치·생활방식 - 해양과 관련하여 의미를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것
우리나라 새로운 해양문화의 도입과 확장 전략에 관한 연구	김홍섭 (2010)	- "바다, 연안 및 섬 지역을 토대로 형성되고 유지된 인간의 여러 삶의 형태와 양식, 관습, 오래된 풍습 등은 물론 경제, 사회적으로 유지되어 온 틀 과 그것들과 연관되어 생성된 예술과 관광 등을 포괄" - "바다와 해안, 섬, 항만이라는 공간적 현장에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오래 동안 사는 동안에 축적되고 삶 속에 배어 있는 가치관과 삶과 일과 놀이의 양태"
부산광역시 해양문화 발전방향에 관한 시론적 연구	김상구 (2011)	- 해양·연안공간을 공업단지·어업활동·선박운항을 한 공간·생태계 연구상·자원의 보고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유와 안락함을 릴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해양공간으로 만드는 것
'해양수도' 부산시 해양문화 정책의 현황과 특성	류태건 (2014)	- "문화의 일종, 해양과 문화의 합성어로서 해양과 관련된 문화" - "(광의) 바다와 관련된 독특한 생활양식" - "바다와 관련된 지적·예술적 활동 및 그 산물"

11) 네키 아키라(2012), p.3; Baumol and Bowen(1966) pp.369-377: 류태건(2014), p.540.
12) 위의 글, pp.555-556.

7. 종합 정리 및 키워드 도출

1) 종합 정리

기존연구에 나타난 해양문화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정리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문화에 관한 기존연구는 역사·유산 관련 연구가 가장 많고 보존과 활용, 특히 관광자원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해양문화 연구주제는 과거에 인류가 살아온 삶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이를 당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주를 이룬다고 하겠다.

둘째, 국내 해양문화 연구는 공간적으로 섬 또는 도서 및 목포권과 제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다. 해양을 활동무대로 하더라도 인간이 발을 딛고 사는 공간이 주로 땅이므로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섬, 그리고 섬이 많은 지역을 사례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셋째, 해양문화에 대한 기존연구는 생태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해양문화는 바다라는 공간에 관련된 것이므로 해양환경 및 그 속의 생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바다 환경이나 생물을 소재로 하거나 그것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구축되는 지식, 가치관, 생활방식 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태와 해양문화를 연결한 연구는 적은 편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

넷째, 기존연구에는 해양문화를 문화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즉, 해양문화는 '해양'이 문화를 수식하는 단어로 인식되고 있다. 문화라는 글자 앞에 해양이라는 단어가 붙은 '해양+문화'라고 보는 것이다. 해양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해양문화'의 개념을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가능성을 언급한 연구는 인문학 관련 연구 한 편 정도이다.

다섯째, 기존연구는 해양문화를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일종의 문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해양문화는 궁극적으로 인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힘이 있다. 기존연구는 자연환경 변화 및 과학기술 발전 등으로 해양문화가 수요자 중심의 문화로 확장·변모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 해양문화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간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이 있다.

예컨대 연안을 끼고 있는 도시 중 해양도시를 표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종합적인 생활공간으로서의 문화가 충족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적·예술적 활동과 그 산물이라는 협의적 문화는 생활양식이라는 광의적 문화를 견인하는 역할이 있다. 따라서 광의적 의미의 해양문화를 꽃피우려면 축제와 같은 협의적 문화 활동이 단순히 해양을 낀 공간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그 주제가 해양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해양문화는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산물일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당위성을 갖는 측면도 존재한다.

2) 키워드 도출

가. 해양문화의 개념

해양문화의 개념에 관한 키워드는 '해양 또는 바다를 어떤 수식어로 접근하는가'에 따라 도출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이나 "바다" 등 대상 자체를 지칭하는 단어는 개념 설정에 큰 의미가 없고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지식체계", "가치관", "삶의 양태", "생활양식" 등 문화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 역시 문화를 중복 설명하는 문제를 내포한다.

따라서 기존연구에서 '해양 또는 바다를 문화와 연결하는 표현'에 따라 해양문화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문화는 바다를 활동 또는 생활의 "무대", "터전", "기반", "현장"으로 한다. 둘째, 해양문화는 바다를 "매개로" 혹은 바다와 "관련된" 바다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관계적" 산물을 말한다.

그 밖에 해양문화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섬", "도서", "어민", "어로", "어촌", "해양자원", "해양환경" 등이다.

나. 해양문화의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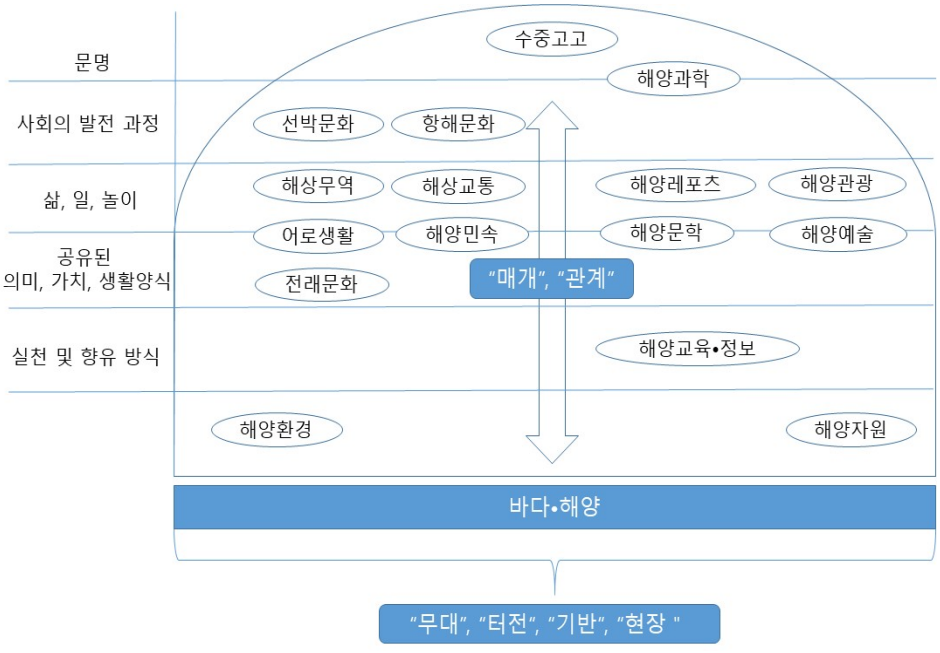
해양문화 개념이 "바다에 대한 공간적 접근 및 관계적 접근에 따른 문화적 산물"로 요약될 경우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다 손에 잡히는 개념을 파악하려면 하위 범주를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연구에서 언급된 해양문화의 문화적 하위 범주는 선박문화, 항해문화, 전래문화[13] 등이다. 공간적 범주는 수중은 물론 연안과 하천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위치보다는 해양성을 반영한 여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적으로는 과거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생산·유통·소비된다. 내용적 범주는 어로생활, 해상교통, 해상무역 등의 해양경제 또는 해양산업을 비롯해 해양민속,[14] 수중고고, 해양문학, 해양예술,[15] 해양레저스포츠, 해양관광, 해양환경, 해양과학, 해양자원, 해양교육·정보 등이 있다.

이처럼 해양문화의 하위 범주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몇 가지 수준으로 구분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예컨대 해양문화는 크게는 문명을 비롯해 국가나 사회의 발전, 더 작게는 개인의 삶 수준으로 나뉠 수 있다. 또는 사람이 공유하는 의미, 가치, 생활양식 뿐 아니라 의미를 창출하고 소비하는 방식, 즉 문화를 실천하고 향유하는 방식을 포괄한다.

〈그림 2-2〉 해양문화 기존연구의 키워드 및 범주



13) 원형으로서의 전통문화 및 이를 계승 변모한 민속문화를 포함
14) 생애사, 방언학, 어구어법 등 생업기술, 의식주, 의례, 축제 등 포함
15)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문화

제2절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

1. 조사개요

이상과 같은 기존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양문화 및 해양문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보기로 했다.

설문조사는 2017년 9월 8일에서 1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배포 및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자는 해양문화 전문가 및 문화정책 전문가이다. 해양문화 분야는 해양문화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다. 문화정책 분야는 중앙 및 지방 연구소 및 대학교, 재단 등에서 문화정책, 문화예술, 문화사업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다.

응답자는 총 60명으로 연구기관 종사자가 75%로 가장 많고 학교 교직원이 18.3%, 정부기관 종사자가 6.7%로 나타났다. 유관 경력은 11~20년인 경우가 31.7%로 가장 많고 20년 이상(26.7%), 6~10년(23.3%), 5년 이하(18.3%)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분야는 '문화'가 35%, '관광'이 30%, '경제'가 11.7% 등이다. 해양문화 관련 학술연구나 정책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38.3%이고 나머지 61.7%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표 2-6〉 해양문화 인식에 대한 조사개요

구분	설명
설문시기	2017년 9월 8일 ~ 9월 15일
설문대상	해양문화 전문가, 문화정책 전문가 60명
설문방법	이메일을 이용한 배포·회수
설문내용	·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 · 해양문화 정책에 대한 의견

설문내용은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과 해양문화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되었다. 해양문화에 대한 직관적인 이미지부터 그동안 연구 및 정책에 관한 평가, 그렇게 평가한 이유, 해양문화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등에 관해 질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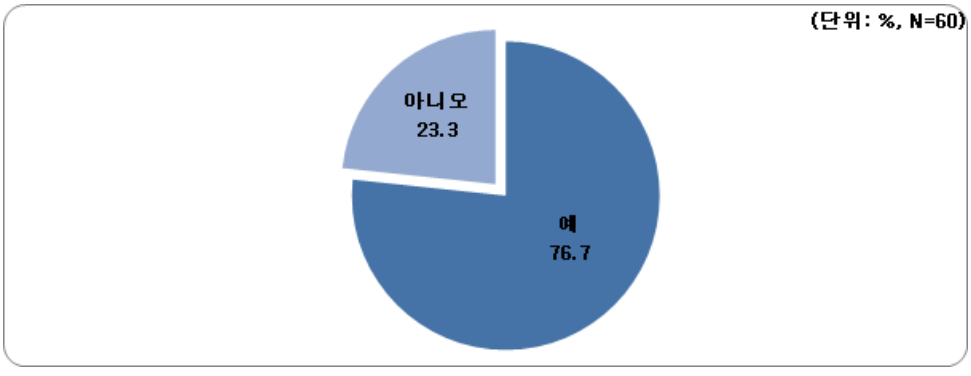
2. 조사결과

1)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

가. 해양문화 연상 이미지

'해양문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6.7%(46명)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응답자들에게 '해양문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2가지를 적어달라고 한 결과, 총 92가지의 응답이 나왔다. 이들이 '해양문화'에 대해 생각한 이미지는 대부분 단어(92.4%)로 나타났으나 해양문화에 대한 개념(7.6%)을 설명한 경우도 있었다.

〈그림 2-3〉 '해양문화' 에 대한 이미지 여부



〈표 2-7〉 '해양문화' 에 대한 이미지 종류

구분	응답 수	비율(%)
단어	85	92.4
개념	7	7.6
소계	92	100

〈표 2-8〉 '해양문화'에 대한 이미지 (단어) 세부

구분	응답	응답 수	비율(%)
레저·관광	(해양)경관, (해양)관광, 해양관광단지	10	10.87
레저·관광	(해양)레저, 해양레저문화, 해양레저스포츠	6	6.52
공간	바다, 바닷길, 대양, maritime	5	5.43
역사·유산	해양(진출)역사, (해양)무역	5	5.43
역사·유산	해양(문화)유산, 해안 관방유적, 전통적인 해양문화 자원, 해양전통문화	5	5.43
수산·어업	해녀, 해녀 체험	5	5.43
수산·어업	어촌, 어촌경관, 어촌문화체험, 어촌생활사	5	5.43
수산·어업	소금, 수산물 채취, 어족 자원, 해산물·먹을거리의 역사	4	4.35
공간	섬, 섬 관련 설화, 섬문화, 도서(지역)문화	4	4.35
수산·어업	어업, 어업문화, 어업인의 생활문화	3	3.26
콘텐츠	지역문화 컨텐츠, 바다를 문화로 한 문화 컨텐츠, 해양기후에 따른 문화컨텐츠	3	3.26
역사·유산	(해양)문명교류, 문화교류	3	3.26
콘텐츠	해양인문학, 해양문학, 해양철학	3	3.26
역사·유산	이사부, 장보고	2	2.17
레저·관광	바다축제, 해양도시 축제	2	2.17
레저·관광	휴식, 휴양	2	2.17
레저·관광	크루즈	2	2.17
공간	해양문화공간, 해양박물관	2	2.17
공간	부산	2	2.17
공간	해양도시 문화	1	1.09
공간	해변공원	1	1.09
공간	장소성	1	1.09
공간	연안	1	1.09
공간	항만	1	1.09
상징	항해	1	1.09
상징	등대	1	1.09
상징	용왕	1	1.09
상징	사람	1	1.09
상징	비상	1	1.09
콘텐츠	해양과학기술	1	1.09
콘텐츠	해양생태	1	1.09

〈표 2-9〉 '해양문화'에 대한 이미지(개념) 세부

구분	응답 수	비율(%)
해양이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 특성	1	1.09
바다사람들의 인식·정서, 해양이 바다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2	2.17
도서해양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 도서해양문화의 정체성	2	2.17
자연환경으로서의 해양과 연관된 사람들의 행위적 특성, 바다를 활용한 문화적 관습	2	2.17
소계	7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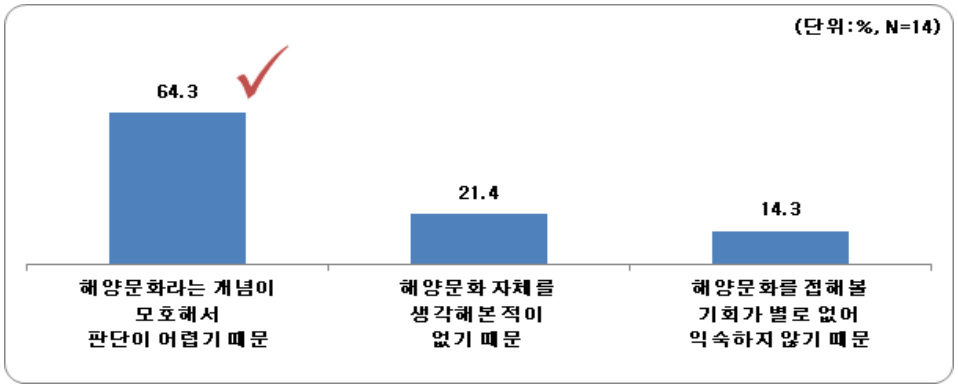
해양문화라는 이미지에 대해 단어로 나타난 응답 85개(92.4%)를 유사성이 높은 것끼리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레저·관광이 2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레저·관광과 관련된 단어는 해양경관, 해양관광, 해양레저, 바다축제, 휴양, 크루즈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간과 관련된 응답이 19.57%, 수산·어업이 18.47%, 역사·유산이 16.29%, 그 외 콘텐츠 관련 8.69%, 상징 5.43% 등이었다. 공간과 관련된 응답은 바다, 섬, 문화 공간, 부산, 해양도시, 해변공원, 연안, 항만 등이었다. 수산·어업 관련 응답은 어촌, 해산물, 어업, 해녀 등이었다. 역사·유산 관련 응답은 해양무역, 관방유적, 문명교류, 이사부, 장보고 등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관련 응답은 해양문화 콘텐츠를 정의하거나 그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상징 관련 응답은 항해, 등대, 용왕, 사람 비상이다.

〈표 2-10〉 '해양문화'에 대한 이미지(단어) 종합

구분	응답 수	비율(%)
레저·관광	22	23.91
공간	18	19.57
수산·어업	17	18.47
역사·유산	15	16.29
콘텐츠	8	8.69
상징	5	5.43
소계	85	92.4

해양문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되는 것이 없다고 응답한 23.3%(14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응답자의 64.3%는 '해양문화라는 개념이 모호해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나머지 21.4%는 '해양문화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14.3%는 '해양문화를 접해볼 기회가 별로 없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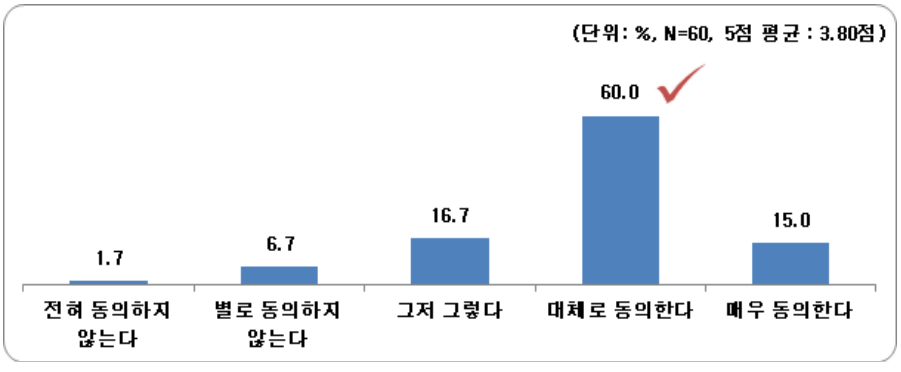
〈그림 2-4〉 '해양문화' 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되는 것이 없는 이유



나. 해양문화 소재 선행연구 및 산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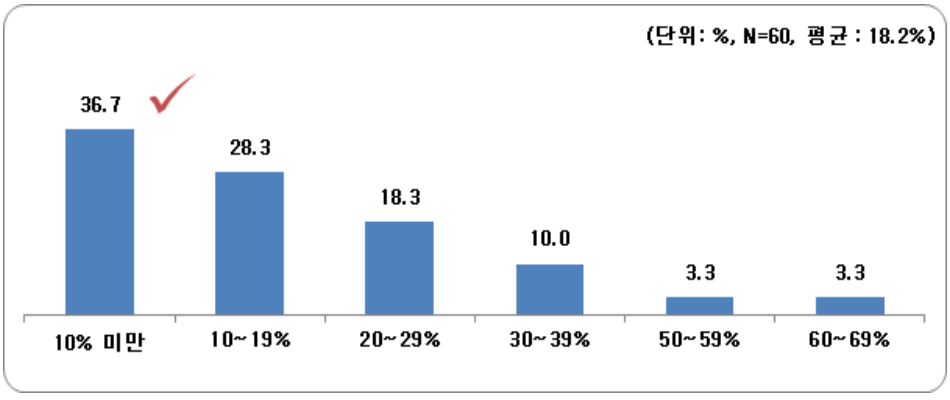
기존연구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학·인류학 외 다른 학문 분야에서 해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가 동의했다.

〈그림 2-5〉 역사학·인류학 외 학문분야에서 해양문화에 대한 관심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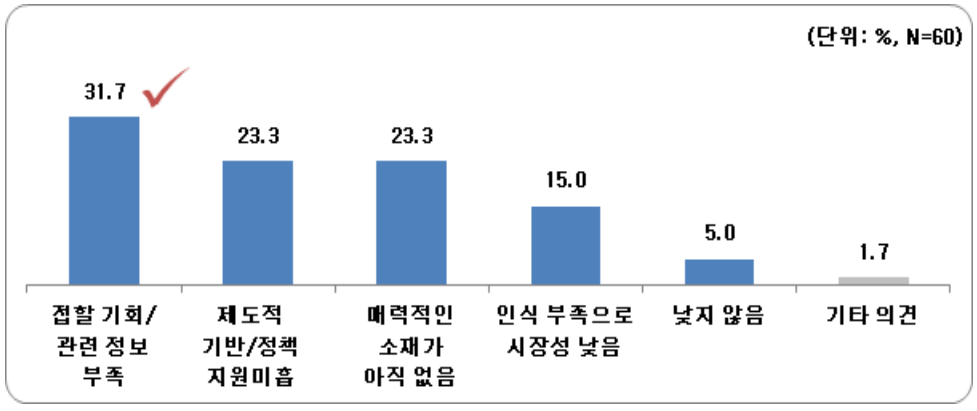
국내 문화산업에서 해양 관련 (또는 해양을 소재로 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10% 미만이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60명이 생각하는 비중의 평균은 18.2%였고 전체적으로 40% 미만으로 나타났다. 비중의 수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해양을 육지나 내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거나 연안 공간에 인구밀도가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 비중이 낮다고 해석될 수 있다. 분류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 생활무대인 육지를 떠나 바다를 무대로 하거나 바다와 관련된 인간의 활동 또는 사건 등을 소재로 하는 음악, 방송, 영화, 출판, 디자인 등을 찾아보면 그 비중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6〉 국내 문화산업에서 해양 관련 비중



하지만 국내 문화산업에서 해양을 소재로 하는 비중이 낮다는 의견은 95%, 낮지 않다는 응답은 5%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문화산업 관계자들이 해양을 접할 기회와 관련 정보 부족으로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해양문화를 소재로 산업이 육성될 만한 제도적 기반이나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는 응답과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만한 해양문화 소재가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23.3%에 달했다. 그 밖에 '해양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으로 시장성이 낮다'는 응답은 15%였다. 기타 의견으로 '대륙문화'와 '유교사상'으로 인해 해양 소재 비중이 낮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림 2-7〉 국내 문화산업에서 해양 소재 비중이 낮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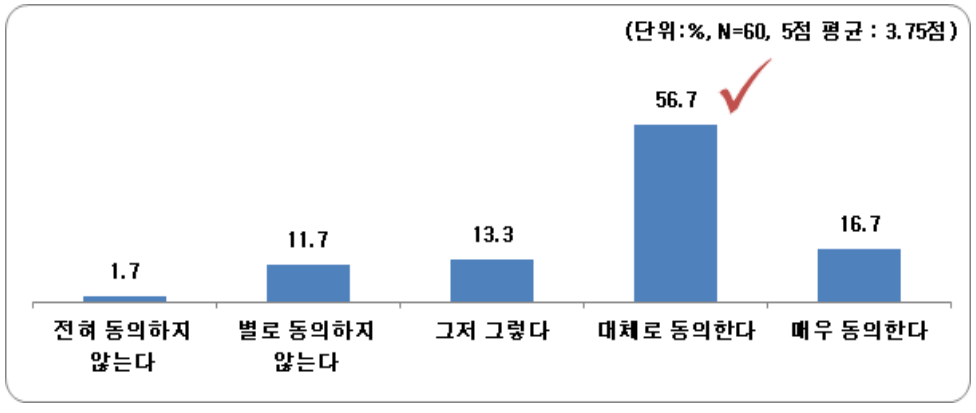


2) 해양문화 정책에 대한 의견

가. 해양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그동안 해양문화 관련 정책은 '전통문화계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당대의 '문화이용·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응답자의 73.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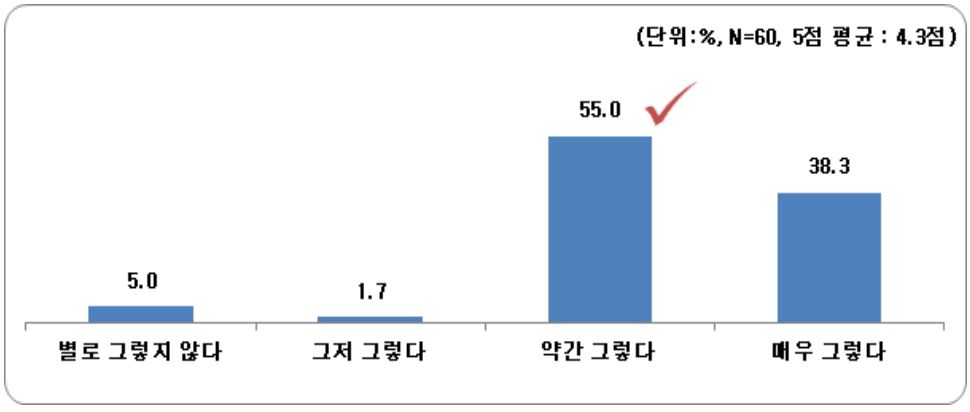
〈그림 2-8〉 '전통문화계승'에 비해 '문화이용·활성화'에 대한 관심 부족



나. 해양문화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이유

해양문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해양문화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므로 개념 정립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작적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해양문화 정책은 단순히 "육지문화 정책"의 반대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정책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하향식 문화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도 있었다. 다만 해양문화에 대한 발굴은 학문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이를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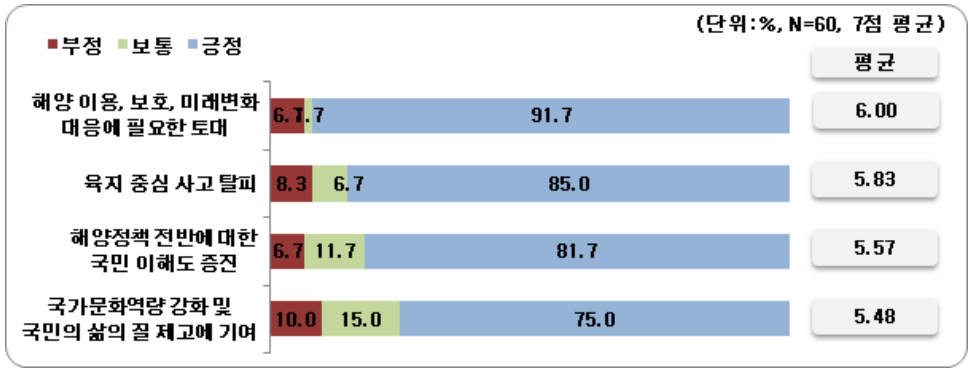
〈그림 2-9〉 해양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



체계적인 해양문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는 7점 만점 평가를 요청했는데 '해양의 이용, 보호, 미래변화 대응에 필요한 토대'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임에도 육지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상태를 탈피할 필요'가 5.83점으로 나타났다. '해양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5.57점, '국가문화역량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5.48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즉, 해양문화는 해양의 이용과 개발은 물론 환경보전 등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반응하는 역량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을 육성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특히 내륙 국가가 아니라 반도 국가로서 해양과의 상호작용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문화가 융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림 2-10〉 해양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하는 이유



다. 해양문화 정책 영역의 당위성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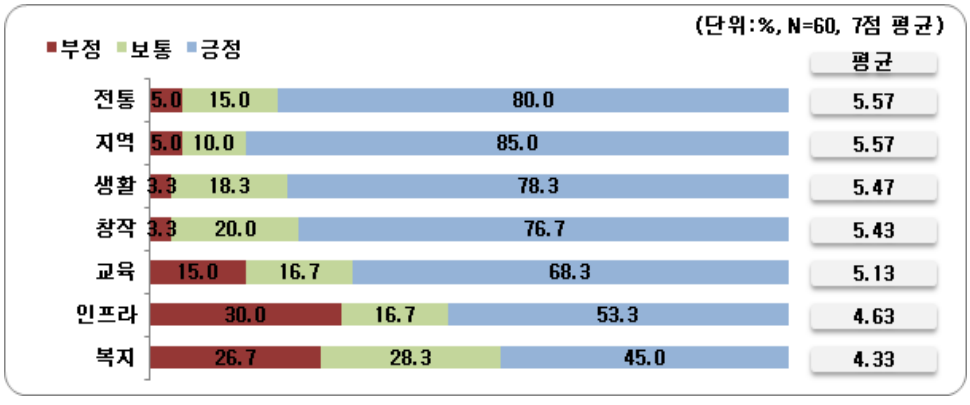
해양문화 정책 영역의 당위성은 정책 분야를 보기로 제시하고 7점 척도로 평가를 요청했다. 보기로 제시한 영역은 '전통', '인프라', '생활', '복지', '지역', '창작', '교육'이었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1〉 해양문화 정책 영역의 당위성 평가를 위한 구분과 설명

구분	설명
전통	해양문화유산(유·무형) 보존·계승·발굴·활용
인프라	해양문화시설(박물관·전시관 등) 조성
생활	해양친수·레저 활동 확대 등 생활문화 지원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해양문화 향유 기회 제공
지역	연안·도서 지역주민의 참여 및 지역문화 활성화
창작	해양성을 띤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활성화
교육	해양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해양문화 정책 영역의 당위성은 '지역', '전통'이 가장 높고 '생활', '창작',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전통'은 7점 만점에 5.57점으로 동일한 점수였지만 전문가별 점수 분포를 보면 '전통'보다는 '지역'에 높은 점수를 준 사람이 많은 편이다. 지역문화 활성화가 해양문화 정책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와 '복지' 영역의 점수는 4점대로 다른 영역에 비해 그 당위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인프라'는 당위성이 낮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많았다. 문화시설 등의 역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시설 건립' 중심의 정책보다는 시설 내 '콘텐츠 확보'와 '시설의 활용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해석된다. '복지'는 아직 해양 부문의 복지서비스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그 당위성에 대한 주목도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1〉 해양문화 정책 영역의 당위성



반면, 7점 만점 척도의 당위성 평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전통'(5.57)과 '지역'(5.57), '생활'(5.47), '창작(5.43)' 순이고 '교육'(5.13), '인프라(4.63)', '복지'(4.33)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평균 점수에서 '전통', '지역', '생활', '창작' 에 관한 당위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해양문화 전문가가(혹은 일반 문화 전문가라도) 그 당위성의 정도를 '인프라', '복지', '교육' 등에 비해 높이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일반 문화정책 측면에서는 '인프라', '복지', '교육' 등이 당위성을 갖지만 해양문화 정책 측면에서는 '지역', '생활' 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 과 '창작'은 긍정적인 응답 정도나 당위성 점수가 모두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창작'은 특히 일반 문화정책 측면에서, '전통'은 해양문화 정책에서 그 당위성이 가장 주목되었다.

라. 해양수산부 정책의 해양문화 육성 기여도

실제 해양수산부의 정책이 해양문화 육성에 기여한 바를 알아보기 위해 제1, 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해양문화 관련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다. 이 평가 역시 전체적인 점수 분포와 평균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해양문화 정책 당위성과 달리 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즉, 해양정책 영역의 당위성에서는 일반 문화 전문가와 해양문화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해양수산부 정책 평가에서는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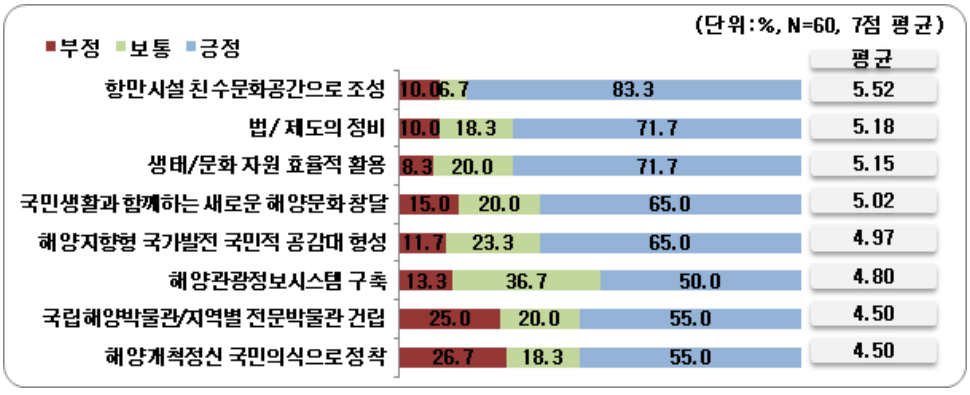
(1)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해양문화 육성 기여도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04~2010) 중 해양문화 관련 추진과제의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이러한 추진과제의 해양문화 육성 기여도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을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정책이 긍정적인 응답 분포(83.5%)와 평균 점수(5.52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제도 정비'(71.7%, 5.18점)와 '생태·문화자원의 효율적 활용'(71.7%, 5.15점)이 비슷한 기여도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생활과 함께하는 새로운 해양문화 창달'(65%, 5.02점)과 '해양지향형 국가발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65%, 4.97점)이 비슷한 기여도를 보였다. '해양관광정보시스템 구축'(50%, 4.8점), '국립해양박물관·지역별 전문박물관 건립'(55%, 4.5점), '해양개척정신을 국민의식으로 장착'(55%, 4.5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12〉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04~2010) 중 해양문화 관련 추진과제

구분	설명
생태·문화 자원의 효율적 활용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광수요 해소 :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관리 확대, 해양생태계 체험시설 조성 - 갯벌관련 문화행사 지원 및 명예 습지생태안내인 제도 활용 - 등대, 해양연구시설, 해양조사선박 등 개방해 문화·관광 장소로 활용
국립 해양박물관 및 지역별 전문박물관 건립	-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 지역특성에 적합한 전문 해양박물관 건립 - 권역별 거점 해양관광도시에 해양과학관 및 수족관 건립
항만시설을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	- 폐쇄형 노후 항만시설을 선진국형 공간으로 개량·현대화 : 수변공간을 항만녹지공간, 문화·휴식공간, 레저 및 서비스 공간으로 정비, 여객선 터미널지구는 해안광장으로 개발 등
국민생활과 함께하는 새로운 해양문화 창달	- 해양 전문 케이블 TV 등을 통한 신속한 정보전달,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 해양문화 창작 장려 : 해양수산공모전, 해양문학의 밤 등 - 해양문화 분야 학술·연구활동 지원
해양관광정보 시스템 구축	- 해양관광 DB 구축, 해양관광 전문 포털 구축 - 해양관광정책 지원시스템 구축 - 해양문화·관광, 해양레저·스포츠, 해양과학 등 연계된 종합해양문화정보망 구축 - 사이버 해양대학·해양박물관·해양수족관 개설
해양지향형 국가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해양홍보 강화 : 바다의 날 국민축제로 승화, 전국 해양문화축제 개최, 지역별 풍어제를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 매스컴과 협력, 해양문화 강좌 개설 등 - 청소년 해양교육 강화 : 해양교육 포털 구축, 프로그램 마련, 교사 대상 해양교육 프로그램 공모 및 교재 발간, 일일명예교사제 확대, 해양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해양탐구 학습관 조성, 교과서의 해양관련 내용 수정·보강, 해양환경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 해양수산총연합회 설립 - 해양관련 NGO와 협력 강화(민간단체 지원·육성)
해양개척정신을 국민의식으로 정착	- 장보고 해양개척정신을 국민의식으로 정착 : 장보고 연구회, 해양역사 교육공간 확보, 대중매체 및 교육을 통한 장보고 정신 확산 - 해양관련 인물의 재조명을 통한 해양개척 정신의 국민의식 정착
법·제도의 정비	- 해양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법 제정 추진 등 제도정비 - 해양문화·관광 정책 수요 해소 및 정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

〈그림 2-12〉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04~2010)의 해양문화 육성 기여도



(2)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해양문화 육성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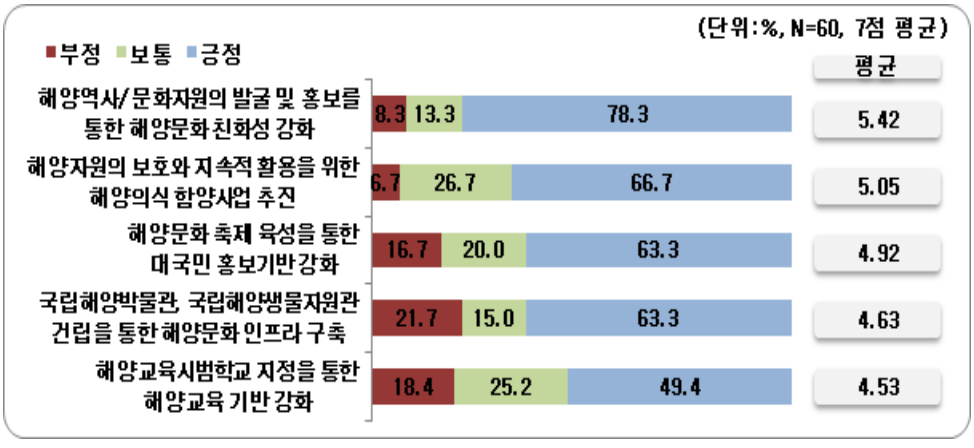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 중 해양문화 관련 추진과제의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이러한 추진과제의 해양문화 육성 기여도에 대해서는 '해양역사·문화자원의 발굴·홍보를 통한 해양문화 친화성 강화'가 긍정적인 응답 분포(78.3%)와 평균 점수(5.42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 활용을 위한 해양의식 함양사업'(66.7%, 5.05점), '해양문화 축제 육성을 통한 대국민 홍보기반 강화'(63.3%, 4.92점), '국립해양박물관 등을 통한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63.3%, 4.63점), '해양교육시범학교 지정을 통한 해양교육 기반 강화'(49.4%, 4.53점)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해양문화 육성 기여도는 '해양역사·문화자원 발굴'이 가장 높고 '해양교육시범학교 지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의식 함양사업', '해양문화 축제 육성', '인프라 구축' 등은 긍정적인 응답 분포가 60% 이상으로 비슷하게 평가되었다. 반면, 부정적인 응답 분포를 보면 '인프라 구축', '해양교육시범학교 지정', '해양문화 축제 육성'이 해양문화 육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다는 평가가 20% 전후로 나타났다. 한편, 각 정책의 육성 기여도를 7점 만점으로 보면 '해양문화 축제 육성'은 '인프라 구축'이나 '해양교육시범학교 지정'에 비해서는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13〉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 중 해양문화 관련 추진과제

구분	설명
해양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홍보를 통한 해양문화 친화성 강화	- 해양역사·문화자원 발굴사업 추진 - 해양문화 탐방 행사 개최 - 해양홍보 및 해양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해양에 대한 관심 유발, 친화성 제고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적 활용을 위한 해양의식 함양사업 추진	- 해양의식 함양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 해양의식 함양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원/관리 방안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을 통한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	- 전시공간 지원사업을 통한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 및 지역 박물관/수족관/과학관과 연계 네트워크 구축 - 범국민 해양문화유물 수집운동 전개, 해양문화 자료의 문화재 지정 촉진 - 해양생물자원관 건립 - 전국 해양문화시설 통합 협의체 운영 및 연계방안 추진
해양문화 축제 육성을 통한 대국민 홍보기반 강화	- 해양의식 및 해양문화 고취할 수 있는 해양축제 육성 - 해양축제 평가시스템 구축, 우수 해양축제 지원 - 정부차원 행사의 홍보기반 강화
해양교육시범학교 지정을 통한 해양교육 기반 강화	- 해양교육시범학교 운영 및 교재 발간 - 해양아카데미 설치 및 해양의식 교육 기회 제공 - 전문 해양의식 교사 양성 및 민간단체 육성

〈그림 2-13〉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의 해양문화 육성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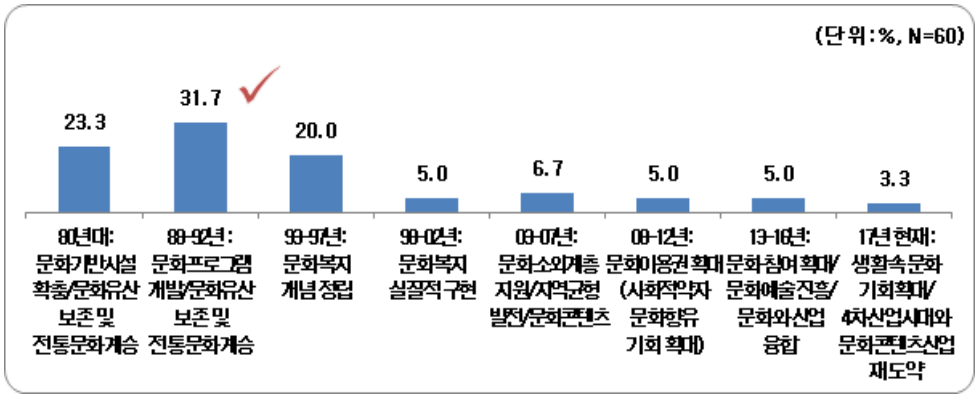
마. 국내 문화정책과 비교한 해양정책의 발전 단계

한편, 기본적인 법·제도가 구축되어 있는 국내 문화정책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양문화 정책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평가를 요청했다. 응답 결과는 1980년대(23.3%) 및 1988~1992년(31.7%) 수준의 단계에 와 있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났다. 이 시기 주요 정책은 '문화 기반시설 확충', '문화 프로그램 개발',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이다. 이어 1993~1997년 당시의 '문화복지 개념 정립' 수준에 와 있다는 응답도 20%로 나타났다. 국내 문화정책과 비교할 때 해양문화 정책 영역에서는 문화복지의 실질적인 제공이나 생활 속 문화기회 확대, 문화예술 진흥이나 문화콘텐츠 역할 강화 및 산업 융합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2-14〉 국내 해양문화 정책 평가를 위한 구분과 설명

시대 구분	문화정책의 내용			해양문화 정책의 단계
1980년대	문화 기반시설 확충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①
1988-1992년	문화 프로그램 개발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②
1993-1997년	문화복지 개념 정립			③
1998-2002년	문화복지 실질적 구현			④
2003-2007년	문화 소외계층 지원	지역균형 발전	문화콘텐츠 역할 강화	⑤
2008-2012년	문화 이용권 확대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⑥
2013-2016년	문화 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 융합	⑦
2017년 현재	생활 속 문화 기회 확대		4차 산업시대와 문화콘텐츠 산업 재도약	⑧

〈그림 2-14〉 국내 해양문화 정책의 발전 수준



바. 해양문화 정책 세부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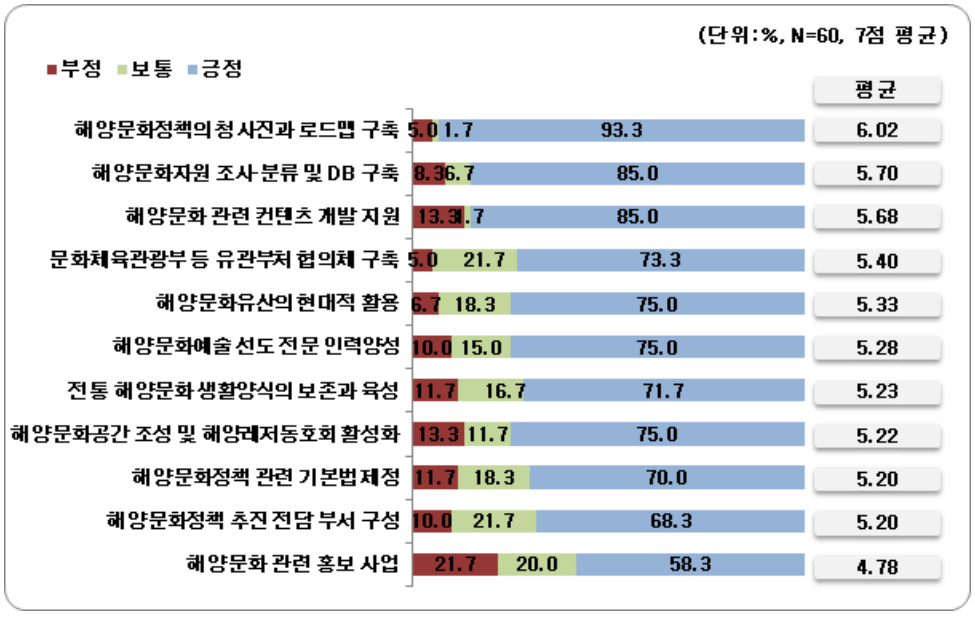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문화 정책에 추가해야 할 세부과제 11개를 제안하고 그 필요성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표 2-15〉 해양수산부가 추진할 해양문화 정책의 세부과제 평가를 위한 구분

	구분	예시
1	해양문화 정책의 청사진과 로드맵 구축	-
2	해양문화 정책 관련 기본법 제정	-
3	해양문화 정책 추진 전담 부서 구성	-
4	해양문화자원 조사·분류 및 DB 구축	-
5	해양문화예술 선도 전문 인력양성	-
6	해양문화 관련 홍보 사업	해양문화의 날 지정, 해양문화도시·지구 지정, 해양문화 향유지수 개발
7	해양문화 관련 컨텐츠 개발 지원	해양문화시설·축제에 활용될 해양성을 띤 소재 개발, 해양문화 공연·문화콘텐츠 [영화·음악·방송·게임·만화·캐릭터] 개발
8	생활 속 해양문화공간 조성 및 해양레저동호회 활성화	-
9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 협의체 구축	-
10	해양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	관광상품화 확대, 전승사업 강화
11	전통 해양문화 생활양식의 보존과 육성	진흥센터, 홍보사업 지원 등

평가 결과, 필요성이 가장 높은 세부과제는 '해양문화 정책의 청사진과 로드맵 구축'으로 긍정적인 응답 93.3%, 7점 만점 기준 평균 6.02점으로 나타났다. 이어 '해양문화자원 조사·분류 및 DB 구축'(85%, 5.7점)과 '해양문화 관련 컨텐츠 개발 지원'(85%, 5.68점)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해양문화 관련 홍보 사업'은 긍정적인 응답이 53.3%, 평균 점수가 4.78점으로 나타나 그 필요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나머지 세부과제는 전반적으로 70% 전후의 긍정적인 응답과 평균 5점 대 초반의 점수로 평가되었다.

〈그림 2-15〉 해양수산부가 추진할 해양문화 정책 세부과제의 필요성



그 밖에 추가해야 할 세부과제에 대한 의견으로는 박물관 등의 시설 구축보다는 인식 개선과 향유 기회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예컨대 '해양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다양한 해양 여가 채널 구축을 통한 향유 기회 향상 및 접근성 제고', '해양레저(스포츠)', '해양체험' 등이다. 설문에서 제시된 정책과제 8번, '생활 속 해양문화공간 조성 및 해양레저동호회 활성화'와 유사한 과제가 많다.

〈표 2-16〉 해양문화 정책 세부과제 전문가 제안 의견

구분	설명
인식 개선과 향유 기회 확산	- 해양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 인식개선 캠페인 - 다양한 해양 여가 채널 구축을 통한 향유 기회 및 접근성 제고 - 해양레저(스포츠), 해양체험
관련 연구 지원	- 해양문화에 대한 기본개념 연구 - 해양문화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 지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관광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민간주도의 문화 창출 기회 마련	- 해양디자인 확대 - 환경정비 시 미학적 요소 고려 - 해양문화브랜드 구축
지역과의 연계	- 지역 주민의 애환과 삶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 지자체 중심의 사업 - 지역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국제교류	- 국제해양문화/해양도시 네트워크 구축과 정례화 - 해양교류사, 동아시아 해양 교류와 평화 구축 방안
정책추진체계	- 전문가 자문단 구성 - 민관협력체계 - 중앙정부-지자체-시민사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 해양수산부-시·도-군'단위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등과의 협력체계

한편, '해양문화에 대한 기본개념 연구'부터 필요하며 '해양문화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 지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관광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또한 '민간주도의 다양한 문화창출 기회 마련'이 필요하며 환경, 디자인, 브랜드와 관련하여 '해양디자인 확대', '환경정비 시 미학적 요소 고려',[16] '해양문화브랜드 구축' 등도 세부과제로 제안되었다.

해양문화가 연안·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으므로 지역과의 연계도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의견으로는 '지역 주민의 애환과 삶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16) 한편, 해양문화는 '환경보존' 차원에서 파생되는 것이지 '문화활동' 차원이 아니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나왔다.

을 통해 공감을 이루는 정책', '지자체 중심의 사업', '지역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등이 세부과제로 제안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측면에서는 '국제해양문화/해양도시 네트워크 구축과 정례화', '해양교류사, 동아시아 해양 교류와 평화 구축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정책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비롯해 '민관협력체계', '해양수산부-지자체-시민사회 간 협력체계', '해양수산부-시·도-군 협력체계, '다른 유관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해양문화는 단일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홍보·콘텐츠개발·미디어 연계·기술개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공동의 노력,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에서였다.

사. 해양문화 정책 추진과 관련한 제언

추가로 해양문화 정책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해달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는 해양문화의 개념과 대상, 유형 구분 등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양문화 정책이 나아갈 기본 방향 및 기존 방향과의 차별화 등이 제안되었다.

전문가들은 해양문화가 필요함에도 친숙하지 않은 것은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므로 국민적인 이해와 소통, 국민생활 밀착형 해양문화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 시절부터 교육기관에서 접할 기회를 제공하면 다음 세대는 보다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기존 세대는 이미 경험한 문화를 향유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문화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양문화를 국민에게 자연스럽게 이해시키고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시대적 수요를 고려해 해양문화를 활용한 앱이나 게임 등으로 청소년 계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동안 해양을 관광·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형태가 소극적이었지만 향후에는 관련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바다에 대한 공포감이나 정서적 거부감 등 내재적 제약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는 그러한 방안으로서 미래 관광활동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해양문화 정책에 대한 반성과 방향 선회를 위해서는 시설 중심, 공공기

관 중심,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요자에게 잠재된 욕구를 찾아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콘텐츠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인프라와 시스템은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성과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과 의의에 따라 정책 추진 여부를 평가해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책 과잉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사·인류학 분야에서는 기초자료와 여건분석 등을 제공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바다에 접근하고 즐길 것인가에 대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스토리텔링과 문학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해안별 역사에 관한 스토리텔링 발굴과 해양관광 연계 등 관광정책과의 긴밀한 융복합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해양문화 정책의 수혜자 범주는 지역 주민이 아닌 관광자까지 확대된다. 지역 차원의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문화 정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군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연안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향후 해양문화 정책은 종합적인 계획 하에, 통합적이고 단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예컨대 해양문화자원의 발굴과 보전도 그동안 주제별, 지역별 노력에 머물러 왔으므로 총체적인 관리와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인구 감소와 함께 연안·도서의 공동화(空同化)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역 해양문화의 단절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필요하다.

정책 세부과제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기존 영화제에 해양 관련 콘텐츠를 접목시켜 차별화된 영화제를 개최한다던가 해안가의 특성을 살린 카페거리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어촌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TV 프로그램인 '삼시세끼 어촌편', '삼시세끼 바다목장편'이나 애니메이션 영화 '도리를 찾아서'와 같이 갯벌 생태계, 해양 생태계에 기반한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 시사점

해양문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상기하는 이미지가 없다는 응답자들은 대부분 일반 문화전문가로서 절반 이상이 해양문화라는 개념을 모호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해양문화를 특별히 떠올려 본적이 없거나 접해볼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해양이나 수산 관련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나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한, 해양문화는 익숙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양문화는 공간적으로 보다 협소한 농촌문화나 도서문화 등과 비교할 때 정형화되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문화산업에서 해양 소재 비중에 대한 평가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중은 물론 공급자에 해당하는 해양문화 관계자들까지도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해양 소재 문화산업은 시장성이 낮고 정보가 부족하며 매력적인 소재가 발굴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타 의견에서 언급된 유교사상 등의 영향으로 바다를 친근하게 여기기보다 두려워하고 바다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기반이나 정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은 문화산업에서 해양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앞으로 보완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해양문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해양문화의 개념 정립부터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드러났고 육지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해양의 이용과 보호, 미래변화 대응의 토대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해양문화 정책 영역의 당위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해양문화 정책이 일반 문화 정책과 차별화되는 점을 시사한다. 해양문화 정책의 당위성에서 ‘전통’, ‘지역’, ‘생활’, ‘창작’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일반 문화 정책에서 강조되어 온 ‘인프라’, ‘복지’, ‘교육’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통’, ‘지역’, ‘생활’ 등은 기존 해양문화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반면 ‘창작’ 부문에 대한 연구나 정책은 거의 부재한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내 문화정책 변천과정과 비교할 때 기반시설과 프로그램 개발,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내 추진과제의 해양문화 육성 기여도 평가에 따르면, 친수문화에 기여하는 추진과제가 가장 높게 평가된 반면 인프라 구축은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은 시설 구축 보다는 친해양문화를 위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세부과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해양문화에 관한 기본개념 연구, 해양디자인과 브랜드 등 민간주도의 문화 창출 기회 마련, 지역 차원의 해양문화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국제교류 및 네트워크, 민관·범정부·중앙-지방 연계 등의 협력 등이 세부과제로 제안되었다.

해양문화 정책 추진을 위한 기타 제언으로는 국민이 바다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하며 국민의 수요를 고려한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밀어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향유되는 것이므로 민간주도의 문화 창출 기회가 막혀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정책의 역할인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가 바다를 접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바다에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해양문화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해양문화 개념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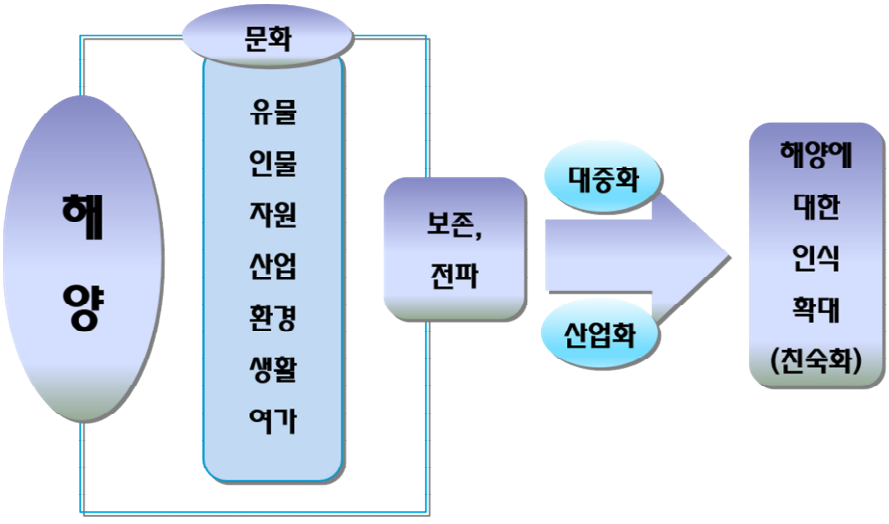
해양문화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 분석과 더불어 해양문화 및 해양문화 정책과 관련된 설문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해양문화는 해양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역사, 생태, 인문 등 각기 다르게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해양문화정책에 있어서는 해양문화의 개념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문화는 시대변화와 문화수요에 따라 발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일개념으로 정립되기 어렵고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인식된다. 따라서 해양문화를 단일한 개념으로 정립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양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해양문화를 육지문화, 내륙문화와

대별된다고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의 영역에서 육지문화를 정의하거나 내륙문화의 중요성을 별도로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즉 해양문화를 다루는 선행 연구가 궁극적으로 내포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의 영역에서 해양이라는 공간과 부속자원에 대한 역사적 의미의 해석과 전파, 보전의 중요성, 생태적 가치 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해양문화의 전파를 통해 해양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해양문화정책의 역할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설문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하는 해양문화정책의 추진 방향설정과 함께 해양문화의 소비측면에서 해양문화의 개념 구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양문화와 관련된 기존연구의 공통적인 요소는 해양문화가 해양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형성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나타난 생활양식이라는 점과 함께 이의 보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역사·유산적 가치와 더불어 생태적, 환경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해양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를 소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양문화에 대한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해양문화는 '해양을 기반으로 만들어온 전통과 유산 및 삶의 태도로 지속적으로 보전,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즉, 과거로부터 전해온 전통과 유산의 보존·계승이 해양문화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한 것이다. 또한 해양이라는 공간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이의 지속적 활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문화정책은 이러한 해양문화를 보전, 전파하는 것으로 시대적 배경과 요구에 따라 문화가 가지는 의미가 달라지듯이 해양문화의 의미변화에 따라 해양문화정책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해양에 대한 이용과 보호, 미래에 대한 대응이 중시되는 현대에서 해양문화는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의 가치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양문화의 보존과 전파는 대중화나 산업화를 통해 해양에 대한 대중의 인식확대에 기여한다. 역으로, 해양에 대한 인식확대는 해양문화의 대중화나 산업화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림 2-16〉 해양문화의 개념 구축방향



해양문화의 보존·전파와 대중화·산업화는 해양문화를 전달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달 체계는 해양정책을 매개체로 한다. 해양문화와 해양정책과의 관계는 다음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해양문화의 문화적 발전 그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보다 근본적으로 해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전자가 해양문화를 보급·확산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해양을 알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해양을 알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해양문화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해양문화가 부족하다는 표현은 사실상 우리의 생활양식 속에 해양이 공간, 자원, 의식으로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활과 삶의 행태에서 해양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해양문화 정책은 해양과 해양의 가치를 알리는 데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해양문화 개념과 해양문화정책의 추진은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이 드러나는 의미를 함축하여 구축될 필요가 있다.

제3장 문화정책 및 해양문화 정책 동향과 사례

제1절 우리나라 문화정책 추진 동향

1. 문화정책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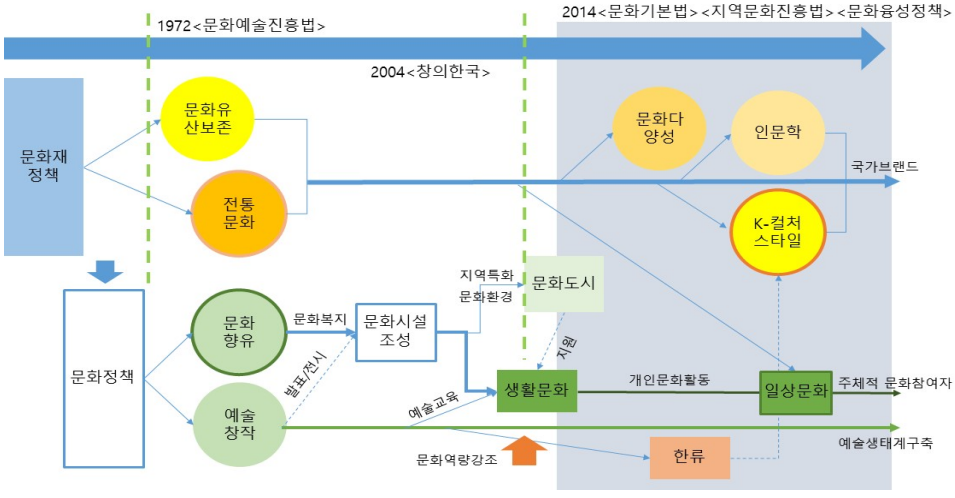
대한민국 건국이후 문화정책흐름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문화재정책 즉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중심으로 추진되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예술창작 진흥과 문화시설 조성에 관한 정책개념이 등장하였다. 문화시설은 예술작품과 수요자를 매개하는 공간으로서 '문화시설 조성=문화향유'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었다. 80-90년대는 국가 대규모 행사를 위한 문화시설 조성 사업에 주력하였으며, 90년대 후반부터 지역문화격차 해소측면에서 지역문화시설 확충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4년「지방분권특별법」제정을 근거로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면서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으며, 지역경쟁력 요소로서 특색 있는 지역의 문화환경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대규모개발 사업으로부터 지역고유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생활문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점적 문화정책이 아니라 도시 및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개발과 연계된 문화정책이 추진되면서 문화도시조성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지역 내에서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제화시대에 맞게 문화다양성 논의와 함께 한국드라마를 시작으로 한류가 시작되면서 우리문화브랜드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특히 문화콘텐츠를 산업 및 기술과 융합하는 문화산업에 대한 수요에 대응한 정책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무엇보다 문화정책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2014년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제정과 문화융성정책에서 읽을 수 있다. 정보/지식 산업 기술

에 기반 하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산업뿐만 아니라 개인 및 국가경쟁력이 중요시되면서 전통문화에 기초한 개인의 정신문화 역량과 강력한 국가브랜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인의 문화 역량강화는 일상생활 문화활동 지원정책과 인문학 가치 확산 등 정책 등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국가브랜드 구축 정책은 '한브랜드→한스타일→k-컬쳐'로 개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3-1〉 문화정책 흐름 총괄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추진된 문화정책의 흐름을 분석해 보면 각 정부마다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일관되게 나타나는 정책은 '국민문화향유', '지역문화진흥' '국가문화역량' 등이다.

국민문화향유 측면에서는 초기에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예술관람 기회 제고 등에 중점을 둔 문화복지 개념에서 출발하여 시대흐름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이 수반된 생활문화정책과 문화복지, 주체적 문화생산자 및 활동가로서 참여하는 일상생활문화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문화복지 대상은 문화소외계층을 특정하고, 일상생활 문화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설과 공간, 프로그램 등을 차별화하기 시작하였다.

지역문화진흥정책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발

전 측면과 지역경쟁력 측면에서 중요과제로 부각된다. 지역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측면에서는 문화시설 및 공간, 예술창작지원, 문화인력 및 조직,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지역을 대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고, 도시의 랜드마크적 성격을 가진 특색 있는 문화시설 조성사업이나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나타난다.

냉전시대를 종결하고 경제자본시장이 세계화되고 특정국가의 문화 침식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문화다양성 논의와 함께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동시에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한국예술에 기초한 국가브랜드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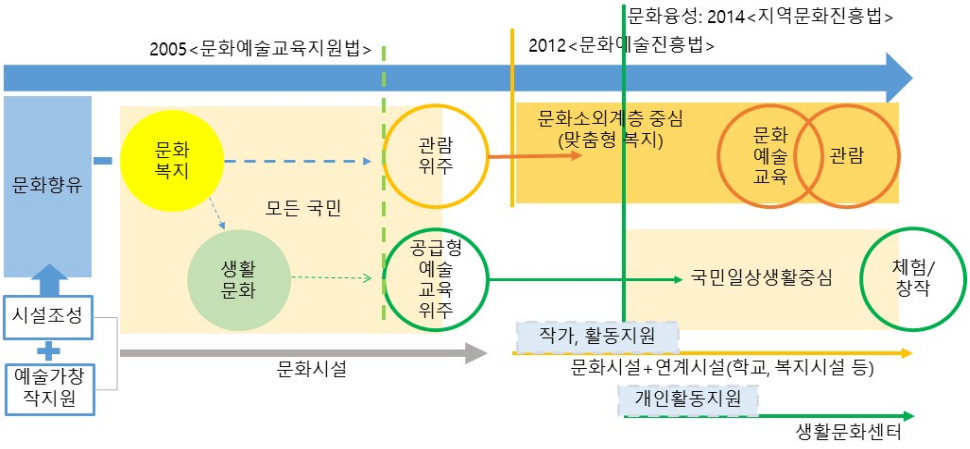
2. 주요 문화정책 동향

각 정부의 문화정책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국민문화 향유', '지역문화 진흥' '국가문화 역량' 즉, 개인, 지역,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정책에 대한 주요쟁점과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문화 향유: 문화복지 vs 생활문화

1980-90년대는 문화시설 조성 및 예술창작기반 조성 등에 초점을 둔 문화정책에 대응하여 정책 확산 및 성과 측면에서 국민문화 향유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복지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정부가 바뀌면서 국민문화향유 정책은 크게 문화복지정책과 생활문화정책으로 분화된다. 정책초기에는 문화향유와 유사한 개념으로 문화복지가 생활문화를 포괄한 형태로 추진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국민사회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문화복지정책은 문화소외계층 중심으로 문화예술가에 의한 교육 및 컨설팅, 공연 관람 등의 형태로 변화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 생활문화 정책으로 변화하였고, 국민 모두가 주체적 참여자, 생산자로서 기존 문화시설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간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2〉 문화복지정책 흐름도



가. 문화복지[17)]

문화복지는 문화와 복지의 합성어로 1980년대 이후 국민의 삶을 증진하기 위해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책적 용어이다. 그러나 정책추진 과정에서 정권마다 개념과 접근 방법, 정책대상이 다르고 연구자 또한 문화복지에 대한 개념과 대상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법/제도적, 정책적 관점에서 문화복지의 개념과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1〉 문화복지개념

구분	문화복지
문화복지 법제화 방안 연구(2007)	문화감수성을 함양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려는 국가적 사회적 의지와 노력
맞춤형 문화복지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2015)	빈곤/실업 등 경제적 위험, 질병/장애/등 신체적 위험, 학업/출산/양육/노령 등 사회적 위험, 문화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리적 위험들로부터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문화적 접근과 문화참여를 위한 문화복지 급여, 보험, 문화프로그램과 서비스

17) 정광렬(2015) 맞춤형 문화복지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p15-31, 재정리

본격적인 문화정책이 추진된 1980년대는 공급자 중심의 문화인프라 조성 및 전문문화활동 지원정책에 대응하여 수요자 대상의 정책 및 지원을 문화복지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문화복지 정책이 등장한 것은 국정과제인 '삶의 질 세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문민정부 시대이나 국가 경제위기로 인하여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문화 창의력을 강조하면서 문화복지보다는 국민의 주체적 문화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참여정부 초기까지 이어지다 양극화문제가 중요한 사회의제로 부각되면서 복권기금으로 '사회취약 계층 중심의 문화복지' 사업을 시작하여 낙후지역, 이주민 등으로 확대된다. 이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2005)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이 제도화되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책이 강화되었고, 특히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문화복지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정책흐름은 201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문화복지의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명시하면서 문화복지 정책의 개념과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표 3-2〉 문화소외계층의 정의

구분	대상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만65세 이상), 재활원/요양원/보육원/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소아병동 환자, 외국인 노동자 등
지리적 소외계층	읍/면/동/도서(섬)/산간벽지/공단지역주민
특수 소외계층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새터민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3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연구

박근혜 정부는 국민체감형 문화정책을 지향하면서 문화의 일상화를 정책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문화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참여를 일상화하고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문화복지'를 추진하면서 생애주기별, 계층별 등 차별화된 수요를 파악하여 문화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달 체계구축을 강조하였다.

〈표 3-3〉 문화복지정책의 흐름

시기	정책목표	주요정책대상	주요정책
문민정부	국민 문화향유증대	전 국민	문화의 집 조성
국민의정부	창의적 문화복지국가	전 국민	문화예술교육
참여정부	사회취약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나눔사업 문화예술교육
이명박정부	공평한 문화향유기회 제공	취약계층, 서민	문화바우처 학교 및 사회문화, 예술교육강화
박근혜정부	생활 속 문화향유	전국민 (생애주기별)	문화의 날 맞춤형 문화복지

자료: 정광렬(2015). 맞춤형 문화복지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p18

계층별 문화복지는 사회취약계층, 일반국민, 특수계층으로 구분하며, 생애주기별 문화복지 정책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년으로 구분 가능하다. 이들 맞춤형 정책을 살펴보면 학교 및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지원 및 통합이용권을 활용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3-4〉 계층별 문화복지정책 방향

대상	주요정책	대상범위	정책방향
취약 계층	문화예술교육	노인, 장애인, 해외이주민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역특성화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등 참여기회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예술관람 및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 가능(세대당 1카드)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자발적으로 문화이용권 사업이용이 어려운 계층	117개 시/도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일반	문화예술교육	전 생애	주체적 참여기회 확대
특수 계층	문화예술교육	교정시설수감자, 군인, 의경, 새터민 등	예술적 표현 역량 강화, 자존감 향상 및 사회성 증진 역점

자료: 정광렬(2015). 맞춤형 문화복지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p107 재정리

〈표 3-5〉 생애주기별 문화복지정책 및 사업

구분	정책내용
영/유아	예술강사지원, 발육발달에 따른 유아체험프로그램, 이야기 할머니사업, 북스타트 운동, 예술꽃씨앗학교
아동/청소년	국악, 연극과 같은 학교 밖 문화예술강사 지원, 꿈의 오케스트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영상미디어 센터 활용한 청소년 토요영상 문화교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문화가 있는 학교' 운영, 진로체험교실운영, 자유학기제 특화프로그램 개발(길 위의 인문학, 인생나눔교실 활용), 소외청년층과 단절된 가족을 위한 인문예술캠프, 각종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예술치료사를 통한 1:1지원, 위기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 ,가족 오케스트라 및 합창, 주말가족문화여행,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운영, 창업지원,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청소년 문화패스제 도입, 창의캠프 '우락부락' 운영,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청/장년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한 창업지원, 직장인 문화예술동호회 운영, 산업단지행복패스티벌 개최, 군장병 멘토 파견, 이주여성 및 탈북민을 위한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교도소/보호관찰소 문화예술교육 및 독서지원, 생활문화동호회축제 개최, 문화분야 청년인턴제 시행, 창의인재 동반사업/콘텐츠 아카데미, 무지개다리 사업, 문화패스제
노년	노인복지관 예술강사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용한 노인동아리 활동지원, 어르신문화학교 운영, 문화나눔봉사단 사업시행, 골든에이지 캠페인 추진
전 생애	문화가 있는 날, 작은미술관,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나. 생활문화

생활문화정책은 1990년 문화부가 독립하면서 수립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서 생활양식과 관련된 정책으로 처음 등장하였고, 문민정부에서는 문화의집 조성과 지방문화원 문화학교제도 도입을 통한 시민문화교육 형태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생활문화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시민 일상적 생활문화에 기초하기보다는 문화시설 등에서의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을 강조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생활문화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생활 속 예술정책'이라는 형태로 생활 속에서 예술향유 기회확대를 통해 예술에 대한 접근성, 예술가와 지역주민들의 상호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체로서 시민과 지역사회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18].

18) 정광렬(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p22-24

최근 들어 개인의 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국가적 차원에서 창의적 문화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상에서의 시민 주체적 생활문화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생활문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률에 의하면 생활문화는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즉, 문화복지가 공급자 지향적 문화향유에 가까운 개념이라면 생활문화는 수요자 참여적 문화활동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가능하다.

〈표 3-6〉 생활문화관련 법적기반(「지역문화진흥법」)

구분		내용
2조	정의	(생활문화)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
7조	생활문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활동지원 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 운영자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 가능
8조	생활문화 시설 확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가능,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무상으로 사용 가능,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
9조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 등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강구,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 우선 시행

자료: http://www.lawnb.com (2017.8.10.검색)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정책의 하나로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향유 정책이 추진되면서 생활문화정책 개발 및 확산이 문화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주요 생활문화정책으로는 생활문화센터조성 및 운영활성화 지원,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이 있다.

〈표 3-7〉 문화융성-생활 속 문화확산

사업명	세부사업
1.생활 속 문화공간 조성 등	1-1.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지역단위 커뮤니티 문화활동 지원
	1-2. 생활 속 작은 영화관 확대
2.체감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2-1. '문화가 있는날' 시행
	2-2. 가을 문화축제 시행
3.참여형 문화예술활성화	3-1. 문화봉사단 구성운영
	3-2. 원로대중문화예술인 공연지원
	3-3. 어르신 참여 문화프로그램 지원 확대
4. 문화복지정책개선	4-1.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이용편의제고
	4-2. 소외계층 문화순회 및 지역공연장 우수공연 지원

자료: 문화융성위원회(2013). 문화융성시대-문화가 있는 삶 8대 전략목표

〈표 3-8〉 박근혜정부의 생활문화관련 정책

사업명	지원주체	예산규모(단위:억원)			지원대상	내용
		15	16	17		
생활문화 센터조성	문화체육 관광부	120	136	624	생활문화센터	센터조성비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생활문화 진흥원	15	5	6.5	생활문화센터	컨설팅, 프로그램 및 운영자지원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생활문화 진흥원	20	16	24	생활문화 동호회/단체	프로그램운영지원, 축제지원, 전국생활 문화제 개회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지원	한국문화원 연합회	12	10.8	10.8	지역기반단체, 기관,시설, 주민조직	사전활동비, 공동체형성 활동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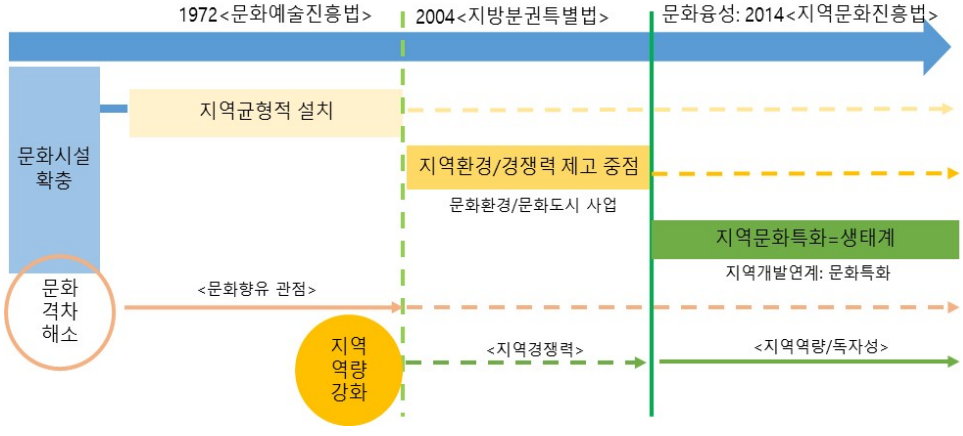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문화정책관 예산집행계획, 2017.1

특히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사업은 생활문화정책의 국정과제로 2014년부터 추진되어 2017년 8월 현재 125개소를 선정하여 68개소를 운영하고 57개소의 공간을 조성 중이다.[19)]

2) 지역문화진흥: 지역균형 vs 지역특화

지역문화진흥정책은 1983년 '지방문화예술활성화종합계획' 및 2014년 '지역문화진흥계획'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된 지역문화정책을 살펴보면 '지역균형'과 '지역특화'로 요약된다. 지역균형차원에서는 80-90년부터 추진된 지역 간 문화격차해소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향유 정책이 대표적이다. 지역특화정책은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이 본격화되자 지역경쟁력제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문화도시 및 문화환경, 문화지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후 점차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서 창의역량 및 문화자원 등이 강조되면서 2013년 「문화기본법」 및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함께 지역문화정책은 지역 균형적 문화시설 확충에서 지역개발과 연계한 문화특화와 지역문화의 독자성(자립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림 3-3〉 지역문화진흥정책 흐름도



19) http://www.nccf.or.kr(2017.8.15), 생활문화센터현황

가. 지역균형: 문화시설 균형적 배치

지역문화정책의 틀에서 문화시설 정책 흐름을 살펴보면 1970-80년대는 국립중앙박물관, 예술의 전당 등 국가차원에서 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문화시설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면 1990년대 이후부터 문화복지 및 지역 간 문화격차해소 등을 목적으로 지역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에 주력하였다. 2000년대 이후는 지역경쟁력 및 생활문화 제고 측면에서 문화시설 조성을 시작한다. 지역경쟁력 측면에서는 지역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랜드마크)로서 문화시설을 인식하여 전략적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생활문화측면에서는 지역주민을 관람자에서 참여자로 인식하여 생활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있다[20].

(1) 문화시설 정의 및 분류

문화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역문화진흥법」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표 3-9〉 문화시설의 정의

구분		내용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1항3호)	「공연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시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을 의미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6호)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함(시설 그 체와 그 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포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연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시설,「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조)」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문화산업진흥법(제2조 제12, 13호)」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과학육성법(제2조 제 1호)」규정에 의한 과학관 등을 의미

20) 김효정,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P24-26

구분		내용
생활 문화 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2항),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및 청소년문화의집,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동법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문화시설은 일반적으로 기능 및 운영방법, 시설규모 등에 따라 분류하지만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시설 총람은 기능별 분류를 토대로 하며, 각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운영된다.[21)]

〈표 3-10〉 문화시설 법적 분류

분류		근거법	규정
전시 시설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도서관*		도서관법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공연 시설	문예 회관	문화예술진흥법	연주회·무용·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학술행사 등의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	공연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및 장소
	영화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
지역 문화 복지 시설	구민 회관	지방자치법	구민의 종합복지 및 편익시설의 제공, 문화의식의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문화의 집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21) 김효정(2014),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P18-19 재정리, 표 2-4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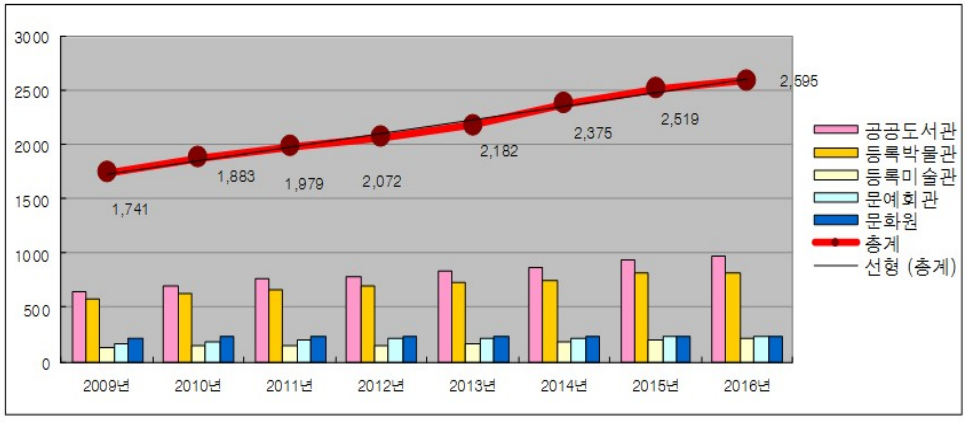
분류		근거법	규정
문화 보급 전수 시설	지방 문화원	지방문화원 진흥법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국악원	문화예술진흥법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전수 회관	문화예술진흥법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주: *「건축법 시행령」에는 도서관을 교육연구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용도별로 건축물을 구분한 것이므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구분을 따름

(2) 지역 문화시설 배치

문화시설은 2016.1월 기준 2,595관(국립도서관 1, 공공도서관 978, 박물관 826, 미술관 219, 문화회관 229, 지방문화원 228, 문화의 집 114관)이 있고[22], 2019년 목표를 3,375관으로 계획하고 있다.[23] 문화시설 공급 및 배치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연구, 2004〉 및 OECD 주요국가 문화서비스 기준을 근거로 문화시설별 확충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관련법에 의한 설치기준에 의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시설에 따라 국비 30-70% 정률보조형태로 지원/설치되고 있다.

〈그림 3-4〉 문화시설설치현황



22)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시설총람〉, 2016
2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계획 2020, 2014

〈표 3-11〉 문화시설 공급기준(문화체육관광부)

구분	내용
도서관	- 매5년마다 수립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에 의해 설치 - 2018년까지 1,100개관을 건립할 것을 목표(4만 5천명당 1관) (OECD 주요국가 서비스 기준인구 2~4만당, 기존 5만명당에서 상향조정) -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의 국고보조 40% - 도서관 입지: 인구밀집지역, 도보 15~20분(반경 1~1.5km)접근 규정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05~11, 04년 수립)에 의해 설치 - 박물관/미술관: 인구 15만명 당 1관(OECD 평균 기준 3.7만명당 1관) - 문예회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당 1개소 기준 *광역시/도청소재 1관 추가가능, 대도시 인구기준으로 건립 허용, 시 단위 기초 인구기준에 따라 건립(인구 50% 증가시 1개소 추가건립 가능), 군단위 기초는 최소기준(자치단체당 1관 및 인구 50% 증가시 1개소 추가 건립 가능) - 공연장: 별도의 시설배치기준 없음

최근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시설이 다수 있지만 접근성 및 프로그램 등이 실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역특성, 문화시설 서비스 권, 인구특성, 접근성 등을 고려한 문화시설 배치기준이 새롭게 제안되고 있다.

〈표 3-12〉 문화시설 공급(배치)안

구분	접근성	서비스 범위	생활권	공급기준
공공도서관	도보 20분 이내	12.1~15.7㎞	소생활권	지역특성도 (도시/농어촌), 기존시설 서비스권역, 인구수, 청소년계층비율, 재정립도, 서비스 수요
생활문화시설	대중교통 30분 이내 자가용 30분 이내	25.2~25.9㎞	중하생활권	
문예회관		28.4~29.9㎞	중하생활권	
박물관		37.9~39.7㎞	중하생활권	
미술관			중상생활권	

주: 생활권은 소생활권(근린생활권으로 읍/면/동 범위), 중하생활권(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범위), 중상생활권(인접한 복수의 시/군/구 범위), 대생활권(대도시)으로 구분됨
자료: 양혜원(2015),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배치방안 연구, p162 표 5-6 인용

나. 지역특화: 문화도시 및 특화문화를 매개한 지역개발

1985년 시작된 유럽의 문화수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도시발전에 있어 문화자원 및 문화역량 등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경쟁력과 지역문화의 관계성에 주목하면서 지역특화정책의 일환으로 문화도시 및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즉 기존의 문화시설 중심의 점적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 및 지구,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면적 정책 형태로 「지역문화진흥법제정」 및 '지역문화진흥계획 2014'을 통해 구현하려는 '지역문화역량강화', '지역문화격차해소', '지역문화발굴창조' '지역문화브랜드 구축' 등을 포괄하고 있다.

(1) 문화도시 조성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초기 형태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비롯하여 지역거점문화도시조성(경주역사도시, 부산영상문화도시,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등) 사업이며, 지자체별 문화도 조성사업을 견인하게 된다.

〈표 3-13〉 지역거점문화도시 사업추진현황

구분	사업비	사업기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약 5.3조원	2004~2013(20년)
부산영상문화도시조성사업	1,600억원	2004~2011(8년)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약 1.7조원	2007~2026(20년)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약 3.3조원	2006~2035(30년)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약 1.2조원	2009~2030(22년)

이후 2004 유네스코 '창조도시네트워크사업'과 함께 창조도시 개념과 혼재되지만 지속적으로 지역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지역문화진흥법」제정을 통하여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지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표 3-14〉 문화도시 법적기반(「지역문화진흥법」)

구분		내용
2조	정의	(문화도시)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
		(문화지구)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해 지정된 지구
15조	문화도시 지정	1.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 지정 2.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창조성/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문화도시 지정신청 3. 문화도시조성기본방향, 문화도시 지정분야별 특성화계획, 문화도시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투자재원에 관한 사항 등 조성계획 작성/승인
17조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18조	문화지구 지정/관리	1.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지구 지정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의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 4.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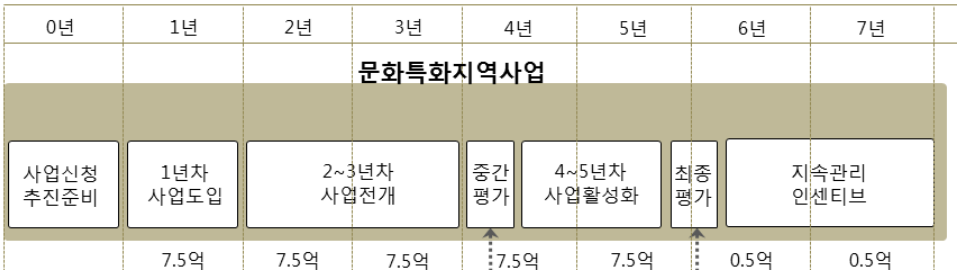
자료: http://www.lawnb.com(2017.8.10.검색)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하나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 지역자체를 브랜드화 하여 지역문화활성화 및 지역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도시형과 마을형으로 구분하여 2017년 현재 수원팔도문화마을 등 52개소에 7,716백만 원 예산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문화도시형의 경우는 연간 7.5억 원(국비3억 원) 예산 규모로 예비단계를 거쳐 5년 동안 추진되며, 문화마을형의 경우는 연간 2억 원(국비 0.8억 원) 규모로 예비단계 없이 3년간 추진된다. 특히 문화도시형의 경우 사업기간 이후에도 평가를 통해 2년간 사업 운영/관리를 지원 할 계획이다.

〈표 3-15〉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현황(2016)

구분	문화도시형	문화마을형
추진규모	10개소	16개소
사업예산	연 7.5억(국비 3.0/정률보조 40%)	연 2.0억원(국비 0.8/정률보조 40%)
사업기간	예비단계, 본 사업 5년	3년
추진방식	공모사업	공모사업
선정기준	문화적 핵심가치, 가능성 사업추진협의체 및 실행조직구성 사업계획 구성 및 실현 가능성	마을공동체의식 사업추진협의체 및 실행조직구성 사업계획 구성 및 실현 가능성

〈그림 3-5〉 사업추진 절차(문화도시형)



(2) 특화문화를 매개한 지역개발

구겐하임미술관을 매개로 도시재생의 계기를 마련한 스페인 빌바오 등 세계 여러 도시의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지역문화 특화를 통한 지역개발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도시 및 지역재생, 지역개발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2013년 「도시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는 도시재생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전통시장활성화사업(문전성시)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에서 문화를 접목한 지역특성화계획이 시도되고 있다.

〈표 3-16〉 도시재생 길라잡이(Ver1.0)에 나타난 문화연계 기법

구분		내용
직접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자원조사 및 활용, 지역자산연계활용
	지역공동체 생활축제	주민주도 기획/추진, 인적/물적 자원네트워크 및 인력 양성
	문화예술진흥사업	축제 등 자체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운영, 예술인-지역민 네트워크, 장소지원
	예술매계 도시재생	창작예술촌, 아트마켓 등 문화예술자원 활용
직/간접	도시재생거점시설 조성	거점시설로 문화시설, 문화단지 등 조성
	상가신탁/창업지원	예술창작공방, 문화기획기업등 창업
	전통명가발굴 및 인증	명가 및 명인(무형문화재급) 운영 전문상점 발굴 가치화
	마을기업운영	공예공방, 창작공방 등 아트비즈니스, 역사무화자원기반 교류거점 구축 등
간접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	마을사업발굴, 주민참여과정 등 생활문화로 접근, 문화프로그램 적용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디자인 프로그램	사업발굴 및 활용계획 수립
	주민참여계획지원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도구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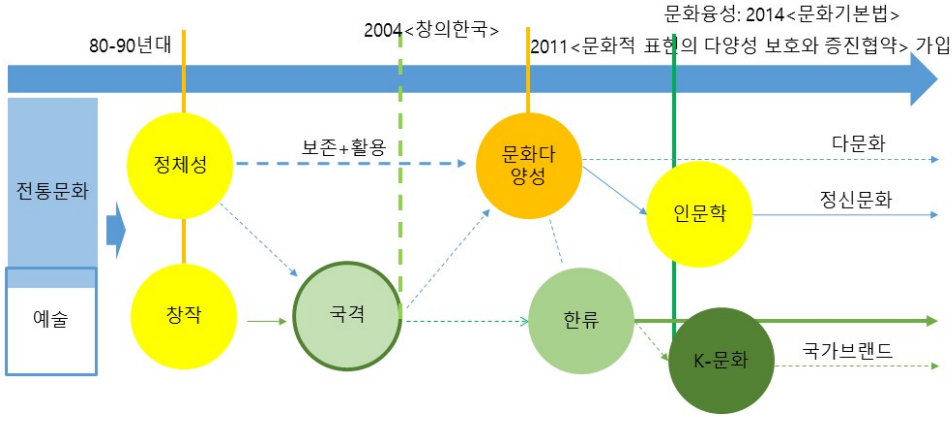
3) 국격 제고: 전통문화 진흥 vs 국가브랜드 구축

국가정체성 및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문화정책은 전통문화진흥 정책을 토대로 국제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문화정책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문화유산보존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다 80년대 이후 문화정책은 크게 전통문화정책과 예술정책으로 양분된다.

전통문화정책은 1999년 문화재청 설립과 함께 문화유산 정책과 전통문화 진흥정책으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면서 전통문화 진흥정책은 국가문화정체성 및 정신적 가치 제고 등에 역점을 두게 된다. 예술정책은 국가창의/문화적 수준 및 역량을 가름하는 지표가 됨에 따라 창작기반조성 및 지원,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2000년대 이후 국제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자 '문화다양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한국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가 시작되자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문화정체성 및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2014년 「문화기본법」을 토대로 국제사회와의 관계 속에서는 문화다양성 확보와 국가브랜드 구축을 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국가의 정신적/문화적 역량제고 측면에서는 '인문학'을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림 3-6〉 국격제고를 위한 정책 흐름



가. 전통문화진흥

대한민국 수립 이후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고 1990년 문화부가 신설되기 전까지 문화정책은 '문화유산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문화재청 설립으로 문화재관련 사무가 분리되면서 전통문화정책은 한글가치 확산, 한국문화발굴 및 알리기 등 국가 및 지역 정체성, 문화성을 확립하는 정책에 역점을 두었고 최근 문화융성정책을 통해 전통문화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3-17〉 문화융성-전통문화의 생활화

사업명	세부사업
1. 전통문화 가치 규명 및 문화적 정체성 확립	1-1. 한민족아카이브 구축/운영
	1-2. 학교전통문화교육강화
	1-3. 지역고유 전통문화 발굴/활용 지원
2. 문화유산자원의 현대적 활용	2-1. 궁중문화축전 등 궁궐 활용 프로그램 강화
	2-2. 서원/고택/폐사지 등 전통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 확대
	2-3.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및 공연/전등 등 전승사업강화
	2-4.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3. 전통의식주 생활양식의 보존과 육성	3-1. 한복진흥센터설립, 한복산업활성화지원
	3-2. 경복궁 소주방 건립 및 궁중음식문화프로그램 개발
	3-3. 한식당 대상 대장금 표준레서피 제공 및 공동홍보 등 지원
	3-4. 전통한옥지구 보전/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육성책 추진
	3-5. 시대별 건축재료/기법 연구 및 전통건축부재 센터 건립

자료: 문화융성위원회(2013), 문화융성시대-문화가 있는 삶 8대 전략목표

2000년대 이후 교통/정보기술의 발달과 국제경제교류 등이 활발해지면서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문화 정체성 확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국제적으로는 문화다양성 정책, 국내적으로는 정신문화 가치(인문학진흥)제고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 문화다양성

1991년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국제사회는 급격하게 경제자본에 의한 단일시장으로 통일되고 있으며, 국가나 지역 간의 경계가 없이 자본이 교환되는 세계시장으로 대체되고 있다. 아울러 경제자본에 의한 특정 국가의 문화가 다른 국가의 문화를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국의 문화정체성 및 고유성 보호에 대한 보수적 태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선언〉과 2005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협약〉을 기점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문화정책대상으로서 문화다양성을 채택하여 '창의한국'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년 7월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한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문화다양성을 '집단과 사회가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으로써 전승된 방식 이외에도 각 집단과 사회의 예술적 감수성에 유통되는 다양한 양식의 예술적 표현을 포괄하는 것으로 인류 공동으로 존중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보편적 가치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 여성, 유학 및 업무 등 다양한 형태로 외국인 유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문화다양성 협약과 다소 차이가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17)' 등에 근거하여[24] 외국이주민의 한국문화 이해를 통한 성공적인 한국 정착 등에 초점을 둔 다문화정책으로서 '문화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2) 인문가치 정립 및 확산

2000년대 이후 국제경쟁시대를 맞아 한국문화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는 한편 지식/창조산업으로서 국제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위해 한국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후 세계화 시대가 급진적으로 진행되면서 국가를 넘어 개인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개인의 문화역량이 사회와 국가의 역량을 가름하는 지표로서 중요시 되면서 정신문화, 인문학 등으로 보다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을 시도한다. 2014년부터 「문화기본법」과 '문화융성정책'을 통하여 인문가치 정립 및 확산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실제, 인문학과 연관된 언론 검색 결과를 보면, 개인과 사회, 경제와 강한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창조경제와의 연관성이 높다. 전통문화콘텐츠는 인문정신문화를 이루고 인문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문제 개선과 치유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인문학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25]

---

24) 김효정,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국내이행에 관한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25) 노영순, 문화융성 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5 p78

〈표 3-18〉 문화융성-인문가치 정립 및 확산

사업명	세부사업
1.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1-1. 인문정신진흥법 제정 및 전담부서 설치
	1-2. 인문정신문화종합계획수립
2. 인문정신문화의 가치정립과 연구기반조성	2-1. 인문학 자원 사업의 평가기준 개선
	2-2. 인문정신문화 대토론회 개최
3. 인문정신문화 교육확산	3-1. 학교교육을 통한 인문가치 확산
	3-2. 고전도서 보급 및 고전문헌 현대화
4. 인문정신문화의 대중화와 사회풍토조성	4-1. 전국적인 인문학 확산 분위기 조성
	4-2. 길위의 인문학 확대시행

자료: 문화융성위원회(2013), 문화융성시대-문화가 있는 삶 8대 전략목표

■ 길 위의 인문학

무한경쟁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적/예술적/문화적 역량의 기본이 되는 인문학 진작을 목표로 전국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http://www.libraryonroad.kr/〉
-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이용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맞춤형 인문학 강연/탐방 운영
- 영상콘텐츠 제작보급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http://www.museumonroad.org〉
- 전국 국/공/사립/대학박물관 120개 참여
- 박물관 콘텐츠와 인문학이 접목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선정 및 지원
- 스마트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선정 및 지원
-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구축

나. 국가브랜드

국제간 경쟁시대에 맞추어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전략 실행방안연구(2002)〉연구 등을 통해 한스타일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국가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규정(2008)」을 통해 국가브랜드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국가브랜드 및 상징체계 개발 추진체계 운영에 규정(2015)」을 토대로 대한민국

통합이미지 구축을 위한 국가브랜드 개발 및 홍보/확산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코리아프리미엄 창출 등을 시도하였다. 실제 2016년 7월 국가브랜드 슬로건 '크리에이티브코리아'를 개발[26]하였으며, K-ART 전략을 발표한다.

(1) 한스타일 육성

2000년대 후반에 추진한 전통문화정책을 기초하여 2005년 6월에 수립된 〈한 브랜드화 지원전략〉을 수정/계승하여 2007월 '한스타일 육성종합계획'을 발표한다. 한스타일 육성계획은 '전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6대 분야(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국악) 지원 전략에는 22개 과제 101개 소과제가 포함되었다[27].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K-스타일사업'으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더불어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우수문화상품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한국문화를 브랜드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표 3-19〉 2017년 문화체육부 한스타일 육성지원 사업

사업명	내용
한국적 생활문화공간발굴	한국적 공간 조성 시범사업, 한국적 공간 연구 및 개발, 한민족 정보마당 사이트 구축/확산 등
한지분야지원	한지상품개발 경연대회, 한지 세계화 전략 세미나, 한지 소재 활용 해외홍보, 독일페이퍼박람회 등 국내외 박람회 참가, 한지품질표시제 확산 등
한복분야지원	한복의 날 행사개최, 민간단체한복사업 지원 국제행사 계기 해외 한복홍보, 찾아가는 한복교육, 신한복 개발 및 전시, e-뮤지엄 구축 등, 한복진흥센터 지원
국빈방한계기 전통문화세계화	한식문화 프런티어 프로그램 개발/운영, 특집방송 제작/방영, 전통한식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모전 등

26) 2017년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브랜드 슬로건 〈코리에이티브 코리아〉 가 표절의혹 등 여러 논란으로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해 국가이미지 제고하는 정책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외부 평가 등을 고려하여 사용중단"을 결정/발표 하였다. 현재 새로운 국가브랜드 슬로건 개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27)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정책의 성과와 반성, 2015, p89-145

■ 우수문화상품지정제도(2015.11)

우리전통문화의 저력과 핵심가치의 재발견, 우수한 문화상품에 대한 일관성 있는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창출을 목표로 국가브랜드 개발과 연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협업을 통해 식품/한식, 한복, 공예,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콘텐츠(캐릭터, 만화), 디자인상품 등 우수문화상품 지정/육성할 계획

-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근거
- 지정기준: 정량평가(안전, 환경, 품질)와 정성평가(문화상품의 완성도, 문화적 가치, 문화생활기여도, 수출가능성)
- 우수문화상품 수출 마케팅 및 육성지원 추진

K-RIBBON SELECTION KOREA

자료 : https://www.kribbon.kr

(2) K-ART, K-스타일

1990년대 후반부터 한류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주목받기 시작하고, 2000년 후반 K-Pop 열풍이 불면서 한류는 정부 문화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최근에는 기존의 드라마나 K-Pop과 같은 대중문화중심에서 한국문화전반으로 폭을 넓히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K-Art, K-Culture 형태로 나타난다.

K-Art는 드라마와 K-Pop 등 대중문화로 대표되던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한국예술이 한류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2012년 'K-ART 발전전략'으로 정책화되고 있다. 발전전략은 세계와 함께하는 우리 문화예술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4대 지원전략 및 10대 핵심과제와 분야별(문학/미술/공연예술/클래식음악/전통예술/공예)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K-Culture는 전통문화, 문화예술, 대중문화 등 모든 한국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화콘텐츠산업발전을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과 전통문화브랜드화를 위한 K-스타일허브 구축사업으로 대표된다.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은 문화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 구상된 종합적 운영정책으로 2015년 출범하였으며 문화융합 창조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k-컬쳐밸리 등으로 구성된다.

반면, K-스타일허브는 정보제공 중심의 관광안내에서 벗어나 한국의 문화와 음식, 전통을 쉽게 체험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3-20〉 대한민국, K-ART 발전전략

사업명	내용
대표적 문화예술 콘텐츠 육성	문화예술전문펀드조성(창작뮤지컬 지원) - 국내재공연 및 해외진출 지원, 뮤지컬 아카데미신설 아리랑 브랜드화 - 아리랑 페스티벌 개최 인류문화유산 등재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K-ARTS 아카데미운영 - 방송PD/작가, 콘텐츠 기획자 등 전통예술교육 제공 한국예술영재학교설립
문화예술과 산업/기술의 만남: 스마트 문화예술 창조	문화예술의 첨단화 - 기업경영, 산업제품, 기술개발 등에 문화예술인력/아이디어 도입
한류 지속화를 위한 문화예술 교류	재외문화원 중심 해외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브랜드축제 개최 아시아 문화예술창작공간조성

■ K-스타일 허브 구축(2015-16)
목적 : 한국을 차리다라는 한식중심 통일된 컨셉과 테마로 전통-현대-미래를 아우르는 한류관광거점 조성
방향 : CEL벤처단지, 아카데미 우수상품을 현장에서 구매, 융복합공연장에서 체험 등 기능집적으로 기업-소비자 논스톱 연결 강화
내용 : 전시관-전통의 재현: 한식을 통해 이해하는 한국전통문화
체험관 : 현대의 재해석: 직접맛보고 만들어 보는 한식체험
아트마켓관-미래지향 : 벤처상품전시, 한복, K-Product 쇼핑 등 문화상품

3. 소결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추진 경과를 살펴봤을 때 초기 문화정책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에 대한 정책 즉 문화재정책을 펼치며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경제발전 흐름에 따라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당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의 주 대상이 문화예술인에서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되며 문화발전계획을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문화복지 개념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문화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와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문화콘텐츠 지원,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지역의 문화특화를 위하여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문화자원 할용 및 지역문화 브랜드화 등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이루고 있다. 2000년 후반에 들어서는 한류문화의 발전과 함께 국제화시대에 맞게 우리문화브랜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문하예술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 등 산업적 측면에서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금의 문화정책은 4차 산업시대와 함께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다.

한편 앞서 해양문화 정책의 단계가 국내 문화정책과 비교하여 발전수준을 평가하였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해양문화 정책이 문화정책의 초기 단계인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계승의 단계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존 해양문화의 연구 동향이 해양역사와 유산 측면의 접근이 많은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국내 문화정책의 추진이 전통문화계승→문화시설확충→문화복지실현→문화산업융성 등의 수준과 비교할 때 해양문화는 기존 문화정책의 추진에서 등한시된 경향이 있으며, 전체적인 해양정책에 있어서도 해양문화가 소외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우리나라 해양문화 정책 추진 동향

1. 해양문화 정책 추진 경과

우리나라 해양문화 관련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및 해양관광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과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

1)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28]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간 해양과 관련된 타 국가 계획과의 조화 및 연계를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국가의 종합계획이며, 2000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된 이래 현재 제2차 계획이 추진 중이다.

가.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00~2010)은 '청색혁명을 통한 해양부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기본목표로 생명력 넘치는 해양국토 창조, 지식기반을 갖춘 해양산업 창출,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을 내세웠다. 7대 추진전략과 이에 따른 21개 정책과제 중 해양문화와 관련된 정책과제나 세부과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일부 포함되었다.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계획으로는 마리나나 크루즈항만 등 기반시설 확충, 해양관광 거점 도시 육성 등 인프라 확충 및 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이 대부분이다. 다만, 해양박물관이나 과학관, 민속전시관 건립 등 해양문화와 관련된 시설 확충, 박람회 개최 추진 등 인프라 확충 계획의 부분으로 해양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계획 추진을 위한 수단 및 방법인 계획의 실천력 강화 전략 차원에서 범국민적

---

28)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 · 보전, 개발 · 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중 · 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며,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해양의 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자원의 관리 · 보전 ·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의 발전기반 및 환경보전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도서(島嶼,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된 도서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8.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개발 등의 종합적 · 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

해양의식 함양을 다루는 수준에 그쳤다. 다시 말해 추진전략이나 정책과제, 세부과제 등 주요 정책계획이 아닌 세부 사업내용 중 하나로 다루어져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해양수산을 비롯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적 정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한 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연동계획(2004~2010)은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기본목표를 유지하면서도 7대 추진전략, 27개 정책과제, 135개 추진과제로 세부 내용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 특히 해양문화와 관련된 추진전략으로 '해양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이 추가되었으며, '해양문화·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문화·관광 발전여건 조성'이 하위 추진과제로 포함되었다.

〈표 3-21〉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연동계획의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구분	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00~2010)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연동계획(2004~2010)
1	생명·생산·생활의 해양국토 창조 1. 미래형 연안국토관리의 실현 2. 200해리 시대에 걸맞는 해양주권 관리 3. 글로벌 해양기지 개척	좌동
2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4. 해양수질의 입체적 관리 5 해양생태계의 보전 6. 해양사고의 통합적·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4. 해양환경의 과학적·체계적 관리 5. 해양생태계의 보전 6. 해양사고의 통합적·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7. 해양재난·재해의 과학적 대응
3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 진흥 7. 해양수산 벤처산업의 육성 8. 첨단해양과학기술의 산업화 9. 해양수산 정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10.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력 제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구축 8.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 9.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확보 10. 수산업의 경영기반 강화와 지속적 발전 11.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 확충
4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서비스산업 창출 11.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기반 확충 12.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	동북아 해운·물류중심지 구축 12. 항만중심의 국제물류산업 촉진 13. 항만관리·운영의 선진화 및 효율화 제고

구분	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00~2010)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연동계획(2004~2010)
	13. 수산물 유통·가공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14. 해양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14. 동북아 물류거점화 실현을 위한 항만인프라 조기 확충 15. 해운하기 좋은 나라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16. 해운·물류 네트워크 구축 및 연안해운 활성화
5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15. 자원관리 및 기르는 어업 정착 16.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활력있는 어촌 조성	첨단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 17. 미래 해양자원 탐사 및 관련 핵심기술 개발 18. 첨단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19.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탐사 및 핵심기술 개발 20.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 육성 21. 해양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
6	해양광물·에너지·공간자원의 상용화 17. 해양광물자원의 상업생산기반 구축 18. 해양에너지자원의 실용화	**해양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 22. 해양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한 해양자원 개발 **23. 해양문화·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24. 해양레저·스포츠 기반 확충 **25. 해양문화·관광 발전여건 조성**
7	전방위 해양수산외교 및 남북협력 강화 19. 글로벌 해양수산외교의 주도적 전개 20. 남북한 해양수산협력 활성화 21. 범국민적 해양의식 함양	전방위 해양수산외교 및 남북협력 강화 26. 글로벌 해양수산외교의 주도적 전개 27. 남북한 해양수산협력 활성화

연동계획의 해양문화와 관련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2개 정책과제와 8개 추진과제가 설정되었다. ‘해양문화·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생태·문화자원의 효율적 활용, 국립 해양박물관 및 지역별 전문박물관 건립, 항만시설을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 국민생활과 함께하는 새로운 해양문화 창달이 포함되었으며, ‘해양문화·관광 발전여건 조성’을 세부 추진과제로 해양관광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별 해양관광교육 프로그램 시행 및 해양관광발전협의회 구성, 해양지향형 국가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해양개척정신을 국민의식으로 정착, 법·제도의 정비가 설정되었다.

〈표 3-22〉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연동계획) 중 해양문화 관련 추진과제

추진전략	정책과제	추진과제
해양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	해양문화·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1. 생태·문화자원의 효율적 활용 2. 국립 해양박물관 및 지역별 전문박물관 건립 3. 항만시설을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 4. 국민생활과 함께하는 새로운 해양문화 창달
	해양문화·관광 발전여건 조성	1. 해양관광정보시스템 구축 2. 지역별 해양관광교육 프로그램 시행 및 해양관광발전 협의회 구성 3. 해양지향형 국가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4. 해양개척정신을 국민의식으로 정착 5. 법·제도의 정비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으로는 박물관, 과학관, 수족관 등 해양문화에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해양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창작 지원 및 해양관광 DB 구축,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및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이 포함되었다.

〈표 3-23〉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연동계획) 추진과제의 세부내용

추진과제	세부내용
생태·문화자원의 효율적 활용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광수요 해소 :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관리 확대, 해양생태계 체험시설 조성 - 갯벌관련 문화행사 지원 및 명예 습지생태안내인 제도 활용 - 등대, 해양연구시설, 해양조사선박 등 개방해 문화·관광 장소로 활용
국립 해양박물관 및 지역별 전문박물관 건립	-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 지역특성에 적합한 전문 해양박물관 건립 - 권역별 거점 해양관광도시에 해양과학관 및 수족관 건립
항만시설을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	- 폐쇄형 노후 항만시설을 선진국형 공간으로 개량·현대화 : 수변공간을 항만녹지공간, 문화·휴식공간, 레저 및 서비스 공간으로 정비, 여객선 터미널지구는 해안광장으로 개발 등
국민생활과 함께하는 새로운 해양문화 창달	- 해양 전문 케이블 TV 등을 통한 신속한 정보전달,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 해양문화 창작 장려 : 해양수산공모전, 해양문학의 밤 등 - 해양문화 분야 학술·연구활동 지원

추진과제	세부내용
해양관광정보시스템 구축	- 해양관광 DB 구축, 해양관광 전문 포털 구축 - 해양관광정책 지원시스템 구축 - 해양문화·관광, 해양레저·스포츠, 해양과학 등 연계된 종합해양문화정보망 구축 - 사이버 해양대학·해양박물관·해양수족관 개설
해양지향형 국가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해양홍보 강화 : 바다의 날 국민축제로 승화, 전국 해양문화축제 개최, 지역별 풍어제를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 매스컴과 협력, 해양문화 강좌 개설 등 - 청소년 해양교육 강화 : 해양교육 포털 구축, 프로그램 마련, 교사 대상 해양교육 프로그램 공모 및 교재 발간, 일일명예교사제 확대, 해양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해양 탐구 학습관 조성, 교과서의 해양관련 내용 수정·보강, 해양환경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 해양수산총연합회 설립 - 해양관련 NGO와 협력 강화(민간단체 지원·육성)
해양개척정신을 국민의식으로 정착	- 장보고 해양개척정신을 국민의식으로 정착 : 장보고 연구회, 해양역사 교육공간 확보, 대중매체 및 교육을 통한 장보고 정신 확산 - 해양관련 인물의 재조명을 통한 해양개척 정신의 국민의식 정착
법·제도의 정비	- 해양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법 제정 추진 등 제도정비 - 해양문화·관광 정책 수요 해소 및 정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정책 집행을 위한 수단이자 실천력 강화 전략 차원에서 범국민적 해양의식 함양을 다룬데 비해 연동계획에는 7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해양문화 육성을 위한 정책계획이 포함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각 추진과제 및 세부 내용이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비해 구체화되었으며, 개별 사업 측면에서도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하드웨어) 외에도 법률 및 제도 신설,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및 해양의식 고취 방안 마련(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사업계획이 다루어졌다.

나.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은 2008년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분리·이관된 업무 영역을 반영해 수립하였다.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해양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전통적 해양산업의 고도화, 신해양질서의 능동적 수용을 통한 해양 영역 확대의 3대 기본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세부적으로 5대 추진 전략과 26개 중점과제, 222개 실천과제를 수립하였으며, 5대 추진 전략 중 3번째로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의 육성'이, '해양문화 콘텐츠의 다양화'가 중점과제로 포함되었다.

〈표 3-24〉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구분	추진전략	중점과제
1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관리 실현	- 해양오염원의 통합적 관리체제 정착 - 해양생태계 서비스 질적 지고 방안 마련 - 통합적인 연안·해양 공간관리 기반 구축 - 연안지역 기후변화 적응·복구 체제 구축 - 해상안전관리체제의 선진화 및 첨단화 - 해사안전분야 국제화
2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 미래 해양자원 개발 - 해양산업의 핵심기술 개발 - 녹색성장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탐사 핵심기술 개발 - 해양과학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3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 관광의 육성**	-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 발굴 및 육성 - 해양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 - 해양관광 공간의 조성과 정비 - 해양관광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해양문화 콘텐츠의 다양화**
4	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항만 산업의 선진화	- 세계 해운시장 주도 및 국제협력 강화 - 경쟁력 있는 해운·항만 물류기업 육성 - 녹색 해운·항만의 실현 - 세계 초일류 허브항만 구축 - 친환경 레저도시형 부가가치 항만 개발 - 항만의 지방이관에 따른 항만개발관리 시스템 구축 - 항만 운영의 효율화 - 해사인력 양성
5	해양 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영토 관리 능력 강화 - 해양영토 개척을 통한 글로벌 해양경영 강화 - 남북한 해양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전체 222개 실천과제 중 해양문화와 관련되어서는 5개 실천과제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전체 실천과제의 2% 수준으로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연동계획)의 6%에 비해 해양문화 관련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해양문화 진흥과 관련된 2개 실천과제와 5개 세부 과제의 구체적인 정책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25〉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실천과제

추진전략	중점과제	실천과제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의 육성	해양문화 콘텐츠의 다양화	1. 해양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해양의식의 확산 - 해양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홍보를 통한 해양문화 친화성 강화 -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적 활용을 위한 해양의식 함양사업 추진
		2. 해양문화 인프라의 보급 및 확산 -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건립을 통한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 - 해양문화 축제의 육성을 통한 대국민 홍보기반 강화 - 해양교육시범학교의 지정을 통한 해양교육 기반 강화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점과제인 '해양문화 콘텐츠의 다양화'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해양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해양의식의 확산과 해양문화 인프라의 보급 및 확산이 포함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해양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홍보를 통한 해양문화 친화성 강화,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적 활용을 위한 해양의식 함양사업 추진,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건립을 통한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 해양문화 축제의 육성을 통한 대국민 홍보기반 강화, 해양교육시범학교의 지정을 통한 해양교육 기반 강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3-26〉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실천과제의 세부내용

실천과제	세부내용
해양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홍보를 통한 해양문화 친화성 강화	- 해양역사·문화자원 발굴사업 추진 - 해양문화 탐방 행사 개최 - 해양홍보 및 해양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해양에 대한 관심 유발, 친화성 제고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적 활용을 위한 해양의식 함양사업 추진	- 해양의식 함양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 해양의식 함양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원/관리 방안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건립을 통한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	- 전시공간 지원사업을 통한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 및 지역 박물관/수족관/과학관과 연계 네트워크 구축 - 범국민 해양문화유물 수집운동 전개, 해양문화 자료의 문화재 지정 촉진 - 해양생물자원관 건립 - 전국 해양문화시설 통합 협의체 운영 및 연계방안 추진
해양문화 축제의 육성을 통한 대국민 홍보기반 강화	- 해양의식 및 해양문화 고취할 수 있는 해양축제 육성 - 해양축제 평가시스템 구축, 우수 해양축제 지원 - 정부차원 행사의 홍보기반 강화
해양교육시범학교의 지정을 통한 해양교육 기반 강화	- 해양교육시범학교 운영 및 교재 발간 - 해양아카데미 설치 및 해양의식 교육 기회 제공 - 전문 해양의식 교사 양성 및 민간단체 육성

해양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세부 정책과제가 처음으로 포함된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연동계획과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해양문화 진흥 관련 세부 정책을 비교·검토해 보면 해양생태관광, 친수문화공간 조성, 해양관광정보시스템 구축, 법제도 정비 등 일부 추진과제는 해양관광과 관련된 항목 중 일부로 조정되었으며, 해양문화 인프라,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인식 제고 사업은 해양문화 부문의 주요 실천과제로 이어졌다.

〈표 3-27〉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해양문화 관련 세부내용의 연계성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연동계획(2004~2010)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12~2020)
생태·문화자원의 효율적 활용	⇨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국립 해양박물관 및 지역별 전문박물관 건립	⇨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건립을 통한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
항만시설을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	⇨	*연안공간의 정비를 통한 친수공간 조성 확산*
국민생활과 함께하는 새로운 해양문화 창달	⇨	**해양문화 축제의 육성을 통한 대국민 홍보기반 강화**
해양지향형 국가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해양교육시범학교의 지정을 통한 해양교육 기반 강화**
해양개척정신을 국민의식으로 정착	⇨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적 활용을 위한 해양의식 함양사업 추진**
	⇨	**해양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홍보를 통한 해양문화 친화성 강화**
해양관광정보시스템 구축	⇨	*해양관광자원의 활용 기반 구축*
법·제도의 정비	⇨	*해양관광자원 활용 기반 구축*

2)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29]에 근거하여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된 해양관광 분야의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각 분야별로 수립되는 개별 해양관광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즉,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은 해양관광 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자원의 보전·개발·이용·관리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휴식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의 진흥을 도모하여 건전한 해양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9)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03~2013)은 '바다를 삶의 질 향상이 보장되는 국민 생활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표 하에 연안친수·문화공간의 조성, 어촌관광의 진흥, 해상교통 관광기반 확충, 해양레저·스포츠 기반조성,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주요 추진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제1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은 참여정부 시기에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해양문화와 관련된 추진과제 및 단위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표 3-28〉 제1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구분	추진전략	중점과제
1	연안친수·문화공간의 조성	- 연안친수공간의 정비·확충 - 생태·문화관광의 촉진 **- 해양문화 체험공간의 조성** - 국민에게 다가서는 친수항만의 조성
2	어촌관광의 진흥	- 아름다운 어촌을 어촌관광의 추진거점으로 육성 - 어촌종합개발 사업의 관광부분 투자강화 -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내수면관광 기반조성 -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
3	해상관광 기반시설의 확충	- 항로 다양화 및 여객선 현대화 - 크루즈관광 사업 지원
4	해양 레저·스포츠 기반조성	- 레저선박의 대중화 **- 해양 레저·스포츠 육성 및 지원** - 레저낚시 활성화

주 : 중점과제 중 굵게 표시한 항목에 해양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중점 과제에 해양문화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련이 없거나 전시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 확충, 공간정비, 체험공간 조성 등 시설 마련과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다. 다만, 중점과제 중 '해양문화 체험공간의 조성', '해양 레저·스포츠 육성 지원'의 세부 사업으로 '철새도래지, 보호사구, 염전, 해양문화축제 등에 대해 해양문화 관광상품으로 개발 추진',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추진', '해양스포츠 제전 활성화를 통한 대중화 기반 마련' 등의 문화와 관련된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2023)은 2008년 폐지되었던 해양수산부가 2013년 부활하면서 수립되었다.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은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동북아 해양관광허브 실현'을 비전으로 하며,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과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발전'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5대 전략과제로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광,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 문화와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관광, 생활 속 이야기가 있는 정겨운 바다관광,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바다관광을 수립하고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배치했다.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는 전략과제 중 3번째로 '문화와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관광'이 포함되어 해양문화와 관련된 사항이 언급되었다. 또한 세부 추진과제로 '해양문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 '해양문화시설 확충', '해양문화도시 브랜드 개발'의 3개 항목이 설정되었다.

〈표 3-29〉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의 전략과제 및 추진과제

구분	전략과제	세부 추진과제
1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광	-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촉진 - 해양치유관광 육성 - 해양휴양공간 조성/정비 - 노후항만의 해양친수공간화
2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	- 생태관광 활성화 -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 마리나산업 고도화
3	**문화와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관광**	**- 해양문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 - 해양문화시설 확충 - 해양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4	생활 속 이야기가 있는 정겨운 바다관광	- 어촌의 관광자원화 - 테마가 있는 연안 조성 - 섬관광 활성화
5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바다관광	- 동북아 크루즈 허브 실현 -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 여수박람회장의 국제해양관광허브화 - 국제대회 및 행사 참여·유치

세부 추진과제 중 해양문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해서는 유·무형 해양자원의 발굴과 해양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해양문화엑스포 개최 추진 등의 사업을, 해양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국립해양박물관 운영 고도화, 지역별로 차별화된 해양문화시설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해양문화도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별 관광 특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연안도시 축제를 통한 해양문화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그 외 세부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3-30〉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의 내용

세부 추진과제	세부내용
해양문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	1. 유·무형 해양문화자원 발굴 - 해양문화자원 복원 및 체험상품 개발 - 해양문화 탐방지도 제작 2. 해양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 해양문화 콘텐츠산업 지원 기반 마련 3. 해양문화엑스포 개최 추진 - 해양문화엑스포 준비 및 개최
해양문화시설 확충	1. 국립해양박물관 운영 고도화 - 전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콘텐츠 지속 수집 - 해외박물관과의 상호교류 협력 추진 2. 지역별로 차별화된 해양문화시설 조성 - 중장기 해양문화시설 확충 로드맵 - 남해안해양복합체험센터 건립 - 해양과학교육관 건립 - 해상박물관/미술관 등 도입 검토
해양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1. 지역별 관광 특화 전략 수립 지원 - 도시 브랜드 개발 - 스마트 안내 시스템 개발 2. 연안도시 축제를 통한 해양문화관광 활성화 추진 - 연안 축제 다양화 - 이달의 축제 선정 및 연안 축제 홍보

2.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

정부는 국민들이 해양에 대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체험·교육공간이자 사회교육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박물관과 자원관을 설립하는 한편 친수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 관련 교재·콘텐츠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및 관련 대회 개최, 해양문학의 육성을 위한 문학상 및 글짓기 대회 운영, 학술대회 개최 등 해양문화 확산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관 및 단체로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재단과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이 있으며, 문화재청 산하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있다. 그 밖에 어촌체험마을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어촌관광 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어촌어항협회와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간행물 발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해양연맹 등 민간단체가 있다. 이하에서는 해양과 관련된 역사·예술·민속·산업·과학 등 고고학자료와 미술품, 학술적 자료를 수집·보관·진열하고, 일반인들이 해양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진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등대박물관 등 박물관 및 전시관을 제외하고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한국해양재단과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사업 영역 및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해양재단은 2012년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와 해양문화재단이 통합하여 출범한 기관이다. 주요 사업영역은 국민들의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 진흥사업, 우수해양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교육 및 청소년 장학사업, 해양관련 과학기술 및 학술연구사업, 출판물 발간에 의한 해양홍보사업, 해양 스포츠레저·관광·마리나 산업육성, 해양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해양관련 유관단체 활동 지원,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 평가사업 등이다.

〈표 3-31〉 한국해양재단 사업 영역

사업 분야	세부 내용
바다의 날 기념식	매년 5월 31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해양영토대장정	선박을 이용하여 해양도시/도서 지역(백령도, 가거도, 독도 등) 방문
독도 및 해양시설 견학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울릉도, 독도를 비롯한 동해안의 해양시설 견학
해안누리길 활성화 사업	전국 52개 해안누리길 노선 홍보, 바다여행 공모전
해양교육 교재 개발	일선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교재 제작
해양교육관계자 워크숍	해양교육관계자에 대한 해양교육능력 함양을 위하여 2009년부터 개최
해양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콘텐츠 개발, 해양교육 동영상, 지역해양체험자원지도, 교육과정 연계자료 등 개발
해양교육동아리 지원	매년 20개 내외 해양 관련 인문·문화·예술·과학·환경·연구·해양레포츠 등 동아리 활동 지원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2006년부터 시작되어 1인당 2편 이내의 바다 풍경, 수산, 해운, 항만, 관광레저 등 바다를 소재로 한 작품 출품
해양문학상 공모	해양수기, 시, 소설, 수필 부문 공모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 평가 사업	문화/학술/교육/홍보, 유적지 답사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전국 법과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등과 관련하여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내용들을 주제로 실제 국제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됨
해양영토 글짓기대회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영토(우리바다 영해, 섬, 남북극과학기지, 심해저 등)와 관련된 자유주제로 산문과 운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됨
해양영토 논문경시대회	해양영토 관련 자유 주제(인문/사회/법학 분야 한정)
해양학술정보 DB	단행본, 연구논문, 학위논문, 연속간행물, 해양교육자료, 도록 등

자료 : 한국해양재단, http://koreamaritimefoundation.or.kr(검색일 : 2017.8.30.)

한국해양재단은 문학상 운영을 통한 해양문학의 진흥, 장보고 등 해양인물 발굴 및 재조명, 해양사진전 개최 등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바다에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초등학생부터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교재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일엔 바다톡톡' 강좌를 통해 해양에 대한 지식과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그림 3-7〉 한국해양재단 사업 프로그램

자료 : 한국해양재단, http://koreamaritimefoundation.or.kr(검색일 : 2017.8.3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은 1962년 대한소년단 산하 단체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해양 관련 청소년 단체이다.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의 주요 사업 내용은 해양정신에 입각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회관·훈련소·야영장의 설치 및 관리, 각종 해양훈련 및 스포츠 활동, 국내외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활동,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각종 행사 지원 및 간행물 발간 등이다.

〈표 3-32〉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업 영역

구분	사업 내용
기획관리사업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교실 운영, 한국해양교육연구소 운영, 바다식목일 활동 확대, 해상국립공원 가꾸기 사업
홍보출판사업	해양소년단 소식지 발간
문화활동사업	해양소년단 리갓타(Regatta, 해양기능경기),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전국 카누/드레곤보트대회, 해양소년단 총재배 요트대회, 해양수산가족 청소년 여름해양캠프, 전국해양수산문화과학경진대회, 농어촌 청소년 체험활동, 해양안전실천본부 활동
훈육활동사업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추진, 단원의 해양레저스포츠 1특기 제도 실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해양영토지킴이 활동
연수활동사업	지도자1급훈련 개설, 바다해설사 자격증 연수
국제교류사업	국제청소년해양축제, 세계해양소년단연맹(ISCA) 하계교환프로그램

자료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http://www.sekh.or.kr(검색일 : 2017.8.3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양소년단 조직 및 운영,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교육 실시, 바다해설사 연수, 수상구조 및 매듭법 교육 등 실제 바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안전하고 예방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카약대회, 카누·드래곤보트대회를 비롯한 해양기능대회를 개최해 물놀이와 스포츠를 통한 친수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3-8〉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업 프로그램

자료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http://www.sekh.or.kr(검색일 : 2017.8.30.)

3. 소결

우리나라의 해양문화와 관련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에 등장한 시기는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연동계획이 수립된 2004년이라고 볼 수 있다.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해양문화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정책 집행을 위한 수단 차원에서 범국민적 해양의식 함양을 언급한 데 비해, 연동계획에서는 7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해양문화 육성을 위한 정책계획이 포함되어 기본계획에서 최초로 해양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각 추진과제 및 세부 내용이 종전의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비해 구체성을 띄게 되었으며, 개별 사업 차원에서도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외에도 법·제도 구축, 교육을 통한 해양의식 고취 등 다양한 사업계획이 추진되었다. 연동계획에서 다루었던 해양문화 육성 정책은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해양관광 육성 정책 및 해양문화 관련 실천과제로 이어졌다.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연동계획이 발표되기 1년 전에 수립된 제1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추진과제 및 단위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중점 과제에 해양문화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양문화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2013년 해수부 부활 이후 수립된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는 '해양문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 '해양문화시설 확충', '해양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등 추진과제를 포함하여 '문화와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관광'을 전략과제로 설정했다.

〈표 3-33〉 제1·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구성 및 연혁

구분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00~2010)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연동계획 (2004~2010)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11~2020)
추진전략	7개	7개	5개
정책과제 (중점과제)	21개	27개	26개
세부과제 (추진과제, 실천과제)	100개	135개	222개
해양문화 관련 세부과제 (추진과제, 실천과제)	없음	8개	5개
정부	국민의 정부 : 김대중 대통령 (1998~2002)	참여정부 : 노무현 대통령 (2003~2007)	이명박 정부(2008~2012) 박근혜 정부(2013~2016), 문재인 정부(2017~2022)
관광진흥 기본계획	-	제1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2003~2013)	제1차(2003~2013),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2014~2023)
추진과제 (전략과제)	-	5개	5개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	17개	17개
해양문화 관련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	없음	3개
비고	1996년 해수부 신설	2008년 해수부 폐지	2013년 해수부 부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양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이 수립되기 시작한 시기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04년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연동계획에서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신설 등 하드웨어와 법제도 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 확충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틀이 마련되었지만 일련의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재고가 필요하다.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등대박물관 등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서 추진했던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해양문화 축제 육성을 통한 홍보기반 강화, 해양교육 내실화, 해양의식 함양 및 해양문화 친화성 강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양교육 종합로드맵('17~'21)'을 수립한 것은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위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성 제시 및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길잡이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금번 로드맵 수립으로 우리나라 해양교육의 목표 및 방향성을 정립하는 한편 초·중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해양문화 관련 정책에 한정하여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연동계획 중 친수문화공간 조성과 법·제도 정비, 생태·문화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제2차 기본계획 중 해양역사·문화자원 발굴, 해양의식 함양사업 등이 상대적으로 해양문화 육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별 전문박물관이나 과학관, 수족관 건립 등 인프라 확충, 해양관련 인물의 재조명을 통한 해양개척정신 확산, 해양교육시범학교 지정 등의 정책은 해양문화 육성에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를 반영하여 향후 해양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은 신규 시설 건립을 통한 인프라 강화를 지양하고 이미 조성되었으나 활용도가 떨어진 공간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 잠재해 있는 해양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여 국민들이 바다를 보다 친숙하게 인식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자원의 보호를 통한 해양생태·문화자원의 지속가능한 향유를 위한 지원·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3절 국외 해양문화 정책 사례

1. 영국의 해양문화 정책

영국은 전통적인 해양강국 중 하나로 영국인의 문화와 생활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언제나 바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대서양의 섬나라인 영국에게 바다는 제패하지 않고서는 다른 유럽 강대국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으며, 외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바다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영국은 해양역사 및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운, 항만, 해양, 수산 등 해양 관련 산업들에 꾸준한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영국은 해양문화 정책(Marine Cultural Policy)이라는 정확한 문화정책은 부재하며 이에 본 장에서는 영국의 해양문화와 관련한 해양문화 유산 보존, 해양문화 관련 시설(박물관, 해양유산센터 등), 해양 교육, 해양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등의 측면에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해양문화 유산 보존

영국의 해양문화 유산 보존과 관련한 정책은 영국의 국가 유산 입법 및 정책 프레임에서 언급된다. 이는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지만 여러 형태로 해양에 적용가능하다. 선박 유적을 포함하여 영국 주변의 해양과 관련한 유적들은 다양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영국 Essex와 Kent 해안가 지역의 D-Day 시설(노르망디 상륙작전 관련 시설)이나 Humber 강어귀와 Solent의 바다 요새나, 등대와 같은 바다 시설 등이 해당된다. 현재 영국 연안지역의 유산 보존 지정은 주로 「난파 보호법 1973(Protection of Wrecks Act 1973)」[30]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문화미디어스포츠부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가 담당하고 있다. 법 제목이 암시하는 것과 같이 이 법은

30) 「난파선 보호법 1973」은 잉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영해에서의 역사적, 고고학적 또는 예술적 중요성이 인정된 난파선 보호에 대한 법안이다(http://www.legislation.gov.uk)

난파선의 유적을 지정하는데 사용되며, 난파선 유적이 있는 주변 지역을 지정할 때도 적용된다. 지정된 지역 내의 활동은 법에 따라 제한되며, 라이선스의 권한 내에서만 수행 가능하다. 보호지역의 지정은 영해의 한도(12해리, 약 22km)와 조수 간만 제한이 없는 조간대 및 강어귀 수역을 포함한 모든 수역에 적용가능하다. 2017년 기준 이 법안에 의거하여 보호되고 있는 난파선 및 지역은 총 53개이다.[31] 난파선에서 발견된 포터블 유산(이동식 유산) 역시 이 법에 의거하여 보호 받을 수 있다. 국토에서 발견된 유적 및 유산의 경우 「보물법 1996 (the Treasure Act 1996)」에 의거하지만 바다에서 발견되는 포터블 유산에 대해서는 「보물법 1996」에서 일반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해양 산업 및 해양 재생 에너지 부문과 관련한 모든 유형의 고고학 자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정서가 마련되어 있다. 「난파 보호법 1973」은 잉글랜드 뿐 아니라 웨일즈와 북아일랜드에서 적용가능하나 스코틀랜드의 경우 「스코틀랜드 해양법 2010 (Marine (Scotland) Act 2010)」[32]내「역사적인 해양 보호 구역지정 (Historic Marine Protected Areas, HMPAs)」이 개정되면서 이 법안 내에서 적용된다. 스코틀랜드는 HMPAs를 통하여 해양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난파선 또는 항공기 유적, 해상 운송 및 무역과 관련된 항구, 등대, 교량 및 기타 구조물, 연안 주변의 생활 유적 등이 포함된다. 역사적인 해양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면 스코틀랜드 역사 환경 웹사이트(Historic Environment Scotland)[33] 내 국가적 중요성, 지도, 보존 목표, 모니터링 정보, 사진 및 기타 이미지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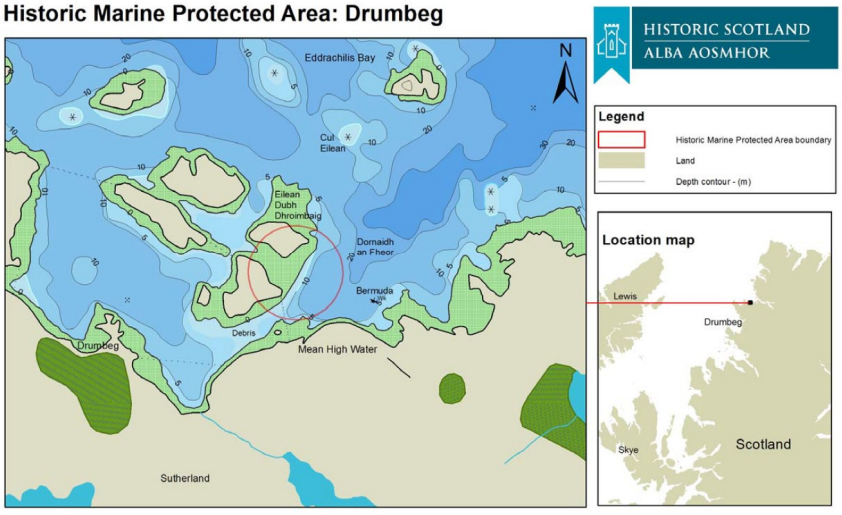
---

31) Historic England 웹사이트(2017. 8. 31 검색)
https://www.historicengland.org.uk/listing/the-list/results?q=wreck&parish=-1&hc=Wreck&heritagecategories=Wreck&searchtype=nhlesearch&searchResultsPerPage=20

32) 스코틀랜드 해양법의 5번째 파트는 세 가지 유형의 해양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자연 보존 해양 보호 지역(Nature Conservation Marine Protected Area)으로 생물 다양성 및 지질 다양성 보호를 위한 지역을 지정한다. 두 번째는 시범 및 연구 해양 보호 지역(Demonstration and Research Marine Protected Area)으로 스코틀랜드 해양의 지속가능한 관리 접근을 위하여 지정한다. 마지막으로 역사 해양 보호 지역(Historic Marine Protected Area)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양의 역사적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33) 스코틀랜드 역사 환경 웹사이트 https://www.historicenvironment.scot/

〈그림 3-9〉 스코틀랜드 드럼베그 역사적 해양 보호 지역 관련 정보 제공



자료: https://www.historicenvironment.scot/media/2334/drumbeg.pdf (2017. 9. 1. 검색)

영국의 해양문화유산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은 「군사 유적 보호법 1986 (the Protection of Military Remains Act 1986)」이다. 이 법은 군사유적이 있는 해안지역을 지정하거나 군과 관련한 난파선 이름을 목록에 추가하여 난파선을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항공 사고 현장은 「군사 유적 보호법 1986」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보호되며 장소 발굴을 위해서는 법에 의거한 라이선스 취득 후 가능하다.

2) 해양문화 관련 시설

영국은 해양문화와 관련한 보존 및 미래세대 전달을 위하여 해양박물관, 해양유산 센터 등 해양문화와 관련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그리니치에 위치한 국립해양박물관의 경우 「국립해양박물관법 1934(National Maritime Museum Act 1934)」에 의거하여 개관되었다. 그리니치는 런던 중심을 흐르는 템즈강 입구로 바다에서 런던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야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이다. 그리니치 국립해양박물관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박물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리니치 국립해양박물관은「국립해양박물관법 1934」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법정

법인이며 면제된 자선 단체로 관리 목적을 위해 조직화 되었다. 박물관은 사회의 기부 및 후원금,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기금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박물관의 콘텐츠는 영국과 바다의 관계가 시대별로 정리되어있는데 지도, 원고, 선박 모형 및 계획, 과학 및 항법과 관련한 도구 등 2백만 개 이상의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의 해사 역사 참고 도서(약 135,000권)를 보유 중이다.[34]

〈그림 3-10〉 영국 해양문화시설

자료: (좌) 그리니치 국립 해양박물관, http://www.visitlondon.com (2017. 9. 4. 검색)
(우) 스카버러 해양유산 센터, http://www.localdatasearch.com (2017. 9. 4. 검색)

한편 영국 잉글랜드 노스요크셔에는 스카버러 해양유산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35] 센터는 2009년 지역 협의회의 보조금으로 스카버러 시장에 의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 마을의 해양역사를 알리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스카버러는 전통적으로 다랑어 어업의 근거지이며, 17세기에 광천이 발견되면서 영국 최초의 해변 휴양지로 발전하였다. 스카버러 해양유산 센터는 이러한 지역의 해양문화를 바탕으로 해양과 관련한 역사적 문서, 사진 및 공예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공동체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의 해양

34) 국립해양박물관 연례보고서 2016-2017.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28588/HC_108_NMM_16-17_Web.pdf
35) 스카버러 해양유산 센터 웹사이트 http://www.scarboroughsmaritimeheritage.org.uk

축제, 국군의 날 등 주요 연례행사에 참여하며 마을의 역사 및 문화를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센터운영은 자원봉사자, 전직 선원 및 어부 등이 전담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은 매년 시행하는 기금 모금 행사 및 100여명이 넘는 회원, 지역 단체와의 파트너쉽 등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다.

3) 해양교육

영국은 해양교육과 관련한 공식적인 정책은 부재하다. 그러나 2015년 영국 교통부가 발표한 「해양 성장 연구: 세계 시장에서 영국의 경쟁력 유지(Maritime Growth Study: Keeping the UK competitive in a global market)」의 보고서[36]에서 해양역사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며 특히 해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해양교육은 역사 과목과 같은 공식적인 교과목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음을 밝히며 이를 통하여 해양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해양 관련 직업 및 해양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해양교육을 살펴보면 지리 교육과정에서 주제별로 내용이 전개될 때 해양관련 소재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드러난 해양교육의 비중은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7]

한편 「해양 성장 연구: 세계 시장에서 영국의 경쟁력 유지」보고서에서는 해양 관련 직업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해양분야에서 이미 경력을 쌓은 젊은이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나서 바다에 대한 관심을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야함을 전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상선해군훈련위원회(Merchant Navy Training Board, MNTB), 해양기술 연합(Maritime Skills Alliance), Seavision[38] 등에 1년 동안 해양의식을 고양시키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학 진학 박람회 뿐 아니라 해양교사 및 기타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한 계획과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

36) 해양 성장 연구: 세계 시장에서 영국의 경쟁력 유지 보고서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60861/maritime-growth-study-keeping-UK-competitive.pdf

37) 윤옥경(2006). 해양교육의 중요성과 지리 교육의 역할. 대한지리학회지 41(4), 491-506.

38) Seavision은 영국의 젊은 층에게 해양 분야의 직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전국적인 캠페인 단체임

4) 해양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영국 정부의 주요 관광정책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 하는 것이다. 관광산업은 영국 경제의 상위 3대 성장 분야 중 하나로 150만개의 일자리 지원 및 900억 파운드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편 해변 관광(seaside tourism)의 경우 21,000개의 일자리 창출 및 36억 파운드의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39] 이에 영국 정부는 해양관광개발 정책에 있어 해양과 관련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바다는 다양한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마다 상이한 관광활동과 문화를 동반하고 있다. 해양과 관련한 모든 관광활동들은 지역 경제에 상당한 소득을 창출 할 수 있으며 많은 연안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영국의 해안 지역에서는 일 년 내내 방문객을 유치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개발 중에 있다. 해양관광개발 정책은 육상의 관광 전략 및 계획 간의 연계를 고려하여하며, 해양관광객들에게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된다. 해양관광 정책을 결정할 때는 지방 당국, 지역 관광 이해관계자, 관광목적지 관리 조직, 해양자원 관리 조직 및 기타 수요자들의 협의를 통해야 한다. 「해양 정책 성명서(Marine Policy Statement)」에서는 해양개발에 있어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책을 언급하며 해양관광 분야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2. 일본의 해양문화 정책

태평양의 섬나라인 일본에게 바다는 세계와 교역할 수 있는 공간이며,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토를 지키는 자연의 요새였다. 예로부터 일본인들에게 바다는 생활의 일부였으며, 바다와 깊은 관계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가 발전되어왔다.

39) 영국 해양 정책 성명서(Marine Policy Statement)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9322/pb3654-marine-policy-statement-110316.pdf

일본은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해양정책을 강화하며, 해양강국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의 해양문화는 문부과학성에서 주로 담당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시책인 「해양개발 기본구상」이다. 이는 크게 두 개의 범주로 구분가능한데 첫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에 대한 이해 증진 활동을 위한 해양교육이다. 이는 초·중·고등학교의 교과목에 해양에 대한 학습을 포함하고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친수 문화 조성이다. 해양을 활용한 체험활동, 각종 정보 제공, 해양문화시설 보급, 해양문화와 관련한 자료수집과 공개 등이 포함된다. 일본의 해양문화 정책사례에서는 이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양문화 유산 보존, 해양문화 관련 시설, 해양 교육 등의 측면에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해양문화 유산 보존

일본은 1950년에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하여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인식 제고 및 세계 문화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40] 동 법에서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매장문화재, 사적 명승천연기념물, 중요문화적 경관,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해안지역의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해양문화는 모두 동 법에 적용되어 관리 운영된다.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재 보호법」을 제외한 대표적인 해양문화 유산 보존에 관한 정책으로는 수중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있다. 일본은 수중문화재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범은 없으나 유네스코 주관 수중문화유산 보호협약이 2009년에 발효됨에 따라 본 협약에 동참하며 해양문화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고 해양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수중유적조사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중 유적에 대한 조사 및 보존 활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일본의 문화재는「문화재 보호법」에 근거하여 보존하고 있으나 수중에 위치한 해양문화 유적의 경우 기술적으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수중유적조사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방법 및 활용에 대한 연구를 실

40) 일본문화청. http://www.bunka.go.jp/(2017. 9. 8 검색)

시하고 있다.[41] 또한 최근에는 수중문화 유산 속에 전통 어촌마을과 염전 풍경 등 문화적 경관을 포함하고자 하는 견해도 등장하고 있으며, 해양문화유산을 논할 때 일본의 문화재 보호법의 범주를 넘어서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42]

2) 해양문화 관련 시설

일본은 해양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해양박물관의 경우 다양한 테마와 주제를 바탕으로 일본 전역에 거쳐 115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해양문화를 주제로 전시 및 관람 문화를 진흥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낙후지역이나 관광개발이 필요한 곳에는 집중적으로 해양문화시설을 배치하여 지역발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43] 또한 일본의 핵심 해양문화시설은 관광 중심지에 입지하도록 하여 해양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상징물로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갖는 선박을 개조해 박물관 시설로 활용하는 형태도 있어 해양문화시설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일본의 해양문화시설 중 대표적인 곳은 국토교통성이 관리하는 오키나와의 해양 엑스포 공원 내 해양문화관이다[44]. 오키나와 해양문화관은 1975년 오키나와의 일본 본토 복귀를 기념해 개최된 오키나와 국제해양 박람회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해양문화관에는 대형 카누 등 해양문화와 관련한 750여 가지의 전시자료와 태평양을 그린 바닥 지도, 대형 영상 등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해양문화관 전시홀은 오키나와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 해양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들이 제안하는 해양문화란 “만물의 근원인 자연의 바다와 매일을 사는 인간이 교감을 통해서 만들어진 마음의 표현”이다.

---

41) 일본 문화청. http://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kondankaito/suichu_iseki/h25_01/pdf/shiryo_4.pdf (2017. 9. 8 검색)

42) 해양정책연구소. 해양문화자원과 수중문화유산 보호협약, Ocean News Letter 2014, vol . 344, https://www.spf.org/opri-j/projects/information/newsletter/backnumber/2014/344_2. html (2017. 9. 8 검색)

43) 해양수산부(2013). 해양문화시설의 지역별 입지 적정성 연구. p30-42.

44) 오키나와 해양문화관. http://oki-park.jp/kaiyohaku/kr/inst/35 (2017. 9. 8. 검색)

〈그림 3-11〉 일본 해양문화 관련 시설

자료: (좌) 고베 해양박물관, http://www.kobe-maritime-museum.com/ (2017. 9. 6. 검색)
(우) 오키나와 해양문화관, http://oki-park.jp/kaiyohaku/kr/inst/35 (2017. 9. 8. 검색)

일본의 박물관은 「박물관법」에 의거하여 미술관, 역사박물관, 동물원 등이 포함되며, 일정의 요건을 충족한 '등록박물관', 요건이 완화된 '박물관 상당시설',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박물관 유사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해양문화 관련 시설을 위한 독립적으로 명시된 법은 없으며, 요건에 따라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현재 「국립해양박물관」이 건립되어 있지 않아 국립해양박물관 설립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 중이다.[45]

3) 해양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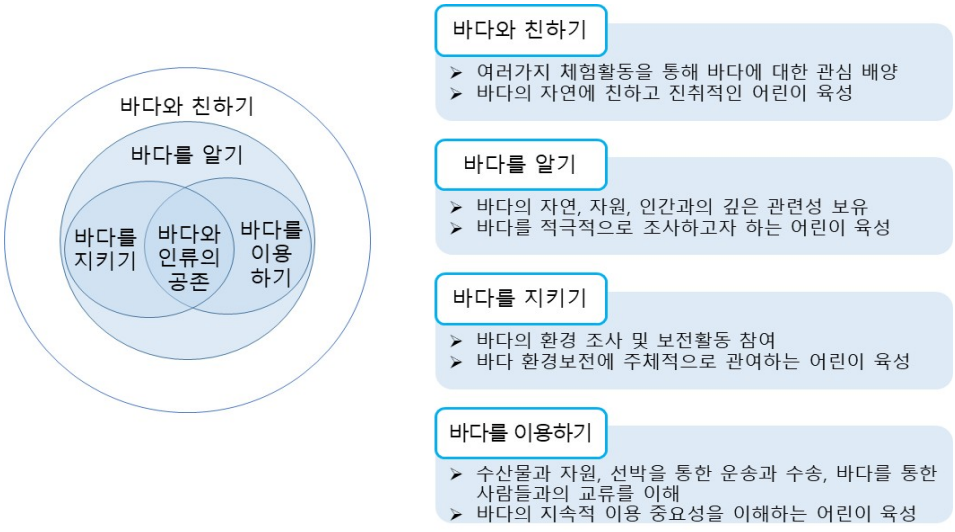
일본은 「해양기본법 2007」을 제정하여 해양에 대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의무를 명문화 하였고, 해양 정책에 부합되는 인재 양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8년「해양기본계획」에서는 국민의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조치 시행, 청소년 등의 해양에 대한 이해 증진을 높이는 제도 시행, 학제교육 활성화, 산업계화 연대한 교육 추진, 사회인 재교육 등의 제도 등의 정책 수립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은 「해양기본법 2007」에 근거하여 2008년 해양교육의 개념을 재정립 하고 초등학교의 해양교육 강화를 위해 바다 교육의 명확화, 학습 환경 개선, 외부 지원체제 정비, 해양교육 담당 인재의 육성, 해양교육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 추진 등의 5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46] 먼저 일본 해양

45) 일본평화연구소, http://ippjapan.org/archives/2108 (2017. 09. 08 검색)

정책연구재단이 제시한 해양교육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류는 해양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해양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해양과 인류의 공생은 국민적인 중요과제이다. 해양교육은 해양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해양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면서 국제적인 이해에 서서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양의 개발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 기능,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을 갖는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교육은 바다를 가까이 하고, 바다를 알며, 바다를 지키고, 바다를 이용하는 학습을 추진하다." [47] 해양교육의 정의를 바탕으로 일본 초등학교의 해양교육 개념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12〉 일본 초등학교 해양교육 개념도



자료 : 일본해양정책연구재단, 「小学校における 海洋教育の普及推進に関する提言」, 2008. 2.

46)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 「小学校における 海洋教育の普及推進に関する提言」, 2008. 2.
https://www.spf.org/opri-j/publication/approach/pdf/200802_education.pdf

47) 일본해양정책연구재단, 「小学校における 海洋教育の普及推進に関する提言」, 2008. 2.
https://www.spf.org/opri-j/publication/approach/pdf/200802_education.pdf

한편 앞서 제시한 5가지 방안의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다교육의 명확화는 교과목에 바다와 관련한 내용을 통하여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와 가까워지기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년별 맞춤형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바다에 대한 체험활동과 조사활동이다. 둘째, 학습 환경 개선이다. 이는 바다에 대한 내용의 확대 뿐 아니라 부교재, 프로그램 제공 및 해양교육정보 네트워크 등을 정비하는 것이다. 셋째, 해양 교육 진흥을 위한 외부 지원체제 정비이다. 이는 박물관, 수족관, 대학 및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이 제공하는 정보 정비를 통하여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 해양교육 담당 인재 육성이다. 교원에 대한 해양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해양교육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나아가 외부 인재의 육성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내용, 방법, 효과 측정 모델 등의 개발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연구거점 정비 등이 포함된다.

이뿐 아니라 일본은 일본해양소년단연맹, Blue Sea and Green Land 재단, 해기교육재단, 마린스포츠 재단 등이 주축을 이루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에 대한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본해양소년단연맹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바다와의 친밀감을 부여하고 매년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수기신호, 항해훈련, 수영 등 다양한 형태의 해양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3. 소결

도서국가인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때 그들에게 바다는 이용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이며, 해양문화는 바다와 인간과의 관계 맺음 그 자체로 보인다. 특히 영국은 오래전부터 이미 해양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국립해양박물관 법 제정, 역사 해양 보호 지역 지정 등 범 정부차원에서 소프트파워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그리니치 해양박물관의 경우 주요 해양문화시설로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다졌다. 해양문화는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이와 동시에 교육적인 기능과 오락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등 다방면

에서 경제적·사회문화적 가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해양유산센터 등 연안지역의 해양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방당국과 사회단체 등의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해양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여 국민들에게 친수문화를 제고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제정된 「해양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양강국화를 이루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해양교육 시스템은 어릴 때부터 국민들에게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해양사상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해양박물관, 해양문화관 등 해양문화 관련 시설을 구축하여 일반 국민과 함께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해양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해양을 주도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국민이 중심이 되는 친해양문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전시관, 해양과학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해양문화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국민의 생활 속에서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양문화 인프라를 이용하여 국민들의 해양의식 및 해양문화를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및 활용방안 등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제4장 해양문화 정책 추진 방향

제1절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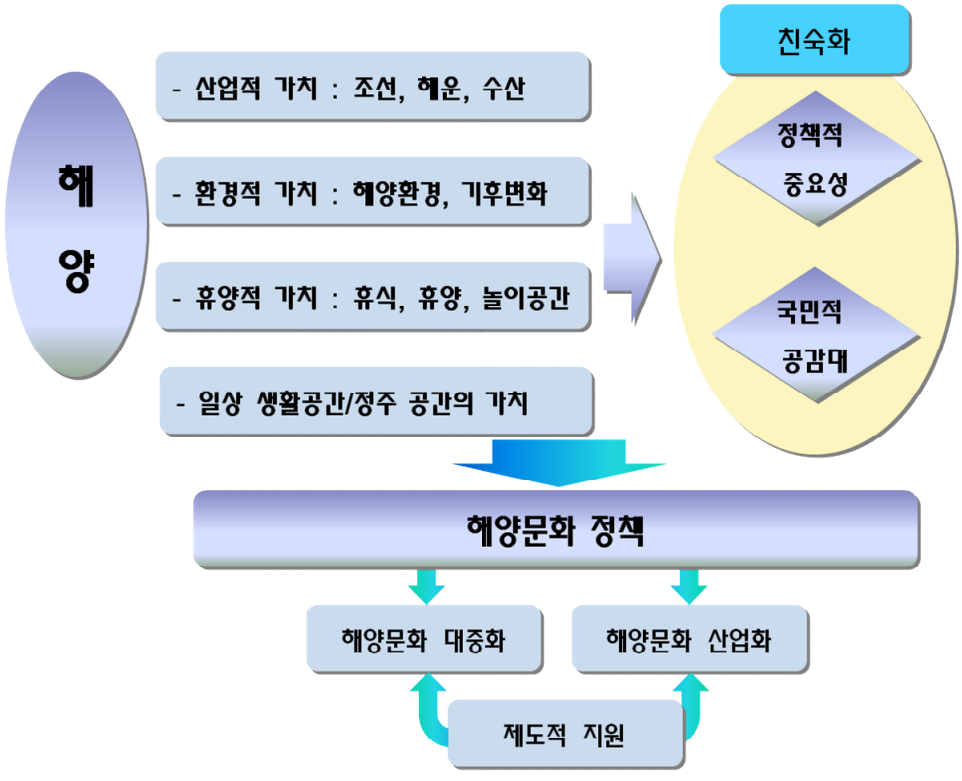
문화는 인간의 생활양식이라는 단편적 정의에서부터 한 사회집단을 특징짓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복합체라는 포괄적 정의까지 대상과 영역에 따라 그 범주가 다양하다. 문화는 시대의 변화나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발전되고 있으며 문화정책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문화정책의 개념을 처음 사용한 유네스코는 문화정책의 영역을 문화유산, 인쇄물 및 문예, 음악, 공연예술, 조형예술, 영화 및 사진, 방송, 사회문화활동, 체육 및 오락, 자연과 환경보호활동으로 규정한다. 또한 여가시간의 증대, 방송매체의 변화, 문화에 대한 소비급증에 따라 정책환경이 새롭게 변화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문화와 문화정책의 영역 및 시대별 정책환경의 변화에서 보듯이 문화정책은 문화에 대한 소비수요에 따라 변화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문화를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인 대중화와 문화를 창작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핵심적이다. 문화정책이 문화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창작여건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다면, 해양문화 정책은 해양을 대중에게 알리고 일상생활이나 정주공간으로서 뿐 아니라 해양의 산업적, 환경적, 휴양적 가치를 제고하여 새로운 산업 기반의 토대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해양문화에 대한 문헌분석, 설문조사, 국내 문화정책 및 국외 해양문화 정책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공통적인 시사점은 해양에 대한 인식과 해양중심의 사고가 중요하고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 해양문화는 대중적 수요를 창출하고 있거나 산업화를 위한 기반 여건이 크게 미흡하다. 따라서 해양문화의 전파는 해양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더

불어 해양의 가치를 제고 시키고 산업화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계층이 해양문화를 손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우리의 생활양식 속에 해양이라는 공간과 자원, 의식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따라서 해양문화 정책은 해양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홍보와 정책적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은 해양문화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도모하도록 설정하고 정책의 이행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한다.

〈그림 4-1〉 해양문화 정책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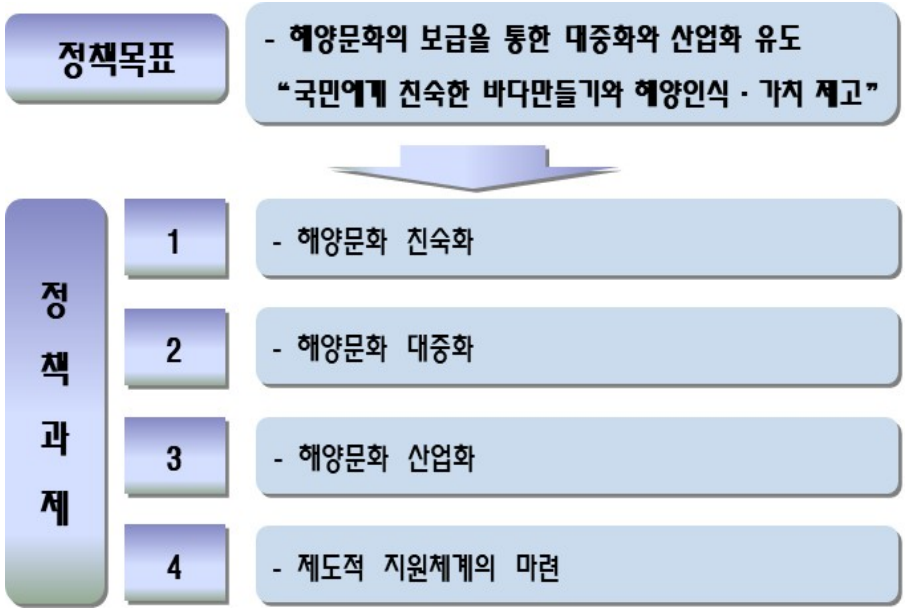
제2절 주요 추진 과제

1. 정책목표와 정책과제

문화정책은 한 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최적으로 이용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해양문화 정책의 추진은 해양의 산업적, 환경적, 휴양적 가치 등을 국민이 인식하게 함으로써 해양의 정책적 중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데 있다. 이러한 해양에 대한 인식 제고는 해양문화의 향유 기반과 창작 기반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해양문화 정책의 목표는 해양문화의 보급을 통한 대중화와 산업화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에게 친숙한 바다만들기와 해양인식·가치 제고'를 통해 가능하다.

해양문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해양문화의 친숙화, 대중화, 산업화,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등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해외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할 때, 국내 해양문화는 이에 대한 인식자체가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해양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해양문화라는 표현 자체와 친숙해 지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양문화의 친숙화는 국민 개개인이 해양자원 및 해양공간 자체를 즐기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에게 해양문화가 친숙해지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해양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양문화의 대중화는 해양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산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해양문화의 산업화는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 발굴, 상품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은 해양문화의 친숙화, 대중화,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 정보체계의 구축과 지원 사항을 포함한다. 문화정책 및 해양문화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사례분석에서 보듯이 해양문화정책은 실천수단이 다양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양문화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인적 기반의 구축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4-2〉 해양문화 정책의 정책목표와 정책과제(안)



2. 정책과제별 추진방향

1) 해양문화의 친숙화

국내 해양문화 및 해양문화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요인은 해양 및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해양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해양문화 친숙화는 기존 문화 영역에서 잊혔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해양문화 요소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문화 친숙화에서는 해양문화 트렌드 분석 및 해양문화지수를 발굴하고 이를 공표·홍보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해양문화를 얼마나 향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해양문화 트렌드 및 향유 지수를 전체적인 문화 트렌드와 비교하는 것은 대중의 관심도 분석은 물론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해양레저체험행사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레저체험을 단순한 즐길 거리로 지나치기보다 해양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바다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도록 한다. 기존의 해양레저체험교실 뿐 아니라 해양레저동호회 지원 및 활성화 등을 통해 해양레저 접촉 기회의 저변을 확대해나가도록 한다.

지역해양문화관광상품 개발지원은 지역별 해양문화자원(역사, 인물, 유적, 신앙)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여행사 등과의 공모를 통해서 제작하고 홍보하는 것이다. 관광상품은 국민으로 하여금 지역별 해양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자연스러운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수 해양문화축제는 해양을 소재로 개최되는 축제를 발굴 · 육성하는 것이다. 해양 관련 축제는 대부분 수산물을 테마로 하고 있고 인근 지역의 축제끼리는 서로 차별성을 띠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테마, 특히 지역 해양문화를 반영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해양문화축제를 발굴·지원하여 문화 보전 및 국민의 해양문화 접점 다양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표 4-1〉 해양문화 친숙화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해양문화 친숙화	- 해양문화 트렌드 분석 및 해양문화지수 발굴 : 연 1회 국민의 해양문화이용여건에 대한 실태조사(공연, 박물관 방문, 축제이용 등에 대한 기초자료, 이용변화 분석) - 해양레저체험행사 확산 : 해양레저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자체 행사 지원을 통한 해양놀이문화 확대, 도전정신 함양 - 지역해양문화관광상품 개발지원 : 해양자원, 공간을 주제로 하는 지역 관광상품 발굴 지원 및 홍보 확대 - 우수 해양문화축제 발굴 : 이달의 해양문화축제, '1 지역 1 해양문화축제' 지정, 운영 등

2) 해양문화의 대중화

해양문화의 대중화는 일반 국민이 바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도록 한다. 그 동안 해양문화 대중화를 위한 정책은 해양과 관련된 역사인물에 대한 발굴, 해양 관련 시설 견학, 어촌지역 민속·생활사에 대한 연구, 전시관이나 박물관 등 해양문화 관련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을 개선·보완·확대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해양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각 연령에 적합한 해양문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박물관과 어촌민속전시관 등 지역의 해양문화 공간을 활용하여 해양문화학교를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해양을 소재로 한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해양문화의 날 또는 해양문화주간을 지정하도록 한다. 법정기념일인 바다의 날(5월 31일)과 같이 해양문화의 날 또는 해양문화주간 동안 친수문화를 확산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독특한 해양문화를 보유하고 있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문화도시로 지정하거나 해양문화테마마을로 조성하도록 한다. 해양문화도시 지정 또는 해양문화테마마을 조성을 통해 마을의 고유한 해양문화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체험하고 학습하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해양문화자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앞으로 각 지역의 해양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개발, 보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해양문화 전시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전국의 해양문화 시설 조성 현황을 검토한 후 이미 조성된 해양문화 시설 중 일부를 해양문화 전시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문화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신규 시설 조성 또는 타 시설과 연계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노후한 조선소, 어항 등 연안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카페 등의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2〉 해양문화 대중화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해양문화 대중화	- 해양문화 교육프로그램/해양문화학교 운영 : 해양문화를 주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지역대학/연구소에 운영하는 해양문화 학교 확대실시 - 해양문화의 날/해양문화주간 홍보 : 바다의 날, 해양문화축제 개최 기간을 활용한 '해양의 날 지정', 해양역사 탐방/레저체험, 학술 행사등을 집중 개최하는 '해양문화의 날' 지정 · 운영 - 해양문화도시지정/해양문화테마마을 조성 : 각 연안지지체별 해양과 관련된 역사/근대문화 유산(개항, 파시, 생태 등)을 소재로 문화도시 지정 및 홍보, 해양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체험마을 운영 - 해양문화 전시/문화공간 조성 : 국립해양박물관 · 어촌민속전시관 · 해양과학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전시물, 강연, 공연 순회), 교육프로그램/ 인력 교류, 소규모 마을 전시관 운영 지원

3) 해양문화의 산업화

해양문화의 산업화는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해양자원을 활용한 각종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과의 연계를 모색하도록 한다. 국내 문화산업에서 해양을 소재로 한 콘텐츠나 공연, 예술작품이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해양문화의 친숙화 및 대중화를 토대로 시장성이 확보된 단계에서 해양문화의 산업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해양문화의 산업화는 해양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고양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양문화자원의 조사·분류 및 DB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나 실태파악이 미비하여 해양문화 정책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현재 문화자원 DB는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군의 문화관광 담당부서, 지역의 문화원·문화재단, 협회·단체 등의 홈페이지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해양문화자원은 문화자원의 카테고리 아래 관리·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분산되어 있는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독립적인 DB구축을 통해 고유한 정보 축적을 실시하고 활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해양문화자원의 DB가 구축되면 이를 활용하여 해양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 해양문화 정책은 해양역사의식 확산을 강조하고 해양유산의 발굴·보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대중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문화콘텐츠의 가치와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중요성과 콘텐츠화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양문화와 관련한 애니메이션·캐릭터·에듀테이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 등 콘텐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관광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문화 담당부처 등이 협력하는 해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 논리 개발 및 추진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양문화·예술 관련 창업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해양문화과 관련된 창작기획이나 기술 및 경영 등을 포괄하는 창업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기획지원,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한 창업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사업화 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창의적인 해양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또한 해양문화 전문아카데미 및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전문인력 육성정책을 마련해야한다.

〈표 4-3〉 해양문화 산업화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해양문화 산업화	- 해양문화자원의 조사 · 분류 및 DB 구축 : 해양관련 역사, 근대 문화 유산에 대한 조사 · 분류체계 구축 - 해양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원 : 해양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홍보물, 예술작품 제작 지원 및 관광상품화 유도 - 해양문화·예술 창업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 해양문화 홍보, 교육 인력 양성, 해양문화 소재/디자인 인력 양성 지원

제3절 법제도적 기반 구축

1. 해양문화 정책 추진 로드맵 구축 방향

국내 해양문화 정책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어 왔다. 해양문화의 진흥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 해양문화 육성과 관련된 정책사업을 진행해왔으나 해양문화와 관련된 중장기 로드맵이나 추진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문화정책의 추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를 지원하기 제도적 기반이나 예산, 조직 등도 크게 부족하다. 해양문화 정책사업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하에 해양역사, 문화자원의 발굴 및 해양의식 확산을 목표로 '해상왕장보고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해양교육 · 문화육성사업, 해양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 건립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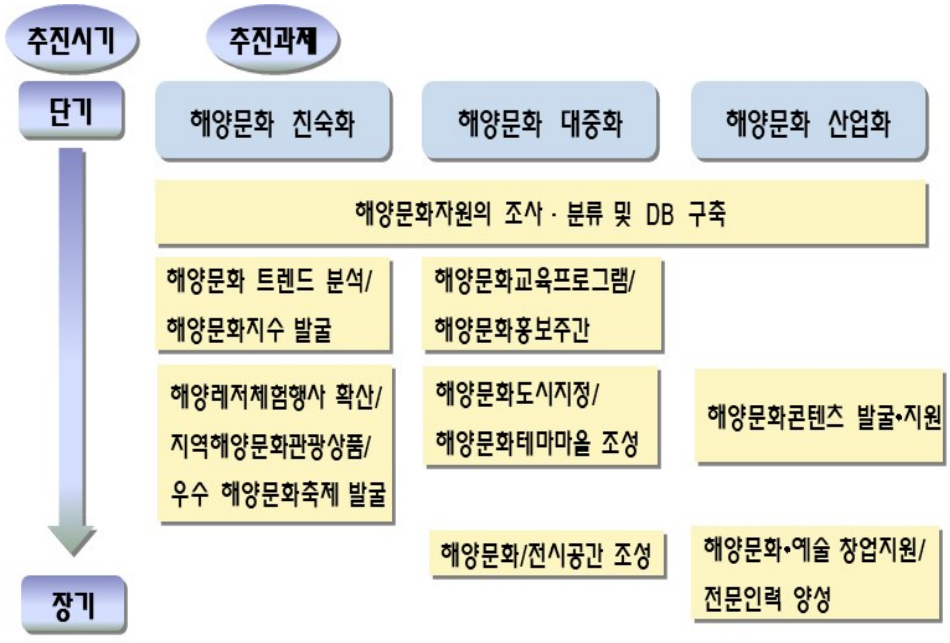
해양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존의 정책들은 해양역사를 통한 해양의식 함양, 해양교육 등 해양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비해 문화트렌드의 변화나 중장기적 발전방향,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나 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전통문화 중심적 접근이 강했다는 지적과 해양문화 정책의 체계적 정립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양문화에 대한 개념정립과 더불어 해양문화 정책에 대한 청사진과 로드맵 구축이 요구된다.

해양문화 정책과제 추진은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기반으로 해양문화의 산업화에 필요한 시장성 확보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 시기를 설정하도록 한다. 우선 해양친수문화 확보를 위한 홍보 및 기반사업을 초기에 추진하도록 하며 이러한 홍보를 토대로 해양문화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확보된 후에 해양문화공간 조성 및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산업화를 이루도록 한다. 즉 해양문화와 관련된 인프라 조성이나 기반시설 정비 사업들은 해양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해양문화에 대한 대중적 수요가 뒷받침될 때 그 타당성이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해양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을 보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양문화 정책의 추진 로드맵 구축 방향을 앞서 제시된 정책과제와 연결해보면 다음과 같다. 해양문화의 친숙화, 대중화, 산업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추진 성과의 주기적 검토를 위한 현황분석 및 이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 구축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해양문화 친숙화를 위한 해양문화 트렌드 분석과 해양문화 지수 발굴을 통해 저변을 확산하고 해양문화 대중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홍보주간을 운영해 나가도록 한다.

이어 해양레저체험행사 확산과 관광상품 연계, 우수 해양문화축제 육성을 통해 국민 생활 속에 한 발 더 나가가고 해양문화도시나 해양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을 통한 해양문화 브랜드 구축, 해양문화콘텐츠 발굴·지원을 통한 산업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과 해양문화 접근성 및 향유 정도가 높아지면 해양문화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해양문화 전문공간을 확산하고 해양문화예술 창업 및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산업화를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3〉 해양문화 정책과제의 추진 방향



2. 제도적 지원방안의 마련

해양수산발전기본법과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라는 기본법 체계 내에서 추진되는 해양문화 정책은 기본적인 방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일반 문화정책 영역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사업과 연계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기존 문화정책의 틀에서 해양문화 정책을 포괄하도록 부처 간 협력체계를 이루는 방안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문화 정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해양문화정책의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간 협력체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해양문화 정책이 해양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해양산업의 발전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양수산부 내에 해양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한 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우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문화의 창달(제34조)'이라는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해양문화자원의 조사나 교육프로그램 보급, 해양문화공간 조성, 문화콘텐츠 진흥, 민간단체 지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또한 해양문화의 육성과 해양관광의 발전이 친수문화 확산이라는 정책의 연계선상에 있다는 측면에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상에 해양관광정책과 연계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현재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정책 사업은 해양관광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단일법에 근거하여 수립·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 등 해양과 관련된 제 분야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서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에 관한 별도의 장을 구성하고 친수문화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해양문화관광자원조사, 문화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민간단체의 육성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 해양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4〉 해양문화정책 추진 제도적 개선안

구분	주요내용
법령 및 조직 정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정비(안) : 일부 개정 · '해양문화 · 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성화' – 해양문화 · 관광활성화 : 활성화 기본방안, – 해양문화 · 관광의 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시책의 기본방향, 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 정보체계 구축 – 해양문화 · 관광자원의 조사 및 통계발간 : 기초 현황조사, 조사결과 DB 구축/보급 – 전문인력의 양성 : 인력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 · 지원 : 민간협회 지원, 단체 육성 ○ 해양문화정책 추진 지원조직 구성 · 정부부처 해양문화정책(해양교육 활성화, 해양문화 보급, 인프라 확산) 추진을 위한 조직 정비 · 공공/민간기관 지원 확대 : 해양문화 관련 협회, 재단, 지역미간 연구소 지원방안 마련

해양문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에는 지원조직과 예산부분을 포함하여 정책사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 문화정책의 확산은 문화의 대중화나 생활문화의 전파에 있어 많은 부분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한편, 국내 해양문화는 대중화의 초기 단계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조직 등 정부차원의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해양문화정책의 추진을 위한 조직 정비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지원도 법안정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제5장 결 론

해양문화를 언급할 때 해양문화의 개념이 모호하다 혹은 복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는 해양문화에 대한 연구기반이나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과거부터 해양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해양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도전정신을 알리자는 표현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문화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감안할 때 해양문화 또한 해양에 대한 인식이나 해양문화 향유 수요에 따라 개념이나 영역이 변화, 발전된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해양문화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국내에는 해양을 즐기기 위한 문화나 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수단이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학술 연구자료 검토 및 전문가 인식 조사를 통해 해양문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해양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해양문화의 개념과 영역을 검토했다. 또한 해양문화 및 문화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과 정책여건, 해양문화 정책이 다루어야 하는 영역 등을 조사했다. 국내 문화정책과 해양문화 정책, 영국과 일본에서 해양문화의 보급 및 해양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양문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영역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해양문화는 '바다를 공간이자 매개로 하여 형성된 문화'이다. 바다를 활동이나 생활의 무대로 하면서 바다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지식체계와 가치관, 삶의 양태 등을 말한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해양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개념이 구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설문조사에 나타난 전문가 인식을 토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해양문화에 대한 현대적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현대적인 개념의 해양문화란 "해양을 이용하고 보호하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과 유산을 활용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 규범, 삶의 양태 등"을 말한다.

국내 문화정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 결과, 초기 문화정책은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 및 계승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시대의 흐름과 경제 발전에 따라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복지 실현, 문화산업융성 등으로 정책적 논의가 발전해왔다. 특히 2014년에 「문화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우리문화브랜드 사업을 진행하는 등 문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가치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한편 도서국가인 영국과 일본의 해양문화와 관련한 정책 사례를 검토한 결과 양국의 해양문화는 '바다와 인간과의 관계 맺음' 그 자체로 보인다. 섬나라인 양국에게 바다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에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 지방당국, 사회단체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체계적인 해양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해양사상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 해양문화 정책이라는 정확한 단어를 통한 체계적인 문화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양문화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국민성에 해양의식이 스며들어 있고 바다를 친근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해양을 주도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친해양문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 해양문화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등장한 시기는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연동계획이 수립된 2004년이다. 이전에는 해양문화가 전면에 드러나기보다 정책 집행을 위한 수단 차원에서 언급된 바 있으나, 연동계획에서는 7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해양문화 육성을 위한 정책계획이 최초로 포함되었으며 세부 내용도 구체성을 띄게 되었다. 또한 연동계획의 해양문화 정책은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해양관광 육성 정책 및 해양문화 관련 실천과제로

이어졌으며, 2013년 해수부 부활 이후 수립된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도 관련 정책사업이 포함되었다. 해양문화 정책이 수립·집행된 시기는 오래지 않았으나 해양문화 인프라 확충, 법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정책의 체계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해양문화 정책이 일반적인 문화정책의 변천과정과 비교할 때, 기반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이나 문화유산의 보존·계승에 초점을 맞춘 1980~1990년대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1·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내 추진과제 중 친수문화 관련 과제가 해양문화 육성에 기여한 반면 인프라 구축은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시설 구축보다는 친해양문화를 위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세부과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해양문화정책의 청사진과 로드맵 구축, 해양문화자원 조사·분류 및 DB 구축, 해양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의 필요성을 높이 평가했다.

따라서 향후 국내 해양문화 정책은 해양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해양문화 접근성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는 해양문화의 친숙화, 해양문화의 대중화, 해양문화의 산업화, 제도적 지원체계 등으로 구분된다. 해양문화 친숙화는 기존 문화 영역에서 잊히거나 숨겨져 있던 해양문화 요소를 알리고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문화의 대중화는 일반 국민이 바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된다. 해양문화의 산업화는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해양자원을 활용한 각종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과의 연계를 모색하도록 한다.

해양문화 정책의 추진 로드맵은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기반으로 해양문화의 산업화에 필요한 시장성 확보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다. 우선 해양친수문화 확보를 위한 홍보 및 기반사업을 초기에 추진하고 이러한 홍보를 토대로 해양문화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확보된 후에 해양문화공간 조성 및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산업화를 이루도록 한다.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부처 간 협력체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해양문화 정책이 해양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해양산업의 발전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해양문화의 창달(제34조)' 조항을 확대하는 방안과 해양

문화 및 해양관광에 관한 별도의 장을 구성하는 방안이 있다. 해양문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에는 지원조직과 예산부분을 포함하여 정책사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강봉룡 외, 『해양사와 해양문화』, 경인문화사, 2007.

곡금량 저, 김태만 외 역, 『바다가 어떻게 문화가 되는가』, 산지니, 2008.

곽유석, “다도해 해양문화유산의 복원과 활용: 흑산도 사례 연구”, 『해양문화재』 1호, 2008.

구모룡, “해양 인식의 전환과 해양문화”, 『국제해양문제연구』, 제13권 제1호, 2002.

김상구, “부산광역시 해양문화 발전방향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1.

김성귀, “해양관광 측면에서 본 해양문화”, 『해기』, 2003년 11월호, 2003.

김홍섭, “우리나라 새로운 해양문화의 도입과 확장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7집 제4호, 2010.

김효정.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국내이행에 관한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나승만 외, 『해양생태와 해양문화』, 2003.

나승만, “서남해역의 해양문화자원 활용방안”, 『도서문화』, 제21집, 2003.

남송우, “해양 인문학의 모색과 해양문화콘텐츠의 방향”, 『해얀과 해양』, 제6권 제2호, 2013.

네키 아키라(根木 昭). 김재영 역, 『일본 문화정책학 입문』, 민속원, 2012.

노시훈, “여수지역 해양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호남문화연구』, 제47집, 2010a.

노시훈, “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프랑스 대서양 연안 지방의 해양박물관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제84집, 2010b.

노시훈, “해양문화유산의 정의와 분류의 문제”, 『해양문화연구』, 제4집,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10c.

노시훈, “해양축제와 해양문화유산: 프랑스 해양축제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43집, 2013.

노영순, 『문화융성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류정아·김효정, 『지역문화 정책분석 및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류태건, “‘해양수도’ 부산시 해양문화 정책의 현황과 특성”, 『동북아 문화연구』, 제41집, 2014.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보고서』, 2004.

문화체육관광부, 『20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7

, 『문화정책관 예산집행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7

, “국가브랜드 슬로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사용중단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2017. 6.29 보도자료

, 『전통문화정책의 성과와 반성』, 문화체육관광부, 2013

민말순, “남해안시대의 해양문화 정책과 협력방안: 이순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경남발전』제85집, 2007.

생활문화진흥원, 『2017 생활문화센터조성길잡이』, 생활문화진흥원, 2017

양혜원,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배치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원용태·고석규, “서남해 해양영웅 캐릭터 및 문화관광상품 개발”, 『도서문화』 제36집, 2010.

윤옥경, 해양교육의 중요성과 지리 교육의 역할. 『대한지리학회지』, 41(4), 491-506, 2016.

이동근 외, 『역사와 해양의식: 해양의식의 체계적 함양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이원갑 외,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2010.

이창언, “남해안 어촌지역 해양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경남 거제시 구조라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제54집, 2013.

전경수, “열린 세계로서의 바다와 열어가야 할 해양문화”, 국제학술심포지엄,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1.

정광렬, 『맞춤형 문화복지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조광호, 『지역문화정책사업 효율화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주강현 외, 『해양문화자원의 발굴·계승 및 활용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15.

최성두 외, 『해양문화와 해양거버넌스』, 도서출판 선인, 2013.

해양수산부, 해양문화시설의 지역별 입지 적정성 연구, 2013

홍석준, “인류학적 관점에서 본 해양문화의 특징과 의미 : ‘해양문화의 지역체계 만들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양문화학』, 제1권, 2005.

홍석준, “진도의 바다 세계와 진도 문화의 해양문화관광 자원화 방안”, 『도서문화』, 제28집, 2006.

홍석준, “‘도서·해양 문화’연구와 인류학”, 『도서문화』 제33집, 2009.

〈국외 문헌〉

Baumol, William J. and Bowen, *William G., 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New York: Twentieth Century Fund, 1966.

Pierre Schmit et Nathalie Lemarchand, *Le Partimoine Maritime en Basse-Normandie: Réflexions sur Deux Décennies d’Actions Publiques et Privées*, Caen, 2005.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 「小学校における 海洋教育の普及推進に関する提言」, 2008. 2.

〈인터넷 자료〉

고베 해양박물관(http://www.kobe-maritime-museum.com)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
생활문화진흥원(www.nccf.or.kr)
스카버러 해양유산센터(www.scarboroughsmaritimeheritage.org.uk)
영국법안(www.legislation.gov.uk)
영국정부홈페이지(www.gov.uk)
오키나와 해양문화관(oki-park.jp)
일본문화청(www.bunka.go.jp)
한국해양소년단연맹(www.sekh.or.kr)
한국해양재단(http://koreamaritimefoundation.or.kr)

Historic England(www.historicengland.org.uk)

부록 1. 해양문화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ID

해양문화 인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2017년에 『해양문화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해양문화 및 관련 정책의 발전방향 수립에 동참하신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하여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 9

문의 사항				
	설문 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인주 전문연구원	(051-797-4724)
	조사 문의	(주)리서치앤리서치(R&R)	배형민 연구원	(02-6484-3071)

SQ1	거주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대전 6) 광주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세종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SQ2	전문분야	_____
SQ3	근무기관	1) 연구기관 2) 학교 3) 기업 4) 정부 및 산하기관 5) 기타:_____
SQ4	유관경력	2) 5년 이하 2) 6년~10년 3) 11년~20년 4) 20년 이상

- 1 -

PART A.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

Q01. 귀하께서는 '해양문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① 예 ☞ Q02로 이동 ② 아니오 ☞ Q03으로 이동

Q02. '해양문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것을 2가지까지 적어주십시오.

( ), ( )

Q03. 귀하께서 '해양문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것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해양문화 자체를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

② 해양문화를 접해볼 기회가 별로 없어 익숙하지 않기 때문

③ 해양문화라는 개념이 모호해서 판단이 어렵기 때문

④ 해양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이 없기 때문

⑤ 기타 의견:_____

Q04. 귀하께서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학술연구 혹은 정책연구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Q05. 지금까지 해양문화 연구는 역사학·인류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Q06. 귀하께서는 국내 문화산업에서 해양 관련 (또는 해양을 소재로 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기해주십시오.

10% 미만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이상
1	2	3	4	5	6	7	8	9

Q07.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내 문화산업에서 해양을 소재로 하는 비중이 낮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① 해양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시장성이 낮기 때문

② 관계자들이 해양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고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생산하지 않기 때문

③ 해양문화를 소재로 산업이 육성될 만한 제도적 기반이나 정책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

④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만한 해양문화 소재가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

⑤ 기타 의견:_____

⑥ 국내 문화산업에 해양 소재 비중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PART B. 해양문화정책에 대한 평가

Q08. 지금까지 해양문화 관련 정책은 '전통문화계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당대의 '문화이용·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Q09. 다음은 해양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할 이유에 대한 의견입니다. 매우 동의하시는 이유는 7점,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1점 등으로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보기에 없는 경우 기타 의견에 추가 기입해주십시오.

	구분	← 동의 안함		보통				동의함 →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1)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임에도 육지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상태를 탈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해양의 이용, 보호, 미래변화 대응 등에 필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3)	해양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4)	해양문화는 국가문화역량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5) 기타 의견: _____

Q10. 귀하께서는 체계적인 해양문화 정책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Q10-1. 체계적인 해양문화 정책을 정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_____)

Q11. 체계적인 해양문화 정책을 정립하기 위해 귀하께서는 어떤 영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위성이 가장 높은 경우 7점, 당위성이 가장 낮은 경우 1점 등으로 평가해주십시오. 보기에 없는 경우 기타 의견에 추가 기입해주십시오.

	구분	← 당위성 낮음		보통		당위성 높음 →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1)	[전통] 해양문화유산(유·무형) 보존·계승·발굴·활용							
2)	[인프라] 해양문화시설(박물관·전시관 등) 조성							
3)	[생활] 해양친수·레저 활동 확대 등 생활문화 지원							
4)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해양문화 향유 기회 제공							
5)	[지역] 연안·도서 지역주민의 참여 및 지역문화 활성화							
6)	[창작] 해양성을 띤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활성화							
7)	[교육] 해양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8) 기타 의견: _____

_____

Q12. 해양수산부의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04-2010) 중 해양문화와 관련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정책이 해양문화 육성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십니까? 기여도가 가장 높은 과제는 7점, 기여도가 가장 낮은 과제는 1점 등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기여도 낮음		보통		기여도 높음→		
	추진과제	세부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1)	생태·문화 자원의 효율적 활용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광수요 해소 :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관리 확대, 해양생태계 체험시설 조성 - 갯벌관련 문화행사 지원 및 맹에 습지생태만 내린 제도 활용 - 등대, 해양연구시설, 해양조사선박 등 개방해 문화·관광 장소로 활용							
2)	국립 해양박물관 및 지역별 전문박물관 건립	-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 지역특성에 적합한 전문 해양박물관 건립 - 권역별 거점 해양관광도시에 해양과학관 및 수족관 건립							
3)	항만시설을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	- 폐쇄형 노후 항만시설을 선진국형 공간으로 개량·현대화 : 수변공간을 항만녹지공간, 문화·휴식공간, 쇼핑 및 서비스 공간으로 정비, 여객선 터미널지구는 해안광장으로 개발 등							
4)	국민생활과 함께하는 새로운 해양문화 창달	- 해양 전문 케이블 TV 등을 통한 신속한 정보 전달,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 해양문화 창작 장려 : 해양수산공모전, 해양문학의 밤 등 - 해양문화 분야 학술·연구활동 지원							
5)	해양관광정보 시스템 구축	- 해양관광 DB 구축, 해양관광 전문 포털 구축 - 해양관광정책 지원시스템 구축 - 해양문화·관광, 해양레저·스포츠, 해양과학 등 연계된 종합해양문화정보망 구축 - 사이버 해양대학·해양박물관·해양수족관 개설							
6)	해양지향형 국가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해양홍보 강화 : 바다의 날 국민축제로 승화, 전국 해양문화축제 개최, 지역별 풍어제를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 매스컴과 협력, 해양문화 강좌 개설 등 - 청소년 해양교육 강화 : 해양교육 포털 구축, 프로그램 마련, 교사 대상 해양교육 프로그램 공모 및 교재 발간, 일일명예교사제 확대, 해양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해양 탐구 학습관 조성, 교과서의 해양관련 내용 수정·보강, 해양환경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 해양수산총연합회 설립 - 해양관련 NGO와 협력 강화(민간단체 지원·육성)							
7)	해양개척정신을 국민의식으로 정착	- 잠보고 해양개척정신을 국민의식으로 정착 : 잠보고 연구회, 해양역사 교육공간 확보, 대중매체 및 교육을 통한 잠보고 정신 확산 - 해양관련 인물의 재조명을 통한 해양개척 정신의 국민의식 정착							
8)	법·제도의 정비	- 해양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법 제정 추진 등 제도정비 - 해양문화·관광 정책 수요 해소 및 정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							

- 5 -

Q13. 해양수산부의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2) 중 해양문화와 관련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정책이 해양문화 육성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십니까? 기여도가 가장 높은 과제는 7점, 기여도가 가장 낮은 과제는 1점 등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기여도 낮음		보통		기여도 높음→		
	실천과제	세부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1)	해양역사 문화자원의 발굴 및 홍보를 통한 해양문화 친화성 강화	- 해양역사·문화자원 발굴사업 추진 - 해양문화 탐방 행사 개최 - 해양홍보 및 해양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해양에 대한 관심 유발, 친화성 제고							
2)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적 활용을 위한 해양의식 함양사업 추진	- 해양의식 함양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 해양의식 함양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원/관리 방안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							
3)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을 통한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	- 전시공간 지원사업을 통한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 및 지역 박물관/수족관/과학관과 연계 네트워크 구축 - 범국민 해양문화유물 수집운동 전개, 해양문화 자료의 문화재 지정 촉진 - 해양생물자원관 건립 - 전국 해양문화시설 통합 협의체 운영 및 연계방안 추진							
4)	해양문화 축제 육성을 통한 대국민 홍보기반 강화	- 해양의식 및 해양문화 고취할 수 있는 해양축제 육성 - 해양축제 평가시스템 구축, 우수 해양축제 지원 - 정부차원 행사의 홍보기반 강화							
5)	해양교육시범학교 지정을 통한 해양교육 기반 강화	- 해양교육시범학교 운영 및 교재 발간 - 해양아카데미 설치 및 해양의식 교육 기회 제공 - 전문 해양의식 교사 양성 및 민간단체 육성							

Q14. 다음은 국내 문화정책의 변천과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와 비교할 때 국내 해양문화정책은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기해주십시오.

시대 구분	문화정책의 내용			해양문화정책과 유사 단계 표기
1980년대	문화 기반시설 확충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①
1988-1992년	문화 프로그램 개발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②
1993-1997년	문화복지 개념 정립			③
1998-2002년	문화복지 실질적 구현			④
2003-2007년	문화 소외계층 지원	지역균형 발전	문화콘텐츠 역할 강화	⑤
2008-2012년	문화 이용권 확대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⑥
2013-2016년	문화 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 융합	⑦
2017년 현재	생활 속 문화 기회 확대	4차 산업시대와 문화콘텐츠 산업 재도약		⑧

Q15. 귀하께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문화정책에 추가해야 할 세부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이 가장 높은 과제는 7점, 필요성이 가장 낮은 과제는 1점 등으로 평가해주십시오. 보기에 없는 경우 기타 의견에 추가 기입해주십시오.

	구분	←필요성 낮음		보통		필요성 높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1)	해양문화정책의 청사진과 로드맵 구축							
2)	해양문화정책 관련 기본법 제정							
3)	해양문화정책 추진 전담 부서 구성							
4)	해양문화자원 조사·분류 및 DB 구축							
5)	해양문화예술 선도 전문 인력양성							
6)	해양문화 관련 홍보 사업 (해양문화의 날 지정, 해양문화도시·지구 지정, 국민의 해양문화 향유지수 개발)							
7)	해양문화 관련 컨텐츠 개발 지원 (해양문화시설·축제에 활용될 해양성을 띤 소재 개발, 해양문화 공연·문화콘텐츠[영화·음악·방송·게임·만화·캐릭터] 개발)							
8)	생활 속 해양문화공간 조성 및 해양레저동호회 활성화							
9)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 협의체 구축							
10)	해양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 (관광상품화 확대, 전승사업 강화)							
11)	전통 해양문화 생활양식의 보존과 육성 (진흥센터, 홍보사업 지원 등)							

⑫ 기타 의견: _____

Q16. 그 밖에 해양문화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_____

_____

DQ1. 마지막으로 상품권을 받으실 휴대폰 연락처나(모바일 상품권) e-mail 주소(e-mail 상품권)를 적어주시면, 소정의 상품권을 조사 종료 후 보내드리겠습니다.

( )

부록2. ‘해양문화’에 대한 이미지 구분

〈부록 표 1〉 ‘해양문화’ 에 대한 이미지 (레저관광)

구분	응답 수	비율(%)
(해양)경관, (해양)관광, 해양관광단지	10	10.87
(해양)레저, 해양레저문화, 해양레저스포츠	6	6.52
바다축제, 해양도시 축제	2	2.17
휴식, 휴양	2	2.17
크루즈	2	2.17
소계	22	23.91

〈부록 표 2〉 ‘해양문화’ 에 대한 이미지 (공간)

구분	응답 수	비율(%)
바다, 바닷길, 대양, maritime	5	5.43
섬, 섬 관련 설화, 섬문화, 도서(지역)문화	4	4.35
해양문화공간, 해양박물관	2	2.17
부산	2	2.17
해양도시 문화	1	1.09
해변공원	1	1.09
장소성	1	1.09
연안	1	1.09
항만	1	1.09
소계	18	19.57

〈부록 표 3〉 '해양문화' 에 대한 이미지 (수산·어업)

구분	응답 수	비율(%)
해녀, 해녀 체험	5	5.43
어촌, 어촌경관, 어촌문화체험, 어촌생활사	5	5.43
소금, 수산물 채취, 어족 자원, 해산물·먹을거리의 역사	4	4.35
어업, 어업문화, 어업인의 생활문화	3	3.26
소계	17	18.47

〈부록 표 4〉 '해양문화' 에 대한 이미지 (역사·유산)

구분	응답 수	비율(%)
해양(진출)역사, (해양)무역	5	5.43
해양(문화)유산, 해안 관방유적, 전통적인 해양문화 자원, 해양전통문화	5	5.43
(해양)문명교류, 문화교류	3	3.26
이사부, 장보고	2	2.17
소계	15	16.29

〈부록 표 5〉 '해양문화' 에 대한 이미지 (콘텐츠)

구분	응답 수	비율(%)
지역문화 컨텐츠, 바다를 문화로 한 문화 컨텐츠, 해양기후에 따른 문화컨텐츠	3	3.26
해양인문학, 해양문학, 해양철학	3	3.26
해양과학기술	1	1.09
해양생태	1	1.09
소계	8	8.69

〈부록 표 6〉 '해양문화' 에 대한 이미지 (상징)

구분	응답 수	비율(%)
항해	1	1.09
등대	1	1.09
용왕	1	1.09
사람	1	1.09
비상	1	1.09
소계	5	5.43

〈부록 표 7〉 '해양문화' 에 대한 이미지 (개념)

구분	응답 수	비율(%)
해양이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 특성	1	1.09
바다사람들의 인식·정서, 해양이 바다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2	2.17
도서해양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 도서해양문화의 정체성	2	2.17
자연환경으로서의 해양과 연관된 사람들의 행위적 특성, 바다를 활용한 문화적 관습	2	2.17
소계	7	7.6

해양문화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인 쇄	2017년 9월 30일 인쇄
• 발 행	2017년 9월 30일 발행
• 발 행 인	양 창 호
• 발 행 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연 락 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 조판·인쇄	공감 (070-4407-6252)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 - 0337

정가 6,000원